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모심과
살림

7호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

성장위기 시대,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한살림선언
‘한’ 사람 주체성과 ‘나’들의 공동체

협동조합,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주체

총선 이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죽음의 자율성과 생명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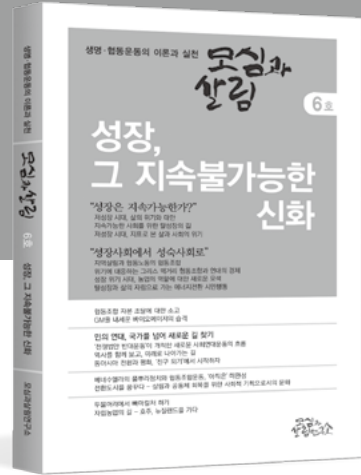
싸와디카 마렌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

모심과
살림연구소

1년에 두 차례, ‘전환’을 위한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담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모심과 살림**

- 모심과 살림 6호 성장, 그 지속불가능한 신화
- 모심과 살림 5호 ‘청년’은 있다
- 모심과 살림 4호 ‘나’를 살리는 공동체
- 모심과 살림 3호 무위당과 새로운 사회운동
- 모심과 살림 2호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 모심과 살림 1호 전환기의 사회운동,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 모심과 살림 0호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1~6호는 각 5천원, 0호는 3천원입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발간 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년 1만5천원 (※학생·무직자는 1만원)

2년 3만원 (※학생·무직자는 2만원)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회원이 되어 주세요.

후원회원·자료회원 분들께는

『모심과 살림』을 포함해 연구소 간행물을 보내드리며,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02-6931-3604 <http://mosim.or.kr>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모심과 살림

7호

저성장 시대, 두려움으로 적응하기보다는 탈성장이라는 방향으로 맞이하자

지난 6호에서 성장이라는 신화에 의문을 던졌다면 7호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다룬다. 저성장의 징후는 성장이 지속불가능함을 경고하지만 이미 신화가 되어버린 성장담론을 벗어나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난 호에서는 익숙함에 던지는 물음으로부터 현실을 직면하고자 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세르주 라투슈가 “지속가능한 탈성장의 길은 의식의 탈식민지화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듯, 저성장 시대를 두려움으로 적응하기보다는 탈성장이라는 방향키를 가지고 맞이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너와 나의 살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여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특집의 주제로 삼았다.

그런데 운동이란 사람의 일인지라 수학문제 풀 듯 X축과 Y축이 있어 그 두 축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없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함께 걸어 길이 되듯,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어디로 갈 것인지 함께 물어보기로 하였다. 이런 취지로 ‘탈성장과 살림운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편집위원회 좌담을 개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살림운동을 돌아보며 그것을 새롭게 하고 다른 만남을 통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러한 전망하에 우선 ‘성장위기 시대,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에서 살림운동으로 성장위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제안을 담았다. 그 다음은 철학, 역사, 지역,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엮어 나간다. 김신양의 글에서는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한살림운동의 탄생철학이 된 한살림선언을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살림 30년을 돌아보며'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으로서의 한살림 30년을 돌아보았다. '지역살림운동: 새로운 살림운동의 전망'에서는 살림이 지역과 만나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현장을 짚어보았고, 마지막 글은 '살림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사람'에 주목하여 '나'로부터 시작하는 살림운동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슈는 그야말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식탁의 점령군 유전자조작 식품의 공격을 막아낼 시민운동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먹거리 위기, 생태 위기,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기구의 정책을 허남혁의 설명으로 소개한다. 마지막 '총선 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이슈가 되어야 했으나 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되짚어보았다.

지난 호에 이어 특별기고는 해외 전문가의 글을 소개한다. '협동조합,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주체'라는 주제로 에릭 비데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정 속에서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해준다.

자유기고 '마트문명 넘어서기'에서 저자는 마트가 이미 문명이 된 사회의 변화를 체감하게 해주며, 죽음의 자율성과 생명에 대한 고찰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사회적 의미를 고루 짚어주며 죽음 또한 생명활동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

함께 읽기는 새로운 독자와 만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달리하여 서평이 아니라 책을 통해 들여다 본 삶을 이야기하고 성찰하고자 했다.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후쿠시마 사람들'에서는 성장 신화의 희생이 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살림을 지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짜와디카 마렌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에서는 우리 살림의 동반자가 된 이주노동자와의 함께살기 사례를 소개한다.

저성장을 탈성장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각오는 어떠해야 할까? 『토지』의 서문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유기적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06732)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http://mosim.or.kr> mosim@hansalim.or.kr 02-6931-3604

모심과 살림 7호

등록번호 서초, 사00065

발 행 인 황도근

편집위원장 김신양

편집위원 김용우 김현우 정규호 주요섭 허남혁

편 집 김현

디 자 인 디자인 이인

펴 낸 날 2016년 6월 22일

펴 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 책값은 8천원입니다.

차례

002 펴내는 글 · 김신양

특집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

008 [좌담] 탈성장시대,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묻다 · 편집부

031 성장위기 시대,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 정규호

047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한살림선언 · 김신양

062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살림 30년을 돌아보며 · 김성희

078 지역살림운동: 새로운 살림운동의 전망 · 장원봉

090 '한' 사람 주체성과 '나'들의 공동체 · 주요섭

이슈

107 GM 식품임을 알고 선택할 권리 · 박지호

120 먹거리와 인권 :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 · 허남혁

142 총선 이후 :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김은희

특별기고

151 협동조합,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주체 · 에릭 비테

자유기고

163 마트문명 넘어서기 · 신승철

176 죽음의 자율성과 생명에 대한 고찰 · 나준식

함께읽기

196 생명이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 · 황도근

204 '나'는 없고 '노동'만 있던 무력감 · 기호철

209 무너지지 않는 일상의 중요성 · 주수원

바라보다

214 씨앗 · 이자연

현장의 소리

218 활동 그리고 먹거리 · 김향식

살림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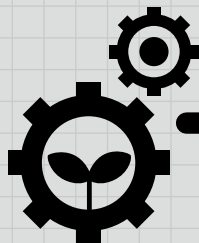
222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후쿠시마 사람들 · 김현우

230 싸와디카 마렌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 · 이대경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



- 008 [좌담] 탈성장시대,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묻다 • 편집부
- 031 성장위기 시대,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 정규호
- 047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한살림선언 • 김신양
- 062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살림 30년을 돌아보며 • 김성희
- 078 지역살림운동: 새로운 살림운동의 전망 • 장원봉
- 090 '한' 사람 주체성과 '나'들의 공동체 • 주요섭



[좌담] 탈성장시대, 살림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묻다

김신양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용우 (원주 한알마을 이사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주요섭 (한살림연수원 사무처장)

하만조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장)

이 글은 지난 4월, 『모심과 살림』 편집위원회에서 ‘탈성장과 살림운동’이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6호에서 ‘성장, 그 지속불가능한 신화’라는 주제로 저성장국면에 들어선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시대인식과 그에 따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탈성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우리 삶의 전환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살림 30주년과 접목하여 보다 넓은 지평에서 한살림운동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편집위원회 구성원들은 각각의 ‘한살림 경험치’와 활동의 장이 다르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살림운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한살림선언에서 보여진 한살림 정신을 새로이 하고 그 운동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같이했다. 또한 그 성찰의 과정이 한국 사회의 다른 부문이나 지역운동과의 접점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는 점에도 공동의 지향이 있었다.

특정한 이슈 중심으로 진행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을 드러내다보니 논의가 다소 산만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 대략 다음의 화두가 던져졌다.

1. 한살림운동의 확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이 운동이 제기되었던 시대에 가졌던 새로움(불온함?)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재창조될 수 있을까?
2. 살림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주체의 조직인데, 집단의 필요의 충족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열망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프로그램)이 있었던가?
3. 거대해진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관성화되고 공동체적 관계성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활동가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4.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경직된 운동이 아니라 상상력을 펼치며 틀 속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5. 지역사회 안에서 생산(자)과 소비(자)가 순환되고, 자율과 자치의 원리가 확립된 지역 간 네트워크로서 큰 살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래 내용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결책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이 활성화될 때 함께 찾아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질문을 공유하고자 한다.

“불온_{不穩}하지만 불온_{不溫}하지 않은 운동으로”

주요섭 > 현실적인 운동 목표를 봐서는 이런 평가가 필요한 것 같다. 30년 전에 했던 선배들의 작업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했다기보다는 선각자들의 깊은 사색과 자각 속에서 서유럽 소비협동조합운동의 한계와 대안을 관찰하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

다고 생각된다. 작년에 중국 상해에 가보니 이제 막 도농직거래, 대안교육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산업화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욕구와 열망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한살림 역시 산업화 혹은 경제성장과 궤를 함께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다만 시선이 더 멀리 있었다는 것이다. 통찰력이 있었다고 할까.

그러나 오늘의 한살림을 보면 오히려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손가락은 먼 곳을 가리키고 있으나 물질적 욕구와 권리의식 등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퇴행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사춘기를 겪지 않은 청년의 방향 같은 느낌이다. 실천적으로 보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원래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지점의 실천이 구체화되고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살림 밖을 보면 그런 흐름들이 적지 않다. 한살림 영향일 수도 있고 자각도 있을 텐데, 여러 형태의 공동체운동, 전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김신양 > 한살림 조직은 30년밖에 안 된 청년이지만 활동의 주역들은 다 나이 드신 분이였다. 이걸 중요한 문제다. 현재도 운동의 주체가 중장년층이다. 그래서 조직의 사이클로 봤을 땐 30살 청년기인데 그것을 주체적으로 한 사람들은 중장년층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에 치고나가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활기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노선은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져야 가능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활기를 띠기 어려울 것 같다.

살림운동 측면에서, 멀리 손을 가리키건 아니건, 운동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을 이끌 사람이다. 그 정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 핵심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80, 90년대까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주체가 있었다. 지역 한살림의 경우도 학습모임을 중심으로 설립되어왔었다. 그런데 90년대 중

반 이후,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운동 주체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새로운 운동노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허남혁 > 일본 생협운동이 더 그렇다. 68세대들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보충이 안 되고 그대로 늙어간다.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갱신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고 있는가. 지역재단이 10~12년 됐는데 그동안 지역리더를 애기하면서 청년 리더, 대학생그룹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가치를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농판’의 특성이다. 젊은이들은 농업과 상관없는 그룹이라는 인식이 있다.

김현우 > ‘농판’만은 아닌 것 같고 이른바 사회운동판이 다 그렇다. 노조나 정당도. 노조는 신생노조가 계속 생기고 깨지면서 100명 중 10명이 남아서 힘들게나마 신규 역량으로 충원되는 방식이 있는데, 정당은 특정 학교조직에 인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생산 구조가 없다. 청년세대와 접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민중연합당과 녹색당 경우가 청년세대와 어느 정도 접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불을 당기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기성 정치권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청년담론 소비 정도일 뿐이다.

작년부터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불온함’이다. 온순·온건하지 않다는 것인데, 한살림이 80년대 말에 가졌던 불온함이 있었던 것 같고, 90년대에 다른 노조운동, 정당운동, 환경운동이 제도화되면서 한살림은 꾸준히 길을 걸어갔지만 상대적으로 불온함이 잊히거나 희석된 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80년대 중후반에 가졌던 불온함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특성도 있고 또 그것에서 기인한 한계도 있었

을 것 같다. 그것으로 다시 전환하자고 하면 당위론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원리나 구조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 요소와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온 경험, 인적자원 등을 한살림(생협)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접촉할 수 있는 외부 충격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한살림운동을 다시 불온하게 하면서도 한살림에 제한되지 않는 살림운동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좌표를 묻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물었으면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좌표가 무엇이라는 게 나와야 할 것 같다.

김용우 > ‘불온(不穩)’이라는 말을 써서 생각난 것은, 당시 불온한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체제저항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살림운동이 체제에 저항하는 거였느냐? 나는 문명에 저항한 것이라 본다. 차가운 문명을 따뜻한 문명으로 바꾸자, ‘불온(不溫)’한 게 아니라 따뜻한 운동인데, 이것이 오히려 청년을 끌어안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따뜻한 운동이 청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생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적대적인 공생운동을 청년과의 공생운동으로 끌고 가는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즉 청년들에게 ‘자본과 국가 또는 국가정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각성을 통해 협동과 공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근대 가치와 연결해서 얘기하면, ‘우애’라는 측면이 자본과 국가에 대적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연대로 시작됐지만 노농연대로 확장된 것은 1900년대, 그리고 근대문명을 뛰어넘기 위한 범시민연대로 발전한 것은 100년이 넘게 걸렸다. 적대적 연대에서 비적대적 연대로 넘어가는 담론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지구가 하나다, 환경과 생명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작된 운동이다. 누가 있어서 혹은 누굴 넘어뜨리기 위해 연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연대한다는 것. 이 측면에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비적대적 연대로의 전환 지점을 생명운동의 시작으로 본다. 비적대적 연대라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함으로써, 또는 상대방의 잘못에 근거해서 자기의 정당성이나 존재 의의를 찾는 운동이 아니고, 자기가 속한 현실문명의 과제를 성찰하고 자기문제화 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재창조, 확장해나가는 연대의 길이다. 인류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살림에서, 살림운동에서 비적대적 연대로서 재창조, 확장에 대한 담론과 이론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정규호 > 지금 20~30대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는 그들의 부모세대, 즉 기성세대가 살아온 환경과 조건,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기성세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젊을 때 학생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많은데, 80년대 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불온함은 거세되고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자리 잡았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90년대 말 IMF의 충격이 상당히 컸는데, 어느 순간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당면하는 삶에 대한 불안감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전달되고, 청년들의 삶과 대학생들의 학교문화까지 바꿔 놓았다. 오늘날 청년과 함께 공생의 길을 찾아가려면 이런 시대적 흐름들을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

“성장이 아니라 확장의 시선으로 보자”

김신양 > 좌담의 주제를 탈성장과 살림운동이라고 잡았는데, 말씀하신 80년대 원주보고서나 한살림선언에서 제기되었던 것이 생명의 관점으로 사회운동을 전환하자는 거였다. 그 구체적 실현으로 협동적 생존의 확장

을 위해 생협을 만들고 공동체적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그걸 평가하는 데서 논의를 출발할 것인지. 그 진단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

김용우 > 생명운동, 살림운동은 성장경제 시대, 근대경제에서 발아되고 시작되었다. 30년 전 이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하자는 게 한살림선언의 핵심이고 생명운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 성장이 종언을 고하는 국면에 와 있다.

경쟁과 성장 시대에 살림운동이 지향했던 것은 도농상생, 일원론적 철학,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협동과 조화, 공동체, 유기농 담론 등이었다. 그 사이 생명운동은 생명평화운동, 생명교육운동, 대안에너지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으로 확장되어왔다. 그렇지만 아직 위력적으로 문명재창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국면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운동의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보다 능동적인 전망과 비전 수립이 요구된다.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생명운동 확장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또 질적 비약을 위한, 문명 전환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환경운동이 반공해운동으로 시작해 상당히 많은 영역으로 확장 분화해온 것처럼 생명평화운동도 확장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동운동에서는 협동조합법 영향도 있지만 생협운동이 확장해온 측면이 있고 지역공동체운동도 90년대에 비해 확장돼왔다. 일반화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확장'이다. 또한 다양한 문명전환의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안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고, 각 분야에서 근대문명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라는 것이 과연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로부터 그것을 넘어서면서 인간과 사회가 진화하는 대안인지, 일시적인 문제의식에 대응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 특히 문명의 질적 비약에

필수적인 인간의 영적 진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사회적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허남혁 > 농업이나 농산물유통 관점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논지를 풀어볼 수 있다. 운동과 사상으로서 시작했던 유기농업이 시장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면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생협들 사이의 경쟁, 마트와의 경쟁 등 생협이라는 사업체가 직면한 압박이 커져가는 속에서 1990~200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농업 역시 과거에 시작했던 유기농업운동이 지금은 얼마나 변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문할 때가 되었다. 인증을 위한 인증, 그 안에 생명적 가치를 정말 가지고 있는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해서 나온 새로운 담론인 저투입농업이나 로컬푸드운동 등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살림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다.

농업, 먹거리 유통, 사업적 관점까지 포함해서 두루 살펴보고,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겠다. 실제로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하만조 > 조합원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조합원 숫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연평균 2천여 명이, 2000년대에는 연평균 2만여 명이 새로 들어온다. 2011년 이후로는 한 해에만 5~6만 명씩 가입하고 있다. 2015년의 조합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수준이다.

늘어난 조합원만큼 사회와 한살림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조합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기대사항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가족 구성이나 연령, 소득 수준에서도 한살림과 사회 간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한살림 내부에서 소수였던 문화, 필요, 욕구 등이 커져가며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의 변화된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다보면 초창기에

수립한 정책과 방향, 원칙과 스타일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된다.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방법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대중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조합원이 될 일반 시민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한살림의 조합원 정책은, 물품을 예로 들면 30~40대 기혼 육아세대를 중심에 두고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20대, 비혼 또는 미혼, 아이가 없는 조합원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조합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그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비중이 높은 조합원을 우선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에 대한 탐구와 함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과의 접점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 옆에서 장을 보는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잠재적 조합원을 환영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의 사업활동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때다. 한살림이 사회 안에 있고 한국이라는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열망과 필요에 한살림만의 방식을 찾아서 부응하지 않으면 존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살림선언에서 대중운동을 표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성장의 시선으로는 현실의 정해진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세운 목표를 향한 확장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게 보인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농업살림, 밥상살림, 자급자치공동체 등은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변화된 현실에서 기존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단지 성과만 나열해서는 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다. 현재와 목표 사이에 현실적인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그래야 30년 전 문명전환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던 선배들의 미션을 공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호 > 한살림운동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다. 자본주의든 현대산업 사회든 죽음의 문명이든 한살림은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 그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합원을 비롯해 한살림운동 하는 사람들 모두 사회 현실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한살림운동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해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자는 것이다.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서 연꽃을 피워낸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대중운동의 노선은 중요한데, 그렇다고 대중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극하고 만들어내는 대중의 욕망을 잘 읽어내되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서자는 데 한살림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현실에서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일을 잘 해내기란 쉽지 않다. 한살림 내부에도 인식체계의 변화들이 존재한다. 조합원의식조사를 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생산자와 함께하는 가치에 공감해서 한살림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종 먹거리 오염 및 사고들 속에서 먹거리의 안전처로서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을 선택하는 분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롭게 한살림을 찾는 조합원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바쁘게 달려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로서 마음을 잘 읽어내되, 수입유기농산물을 소비하지 않고 우리의 땅과 물, 생태계가 건강하고 농민들의 생계가 유지 가능해서 농업이 살아나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대중운동으로서 한살림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

“외적 필요와 함께 꿈틀거리는 내적 열망을 응시하자” “살림운동은 계몽이 아닌 상상력으로 접근해야”

주요섭 > 대중노선에 대해서는 전략·개념으로서 ‘한 사람’ 노선을 토론하고 싶다. 목표점은 같을 수 있다. 또한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부정적인 의미의 욕망일까, 아니면 욕구라고 봐야 될까.

협동조합의 사명은 필요와 열망의 충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에 대해서는 서베이(survey) 하고 있고 물건 가짓수도 늘려왔지만 열망에는 얼마나 주목했는가? 심층인터뷰를 해왔나? 문제는 초기에 몇몇 사람이 만든 원칙과 대중적 요구의 충돌이 아니라 ‘외적 필요와 내적 열망의 실현을 어떻게 함께 잘 바라볼 것인가’이다.

한살림운동 초기 선배들이 제시한 열망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활동하는 각자의 내면에서는 어떤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응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공동체나 순수증여, 절대자유 등에 대한 열망이 희미하지만 아련한 그리움처럼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그리움을 자극한 게 무위당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계산 없는 협동’을 얘기하고, 그러나 계산 있는 협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계산 없는 협동을 잊지 마라.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열망도 휩쓸린다. 내 욕망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한계 때문에 휩쓸리는 욕망을 수용할 수 있으나, 열망이 없는 필요의 충족만이라면 마트로 가야 한다. 그게 조합원들 가슴속에 숨 쉬고 있게 할 수 없다면. 적더라도 발견하고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신양 > 탈성장과 살림운동 측면에 좀 더 집중해보는다면, 한살림운동의 처음 시작은 탈성장운동이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불온했었다. 80년대 당시 저항운동이 한쪽으로는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그 개발독재

가 성장주의의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 죽음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다. 개발을 계속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싸게 써야 했고, 대량생산을 해야 했고, 농약을 치게 하면서 죽음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한살림운동이 농약을 거부하고 유기농업, 생명농업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그 자체가 탈성장의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그때는 탈성장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반개발독재운동이라는 것이 거리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유기농 등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저항운동의 형태가 살림운동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큰 두 가지 운동이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은 같지만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림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살림운동이라고 해서 경제주의나 조합주의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김현우 > 지난해 연구소에서 가진 콜로키움에서도 ‘한살림 문화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앤디 메리필드는 그의 책 ‘마술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똑똑한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왜 인기가 없어졌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에 드러나는 판타지의 측면, 이런 마술적 상징운동을 놓쳤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운동에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진 않았는데 공식 마르크스주의가 이걸 억눌렀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예컨대 살림운동도 살림의 논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몽을 해야 되고, 이렇게만 접근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한살림을 잘 상징해주던 밥 한 그릇의 그림, 이철수 화백의 판화 같은 것들, 마술적인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무얼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용우 > (한살림운동에서도) 필요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확장돼 왔다. 그러나 열망의 재조직화는 없었거나 적었다고 본다.

그런데 한살림운동은 한편으로 열망의 새로운 측면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열망의 두 측면 중 하나가 영성적 측면으로서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있어온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합리적으로 어떤 사회로 가고자 한다는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열망이다. 이 열망의 두 측면을 어떻게 재창조, 혹은 확대·재조직할 것인가를 보면, 한살림운동이나 한국 생명운동에 있어서 필요는 지나치게 농산물 직거래라는 지점으로 협소화되었으면서도 그 지점이 확장돼버렸다. 반면 열망의 재조직화 측면은 사회적 대안이라는 데 너무 매몰되어 인류의 근원 속에서 존재해온 공동체적 열망, 영성에 대한 자극이 지나치게 부족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주요섭 > 열망은 물질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한살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인데, 사이좋은 관계, 행복한 조직문화, 살아있는 조직시스템 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섬세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초기 협동촌 등 실험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 규칙, 워크숍을 통한 자기 변화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거룩한 구호가 있지만 실제로 현실화, 물질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는 괴리가 생겨났다. 그 점이 안타깝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생명의 보편성을 고려해 가톨릭이나 불교 등 보편 종교의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생명운동의 연대 개념은 계급투쟁론에서 이야기하는 연대와는 다르지만 가톨릭의 형제자매애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과는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생명운동의 독특함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생명’을 화두로 하는 보편적 사유와 경험, 노하우에도 주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김신양 >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명운동이든 생명협동운동이든 핵심은 생명이 빛나는 것이고 생존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모

여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만약 생계 문제가 있으면 생명이 영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빛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한살림에서 동학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기독교사회주의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일본 생협 영향도 받았지만 초기에 이념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사회주의가 많이 있었다. 유토피안 사회주의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모든 이를 형제로 본다. 우리는 같은 형제니까 평등하다고 한다. 따라서 거기에 근대의 산물이라는 계층, 계급 같은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게 반생명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만드는 조직 안에서 임원과 실무자와 활동가가 각각 있는데, 모든 사람의 권한이 평등하지 않고 급여나 결정권에도 차이가 있다. 모신다고 하지만 실무노동자를 두면서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노동 조건에서 일하게 하는지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 모시고 다 형제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굳이 한살림 안에서 노동조합과 같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노동문제나 내부의 불평등 문제를 간과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교회에서 모든 형제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목사를 떠받들고 교주화 하는 데가 많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존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권위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운동이라고 얘기했던 데 대해서 좀 더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김용우 > 다른 시선으로 얘기하면, 근대사회라는 것은 소공동체(communitiy)의 네트워크(그물)로서 사회와 커뮤니티 해체와 개인중심의 연결, 개인들의 결사(association)로서의 사회인데, 둘은 다른 거다. 한살림도 초기에는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소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 시작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그전에는 없었던 노동 문제가 생겼다. 공동체 자기

고용 노동(Community Self-employee)과 활동에서 개별화되고 사회화됨으로써 비교되는 노동으로 변화한 것이다. 말 그대로 형제, 공동체였는데, 커뮤니티들의 네트워크시대가 아니라 성장 중심의 물류연합이 되면서 공동체를 전면 해체하고 매장과 개별배송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한살림 공동체가 해체되고 한살림 사회가 된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의식은 공동체 네트워크시대에 계속 있고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순이 문제가 된 거다. 실제로 한살림이 앞으로 다시 재구축하는 방향에 있어 이 지점에서 쟁점이 생긴다. 계속 현대사회의 개인에 기초한 체제로 갈 건가, 다양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 재편해 갈 건가. 전혀 다른 과제다.

주요섭 > 현재의 한살림생협시스템과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는 매우 다르다. 필요의 충족이든 열망의 실현이든 그 실현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다른 모양의 실현태들이 중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할 것이다.

한살림의 경우 규모, 범위, 시스템 등에 대한 선택의 시기가 있었다고 본다. 생-소 직거래는 폐쇄적 호혜시스템인데, 그것을 공급하는 방식은 매매 시스템이고 이것이 중첩된 게 현재의 한살림의 생산-소비 사업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최선인가, 최적인가 하는 것은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가야 하는지...

김용우 > 커뮤니티시대에는 비적대적 노동, 상생적 노동인데 소사이어티 시대로 넘어오면 내부적 적대화가 진행된다. 동일노동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범주가 달라진 것이다. 조합원노동이라고 이름 짓는 활동가노동과 실무자노동 간의 갈등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본다. 탈성장시대를 얘기하면서 커뮤니티 운동으로 방향을 새로 잡는다고 하면 노동은 커뮤니티에 맞는 공동체적 노동으로 가야 한다. 공동체의 자기고용(self-employment)

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사이어티 상황에서 부딪히는 노동의 균질성, 평균화, 형평성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어느 방향을 택할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신양 > 남미의 민중경제도 주요한 특징은 고용-피고용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에 대한 인식 이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자체가 사회적 관계로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그 안에 고용-피고용 관계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노동법을 준수한다. 사회성, 공동체성을 유지한다는 것과 사회 제도로서 노동법을 따르는 문제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분배는 충분히 공동체적인가?”

김용우 >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살림운동이 왜곡된 측면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점이 가공의 비대화이다. 농업살림은 공동체적인데 가공은 사적私的이다. 농업생산의 공동체성에 비해서 가공이 사적으로 가면서 부가가치가 중간에 증발해버린다. 한살림 내에서 상당한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량과 면적은 크게 늘지 않는데 한살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사적소유에 의한 가공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가 붙는 것이다. 이게 한살림의 성장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적 성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전형적 사례라고 본다. 앞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소사이어티 내에서 모순을 회복하려면 한살림운동에 맞는 가공 정책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사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미 몇몇 가공업체들은 거대화돼서 중소기업 수준이 되었다. 한살림운동에서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김신양 > 이와미 다카시가 ‘제3세대 협동운동’의 주요 특성이자 과제로 첫째 직접 참여, 둘째 생산과 생활의 결합(크래프트craft), 세 번째로 적절한 기술을 활용한 생명농업을 들고 있다. 유기농을 하면서 그것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규모로 가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김용우 > 농업 분야에서의 모순은 크래프트를 같이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생산물은 유기농인데 생산방법은 자본주의적 영농방식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공동체로, 농민은 1차농산물을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저투입농업이어야 하는데 고투입농업이 되었고, 대농에게 많은 부를 주는 등 내부적 모순을 만들어 냈다고 본다. 여전히 살림운동의 지향이 어디인가가 분명해야 한다. 공동체라고 한다면 일정한 균형, 평등논리를 넘어 ‘형평’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그 가치와 논리를 살림운동 내에 정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살림 초기에는 커뮤니티들 간의 활동이었다, 자본도 조합원들이 만든 것이고 착취하는 사람이 없었다. 생산된 부를 동일하게 나눴다. 균형 있게. 지금은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 농촌에서는 대농 대 소농, 가공 대 농민, 노동에서는 실무자-활동가 등 분화들이 생겨버렸다.

주요섭 > 한살림선언에서도 생명의 본질은 정신이라고 한다. 그것이 한살림을 가장 불온하게 만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의 정신성이 한살림선언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선포된 것이다. 내 나뭇의 영혼의 결핍이나 열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거나 없었다.

좌표를 새롭게 제시한다면 정신성을 얘기하더라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정신성이어야 한다. 정신성의 구현을 한살림선언에서는 세 가지로 든다. 첫째 수양활동으로써 자기발견, 자기성장, 자기실현, 나아가 자기초

월로 표현되는 활동, 둘째 생활문화활동으로서 공동체문화, 인간관계, 생활협동 등으로 구현되는 활동, 그리고 셋째로 사회의 전환을 위한 사회실천활동이 그것이다.

지나온 30년 동안 공동체도 약화됐지만 ‘나’도 별로 없었다. 나의 성장, 나의 삶이 부족했다. 공동체가 약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로만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두 체계, 중심축이 있었고, 그걸 사회화시키는 데도 부족함이 많았다. 예를 들어 생산소비약정 시스템을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역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 안의 폐쇄적 구조 안에서의 생-소 약정시스템은 잘 지쳐왔다.

그런데 초기에는 시장시스템이나 계획시스템과 구별되는 제3의 시스템으로써 협의경제 개념 등을 중심으로 매우 급진적인 비자본주의의 길을 실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생-소 공동체를 실현하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전략이라고나 할까. 그것의 한국적 형태가 매장의 시장경제와 생-소 약정의 협의경제와의 결합이었던 것 같다. 한살림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에는 공급소를 매장으로 전환한 것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런 시도와 더불어 이론적 작업이 병행되고 다른 사회적경제 영역 등과 함께 연대하고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하고자 했던 꿈, 자본주의적 관계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확장시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방향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본다. 표현은 바뀌었지만.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고 중심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제는 무게중심을 한 사람에게 맞춰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가공 영역에서는 일탈이 벌어지고 있다. 과도하게 부가 집중되면서 내부 생산자 안에서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그 부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이게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적 관계로 이루어진 게 초기에 많이 생성됐고 그것이 협동적 규율로 통제 관리가 안 된 것이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사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들이 고생한 거다, 물품을 대느라. 일정 정도 크고 나니 사유화시켜버린 것이다. 공동체, 한살림 전체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다.

김용우 > 열망(aspiration)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인스퍼레이션(inspiration(영적감성 또는 신성))이다. 생명운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부 제어력을 가지려면 열망이 내 안에서 영감과 창조적 열정으로 샘 솟아야 하는데, 영적감성이 없는 열망은 순간적이다. 영적감성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게 통합성이다. 동화에 머물러서는 통합이 안 된다. 다양한 종교를 아우르는 영적감성의 통합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얘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ICA의 협동조합 원칙과 개념에 동의하지만 또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열망에 대한 것이다.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샘솟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다. 영적감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재화되는가의 문제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열망을 오히려 고갈시켜버렸다. 없는 열망, 고갈된 열망을 조직하려고 애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통합하고 공유해야 한다. 일례로 ‘생명평화결사’는 어떻게든 탁발순례운동의 결과로 자신들의 ‘생명평화경’을 만들었다. 다양한 종교성의 통합으로서. 한살림은 새롭게 뭔가 정리해야 한다. 내부에 흐르는 그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제2의 한살림선언을 하든 사회적 영성을 통합(integration)하는 그 무엇을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

정규호 > 지난 30년 동안의 무게만큼 한살림이 일궈낸 성과와 함께 과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한살림이 표방하고 실천해 온 어떤 기조나 정신에 대한 것이다. 한살림운동은 시대를 내다본 통찰력과 선도적인 실천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그런 기백과 담대함,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불온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현실 과제에 맞춰져 있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류에 편승하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더구나 지금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잘 해왔던 부분도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운동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탈성장이 담고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운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김용우 > 최근 읽은 진화론에서, 다섯 명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그루밍grooming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이게 세 배수로 늘어나서 15명, 50명, 150명으로, 이게 최근 인류진화를 연구한 책들에 나온 내용이다. 군대도 150명 중대까지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 안다고 한다. 유대관계가 있고. 마을공동체도 전 세계를 조사했는데 15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대체로 500명을 넘는 마을공동체가 드물었다고 한다. 그것의 기본단위가 가족공동체였다고 하는데, 이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나라라는 것이 (의사소통과 그루밍, 돌봄의 수준이 가능한 범위가 150~500명이라고 할 때) 그것들의 네트워크일 것이라는 점이다. 저성장이라는 것은 근대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볼 때, 탈근대적 가족공동체, 최소공동체운동으로서의 가족공동체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진화와 장기지속성, 확산성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0과 1 사이 무수한 선택지를 만드는 운동”

김신양 > 모멘텀momentum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했으면 한다. 여

러 과제가 나왔지만, 모멘텀이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용우 > 한살림의 활동가 또는 임원이 되는 데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리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한살림의 공동체문화와 공동체민주주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살림 논의수준이 보편화되고 성숙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어설픈 직접민주주의로는 어렵다. 목적의식적 운동, 가치지향이 있는 한살림운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가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운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섭 > 좌표가 눈에 보여야 한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예전과 다른 방향이. 30년 전에는 몇 가지 얘기가 있었다. 생협, 유기농산물, 직거래 등. 한살림선언 하면서 수양 얘기도 나왔다. 지금 얘기 흐름으로 보자면 ‘다시 공동체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인간이 되자’, 또는 사회적 영성, 더 깊어진 영성을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꼭 합의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다. 서로 동의하고 공감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

정규호 > 관련해서 생명운동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생명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데, 추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명운동이라면 그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생명의 세계관을 갖고 협동적 방식으로 실천하는 살림운동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정체성이 아닌가. 그 점에서 그동안 먹거리에 제한되어 있던 살림운동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서 조합원들의 삶, 생산자들의 삶,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성장시대엔 국가나 시장 어느 곳에도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없다. 결국 당사자 스스로 생존의 힘을 길러내야 하는데, 혼자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적인 방식을 통해 교육, 먹거리, 돌봄, 에너지 등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살림운동이 필요하고, 한살림도 다양한 살림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용우 > 근대적 주체는 허구다. 주체는 태어나서 형성된 에고ego의 일부이다. 이 용어를 살림운동에서는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공변될 공公’을 ‘함께 공共’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의도적으로 공동체적 주인공主人共, 개인적 주체를 넘어서는, 서로 의지해 존재하고, 자기비움의 능동성을 발휘하는 주인공主人空, 영적감성에 입각한 열망을 발현하는 그런 존재가 한살림운동을 끌고 가는 사람일 것이다.

김현우 > 대중운동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좌표도 공허할 것 같고 설득력도 낮을 것 같다. 이게 허공에서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소사이어티를 커뮤니티로 복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전환마을처럼 전환의 커뮤니티 같은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살림운동이라는 것은 전환의 커뮤니티를 재건 또는 구축하는 운동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살림생협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 한살림의 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뿐더러 한살림 조합원이나 자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환의 커뮤니티를 할 수 있고 해야 될 거다. “이런 저성장시대에. 한살림은 이러저러한 영역을 제시할 테니, - 대안적 가족 공동체 복원까지 포함해서 - 그 외에도 여러 궁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조합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까지 포함해,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지 열어놓고 얘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만조 > 계속 고민되는 문제인데, ‘알파고 시대’에 기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 자본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쉽거나 천천히 가기, 자급을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적응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한살림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기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적응과 자급(자생) 사이 스펙트럼에 있을 것 같은데 다양성이 공존해야 하지 않을까. 물류, 생산방식 등에 있어서도.

김용우 > 생명운동이 발전된 기술을 버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이 개발한 고자산, 고가치가 농축된 기술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국가와 자본 수준에서 민초들의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는 고민이다. 기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게 우리 통제 밖에, (그 기술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와 자본의 수준에 있는 게 문제다. 퇴행적으로 살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1가구 2차량, 한 집에 컴퓨터 몇 대 있는 이런 생활구조와 기술문명의 사용체계가 맞는 것일까?

김현우 > 저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출시된 지 2년 정도 지난 것을 사서 쓰는데, 성능에 부족함이 없을뿐더러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소비양식을 취하면 아마 기업들이 난리가 날 것이다. 경제성장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이라고 비난받게 될지도 모른다. 성장 아니면 멸망, 그렇게 1과 0 사이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주류의 경제학이고 주류의 언론이다. 하지만 그런 중간의 선택지들이 많아질 때 사회에 숨통이 트이고 전환의 여러 아이디어와 시도들이 자연스레 분출할 것이다. 한살림이 해야 할 역할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성장위기 시대,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성장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성장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요즘 분위기를 보면 지금의 시대 상황을 ‘성장위기’로 진단하는 것이 별로 새롭지가 않다.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 언론, 학계와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성장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성장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성장의 어떤 측면이 문제인지, 그것을 왜 위기로 보는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일시적 경기침체(recession)가 아니라 위기(crisis)로 보는 배경에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성장하락, 침체 또는 불황의 국면이 어떤 특별한 충격적 사건이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 현실은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해 온 자본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주의 시장경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늪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오류에 대한 처방이나 오작동의 개선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장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부채상환 능력은 불확실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최근 하버드대 정치연구소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51%)이 미국 경제의 기반인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¹⁾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일으키는 돌풍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성장의 한계 상황을 맞아 증폭되면서 신뢰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보면,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이용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맞지가 않다. 인류 역사에서 경제성장률이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세기 이후의 일로, 그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1% 미만에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고속성장, 고도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 저성장 상태로 가는 지금의 상황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현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의 (경제)성장위기가 우리 삶과 밀접한 실질적인 위기들을 증폭·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성장의 위기는 변화된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 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성장주의 시대의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온통 시선이 ‘저성장으로부터의 빠른 탈출’에 쏠려 있다.

1) 〈연합뉴스〉 2016. 4. 30. 참조.

따라서 환경, 노동, 인권, 보건, 복지, 교육 등 중요한 의제들은 ‘성장 이후’로 밀려나고, 심지어 ‘경제살리기’ 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난 시절 개발국가의 성장주도 체제를 뒷받침한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익숙한 모습을 성장위기 시대에 새삼 확인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장의 위기가 실제 삶의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매우 부실하고 부족하다. 뿌리 깊은 ‘성장 중독(growth fetish)’ 증상이 새로운 변화를 읽어내는 눈을 퇴화시키고 사전예방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의 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위기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탱해 온 성장사회의 역할과 비중만큼 성장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충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정적 영향은 특히 사회·경제·생태적 약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장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일자리 상실은 생계와 생존 자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당연히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커지게 되고, 더욱 심화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경쟁으로 증폭되는 갈등과 불신은 사회적 불안과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혐오 범죄’ 등 익명의 대증을 향한 무차별적 분노 표출과 충동적 폭력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불안사회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낸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랑과 우애, 협동보다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법,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법부터 가르치게 된다.

삶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된다.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단기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진 처방책을 찾게 되고, 이런 분위기는 결국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게 만든다. 벌써부터 경기 침체와 삶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분노의 정치’가 미국과 필리핀의 대선 과정을 흔들고 남미와 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제

살리기'를 최고 덕목으로 삼아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를 선택했다.

성장의 위기는 생태적 위기를 더욱 부추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결국 생태계 파괴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었다. 성장의 위기 상황은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창출 및 소비 증대 논리의 명분을 강화시켜, 결국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기존의 보호장치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성장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자본의 생존 전략은 이런 위기적 상황을 더욱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위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큰 위협이 된다. '지역', '공동체', '가족', '생태', '친환경', '농업', '건강', '치유', '휴식' 등 삶의 대안적인 가치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은 돈벌이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의 입장에서조차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자 소비처이기 때문이다. 성장위기 시대가 가져다 줄 변화와 도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응 노력이 필요한 때다.

‘탈성장’으로 성장위기 ‘이후’를 준비하자

탈출 또는 전복을 꿈꾸는 사람들

성장의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성장 시대가 만들어 낸 부작용 자체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성장경제 체제를 지속하거나 연착륙시키는 데 대한 관심과 기대가 별로 없다.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출^{탈출}과 전복^{顛覆}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 수준이다. 21세기에 신계급론^(수저론)이 나오고, '이번 생은 망했다'면서 장차의 삶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자

신이 태어난 곳(사회 또는 국가)을 ‘지옥’으로 부르며 벗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이민계(移民契)가 유행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한국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국가로 삶의 터를 옮기기 위해 탈(脫)한국을 위한 목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국적(國籍) 포기자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국적 포기자가 2015년 기준 1,980명으로 매우 높은 데다 전년보다도 24% 증가했다. 귀화자보다 국적 포기자가 많은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가가 우리나라다. 올 1월 한 여론조사기관의 이민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10명 중 6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충격적인 답을 내놓기도 했다.²⁾

그런가 하면 올해 정초에 한 언론사에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붕괴와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³⁾ 과도한 경쟁과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여유, 정신적인 만족,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소통 등을 선택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비슷한 결과는 작년의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15년 2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주최의 토론회에서 한국인이 바라는 미래상에 대한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응답은 23%인 반면, ‘붕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응답은 42%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처럼 기존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지금은 성장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에 대한 준비 노력은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를 목적으로 한 정파적 갈등과 ‘낯

2)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자는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30.2% → 26.5%), ‘요즘 같아선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더(57.9% → 61.1%) 늘어났다. (〈세계일보〉 2016. 3. 27.)

3) 경향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아 진행한 2035년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붕괴와 새로운 시작’(46.4%), ‘계속성장 사회’(28.7%), ‘과학기술이 변화를 이끄는 사회’(16.6%), ‘자원보존사회’(8.4%) 순으로 답했다. (〈경향신문〉 2016. 1. 1.)

은' 성장전략에 매달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맞게 될 성장위기 상황이 가져다 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성장위기의 대안을 '탈성장'에서 찾자

지금의 성장위기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과 신흥 국가를 아우르는 세계 전체의 문제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위기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함께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위기 '이후'의 사회를 진지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성장의 위기 상황에서 대안적인 미래사회의 전망을 찾아가는 데 있어 '탈성장(脫成長)'을 주요 가치로 삼을 필요가 있다. 탈성장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강력하게 결합시킨 독특한 성장시스템을 만들어 온 우리나라가 큰 틀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데 있어 탈성장은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면한 성장위기 시대를 도파성 탈출이나 대안 없는 전복의 방식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탈성장은 기존 사회나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구출하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성장, 제로성장, 마이너스성장과 비교할 때 탈성장은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가 현상이나 경향을 말한다면 후자인 탈성장은 목표와 방향, 의지를 담고 있다. 탈성장은 '성장' 자체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가치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으로, 단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물론 탈성장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⁴⁾라는 보고

4)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로마클럽에서 1972년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는 당시와 같은 성장추세가 계속된다면 100

서가 발간되던 당시 탈성장 논의가 꽤 활발했다. 하지만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사회주의권 붕괴,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으로 탈성장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주춤했는데, 전 지구적인 생태위기와 함께 성장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탈성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탈성장이 가진 문제의식을 현실에서 구체화해내기 위해서는 깊이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탈성장 논의들 속에는 생태주의, 아나키즘, 풀뿌리, 공동체주의 등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만큼 지향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합의된 전망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도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탈성장론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성장 반대론자, 문명의 진보를 거스르는 과거 회귀론자 등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날 성장위기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탈성장을 이야기하려면 사회와 단절된 자급자족의 이상향을 꿈꾸는 비현실주의자라는 혐의에 대한 답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전망, 성장의 위축에 따른 결핍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탈성장 사회의 징후들

탈성장 사회를 향한 거대한 전환은 결국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과 변화들을 통해 시작된다. 이 점에서 이미 우리 가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성장 사회의 징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경쟁과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성장사회 속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꿈꾸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 선진국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노동과 소득, 소비 전반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다운쉬프트

년 내에 세계인구와 산업화, 오염, 식량생산, 자원고갈의 요인들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40여 년이 지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후속 연구가 나오고 있다.

족(downshifters)’의 등장은 탈성장 사회를 향한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다.⁵⁾

우리 사회에서도 과잉 노동과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속도를 늦추으로써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던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산업사회 임금노동 체계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여가 활동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도시를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귀농·귀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열망과 함께,⁶⁾ 협동과 나눔을 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이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이 생계와 행복을 보장한다는 공식이 성장위기 시대를 맞아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빈곤’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 대신에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탈성장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과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삶의 자립과 살림운동

자립적 삶은 탈성장의 토대

성장사회를 추동하고 이끌어 온 가치와 제도, 사회 구조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양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성장체제로부터 ‘거리 두기’와 ‘스스로 서

5) 클라이브 해밀턴, 『성장중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나』, 김홍식 역, 바오. 2011, 299쪽.

6)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작년 7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가 ‘소득이 낮아도 저녁시간을 보장 받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뉴스> 2015. 10. 28.)

기'의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거리두기'는 성장사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성장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말한다. 이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라면 지금 당면한 저성장 상황은 만성질환에 가깝다는 진단과도 연결이 된다. 마치 사람이 아플 때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심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된 데 병의 원인이 있다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오래된 습관과 익숙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따라서 문제 해결도 특별한 정책적 처방책을 찾기에 앞서 성장주의 시대에 확장되고 굳어진 가치와 제도, 구조, 시스템 전체를 '다이어트^{diet}'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성장지표가 만들어 낸 거품을 거둬내고, 소득 감소에 따른 지출 축소 전략을 단계별로 지혜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당연히 다이어트 전략의 최종 목적은 빈곤과 궁핍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스스로 서기'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성장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된다.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마침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자'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의미가 크다. 자율^{自律}, 자치^{自治}, 자립^{自立}, 자조^{自助}, 자생^{自生}, 자존^{自尊}, 자양^{自養}, 자작^{自作} 등 '스스로의 시대'가 열리면서 풀뿌리 생활영역을 바탕으로 한 자립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성장의 위기가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조직하고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의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곧 경제·사회·환경적인 위기가 초래할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완충영역(buffer zone)을 넓히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위기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도 높여나갈 수 있다.

삶의 자립을 위한 살림운동의 역할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과 기술의 투입을 통한 성장을 회복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계와 자원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살림운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살림운동은 ‘살림살이 주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협동의 방식으로 집단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자립적 삶과 공생의 길을 찾아 함께 실천해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살림’의 의미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주로 주부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사(house keeping) 노동으로서 산업적 생산노동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과는 의미의 차원이 다르다.⁷⁾ 탈성장 사회로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살림’은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거룩한 활동이자, 살림살이 영역에서 삶의 자립을 지탱하는 토대이며, 지역과 사회를 서로살림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핵심 가치다. 이런 지향을 가진 살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살림운동’이 있다. 한살림은 생명의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농민과 함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이끌어 온 여성들의 주체적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들의 활동 영역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사회로 확장시켜 왔다. 내용 면에서도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에다 ‘지역살림’과 ‘마음살림’까지 살림의 영역을 넓혀 왔다. 따라서 한살림운동에는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 있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

7)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밥-빨-청-교’로 불리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살림’의 영역은 집안의 허드렛일 정도로 취급했던 것이 기존의 ‘살림’에 대한 인식이었고, 이반 일리히(Ivan Illich)는 산업사회에서 평가절하 되는 가사노동을 놓고 일찍이 ‘그림자 노동(shadow work)’이라고 불렀다.

은 물론이고, 생산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업과 자연생태계를 살리며, 이윤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과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먹거리에 기반하되 먹거리를 넘어서, 조합원에 기반하되 한살림의 울타리를 넘어서 살림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과 배제, 단절과 소외를 통한 죽음의 사회를 공생과 협동을 통한 생명살림의 사회로 만들어가려는 살림운동은 한살림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흙살림’, ‘물살림’, ‘강살림’에서 ‘몸살림’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왔고,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되살림운동’과 함께 살림의 경제, 살림의 정치에 대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살림’의 가치를 담은 협동운동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살림운동들은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힘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힘의 비결은 ‘협동’에 있다. 사람들은 당면한 삶의 문제를 개인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나누며 살아간다. 자립^{自立}과 고립^{孤立}은 차원이 다르다. 협동운동을 통한 삶의 자립은 성장위기 시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다. 탈성장 사회는 자신의 삶을 다른 곳에 맡기는 ‘삶의 외주화(life outsourcing)’ 방식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 돌봄(self-care)’으로 바뀌념으로써 가능하다. 생활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의제를 가지고 생활 현장에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힘을 살림운동의 확장을 통해 길러낼 필요가 있다.

탈성장 시대 협동운동과 살림운동의 확장을 위한 과제

탈성장과 협동운동의 역할에 대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개개인의 고립과 불안, 경쟁을 통

해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⁸⁾ 자본의 자유, 경쟁의 자유가 삶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운데, 개별화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결과적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치유하고 돌보는 협동적 삶의 감각과 능력을 퇴화시켜 버린다. 따라서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삶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협동운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만큼 성장위기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자본주의 초기와 성장기에 나온 협동조합 이론과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살펴보면 지금까지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해 온 데는 성장경제 시대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성장경제와 함께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비주의의 확산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대적 환경은 우리나라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들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당면하게 될 성장위기 시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도전도 상당할 전망이다. 생산자나 노동자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조합원의 구매력 향상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장위기의 상황은 협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기도 하다. 개별화된 삶의 불안감은 ‘협동적 생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장위기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경우 좁아진 시야에서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을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공동체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화된 욕망 충족 행위가 어떤 파국적 결말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성장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현재 협동조합은 조합원 욕구의 충족과 필요의 해결

8) 이 부분의 문제의식은 한병철이 저술한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에서 도움 받았다.

은 물론이고, 이웃과 지역, 사회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조합원 욕구의 즉자적인 해결을 넘어서 조합원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관계를 발전시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의 치열한 경쟁 체제에 편입해서 사업적 생존을 모색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대행하는 방식으로서는 자립을 바탕으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을 상실한 채 외부로부터의 자원 투입과 제도적 기준에 의존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아울러 총체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유기농 본연의 가치까지 퇴색시켜버리는 유기농의 관행화(conventionalization)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듯이, 협동조합 또한 이런 관행화의 경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⁹⁾ 또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이란 이름을 단 영역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사회적 전환에 대한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방식은 자칫 ‘소셜 워싱(social washing)’¹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소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살림운동의 확장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서 살림운동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한살림이 펼쳐온 생활협동운동 속에는 생산과 소비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는 서로살림의 공동체적 삶에

9)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와 참여를 통해 생활공동체와 생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자활공동체운동의 운동적 전망은 약해지고 사회 복지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대행자 또는 전달자 역할에 머물게 된 점은 성장위기 시대에 협동운동의 역할 모색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원전개발을 녹색성장으로 부르면서 녹색(green)의 의미를 이미지 세탁용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 부르듯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회적(the social)’인 것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축소되고 편의적으로 왜곡해서 사용될 경우를 ‘소셜 워싱’이라 부를 수 있겠다.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살림의 직거래 방식은 단순히 유통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 영역 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동경제 모델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가지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 영역의 분리와 대상화 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고, 농촌은 생산자가 생산 활동하는 생산지로, 도시는 소비자가 생활하는 소비처로 구분해서 보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기능적 분업화와 공간적 분리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생존방식이자 의존성을 토대로 한 분할통치 전략이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살림운동이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장위기 시대를 맞아 이런 기능적·공간적 분리 현상을 극복하고 자립적 삶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역’과 ‘생활’을 중심으로 살림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의 깊은 관계와 다양한 만남의 접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성장위기로 인한 충격이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삶의 위기로 나타나는 만큼, 생산-소비-여가-생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의식주와 의료, 교육, 돌봄 등 삶의 기본 필요들을 협동을 통해 공동으로 생산하고 건강한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낯설고 위험한 살림살이 공간을 보다 친밀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생산과 소비의 보다 밀도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영역 속에서 소비의 새로운 가능성을, 소비 영역 속에서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서는 개별화된 소비자로서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생산협동조직을 만들어 자립에 대한 감각과 역량을 길러낼 수 있다. 이것은 동네 골목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대기업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협동조직화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필

요를 결합한 일공동체와 생산공동체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호혜의 장터들을 펼쳐나갈 수도 있다. 농촌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의 협동화와 함께 생활 영역에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구매력의 결집을 통한 소비의 주체화가 필요하다. 대형마트를 통해 거대 유통자본이 농촌지역 곳곳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이런 곳을 통해 소비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지역과 생활의 자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직거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활협동운동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가되, 농촌과 도시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생활살림운동의 모델들을 적극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탈성장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식과 내용,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성장위기에 따른 경제의 위축으로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 자체가 배제되는 테크놀로지 실업 상황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남성 가장의 정규직 노동으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만큼, 노동과 생활의 균형 있는 결합을 위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¹¹⁾ 노동시간 축소가 사람들을 노동 자체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여유 시간을 창조적인 자기실현과 탈성장 사회를 준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잉노동의 사회에서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자본이 사람들의 생애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삶의 자기주체성과 자립을 위한 ‘자기 시간’ 갖기가 매우 중요하다. 임금노동에 대한 의존과 소비에 대한 강박관념을 줄이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강요된

11) “탈성장 사회의 본질적인 특색은 ‘노동’과 ‘생활’을 나누는 경계가 해체되어 노동이 곧 생활이 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점이 탈성장 사회를 정의하는 핵심일 것이다”(클라이브 해밀턴, 『성장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나』, 김홍식 역, 바오, 2011, 256쪽.)

임금노동에 대한 삶의 의존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노동과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영역으로서 자기고용(self-employment), 공동체 고용, 협동노동과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나야 한다. 노동자들이 경영 주체가 되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터와 일터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업과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산과 소비, 생활 전반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동운동의 역할이 성장위기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본 한살림선언

모든 나라에 탄생신화가 있듯이 어떤 조직 또한 그것을 만든 탄생철학이 있다. 단군신화가 한국의 탄생신화이듯 한살림의 탄생철학은 〈한살림선언〉이다. 정도전은 ‘민_民’이 ‘본_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선을 건국하였고, 그의 사상과 철학은 〈조선경국전〉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일본제국 주위에 저항하여 독립을 갈구하던 열사 33인은 〈기미독립선언문〉에 조선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한 염원을 담아 만방에 선포하였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살림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데는 한살림선언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올해는 1986년 12월 한살림농산이 인적이 드문 제기동에 문을 연 지 30년이 되는 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한살림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의 역사’로서 한살림선언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익히 보아왔던 방식을 벗어나 세계사적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람과 사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회의 관점에서 경제를 사고하였던 사회적경제의 관점으로 한살림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기로 한다.

한살림의 탄생철학 ‘한살림선언’

혹자는 한살림선언이 한살림 조직과 구성원들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헌법이란 개념은 역사적 발전 과정과 사회적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거나 정의되지만 어쨌든 법이란 ‘제도’이지 ‘정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언의 성격과는 다르다. 또한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한살림선언이 한살림의 사람과 조직의 머리 위에 존재하며 전권^{全權}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한살림협동운동조직은 바로 사람들의 결사체이므로 그 안의 사람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살림선언은 법이 아니라 탄생철학이기에 사람과 조직을 지배할 수도, 억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산다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부정한다면 버려질 수도 있다.

“한살림선언은 헌법이 아니라 탄생철학이다.”

그러나 탄생철학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잊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묘한 힘이 있다. 그 이유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직 또한 탄생이란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며, 생명이란 바로 ‘생^生의 명^命’이기 때문이다. 생의 명이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특히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이 탄생철학을 가질 때, 그것은 각기 처지와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운명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진다. 운명공

동체를 영어로 ‘shared destiny’, 불어로는 ‘communauté de destin’이라고 한다. 영어의 의미는 ‘공유한 운명’이란 뜻이며, 불어는 우리말과 똑같은 ‘운명공동체’이다. 사회적경제의 저명한 학자인 벨기에의 드푸르니 J. Defourny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집단적인 정체성’ 혹은 ‘운명공동체’ 정신이라고 한 바 있다.¹⁾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조직이라 하며, 필요가 있어야 모이고 일이 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운동을 추동하고 발전시킨 힘은 단지 ‘필요의 조건’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Mondragon Cooperative Complex, MCC)’가 대표적인 예이다. 몬드라곤이 오늘날 거대한 협동복합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스크족의 집단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운명공동체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선언은 운명공동체의 표현

“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공산당 선언』만큼 전 세계에 널리 읽히며 또한 현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정치적 문서는 아마 없을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작성한 이 문서의 프랑스어판은 1848년의 6월 반란 직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으며, 최초의 영역본은 1850년 런던에서 간행되었다. 이리하여 『공산당 선언』은 국제적 노동운동 및 혁명운동에 관한 지침으로 또한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로서 불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1959년까지 8개 국어로

1) Defourny, J, “L'économie sociale au Nord et au Sud(남부와 북부의 사회적경제)”, De Boeck & Larcier s.a., 1999.

출판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뿐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존재 양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이 선언의 힘은 무엇이였을까? 무엇이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일까? 그 까닭은 아마 그 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국의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말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해방을 예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해방의 무기는 총칼도 아니요 자본도 아닌 ‘단결’이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였고, 그 이념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인정되었기에 『공산당 선언』의 저자들이 가진 사상의 옳고 그름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하여 나 하나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친구를 얻게 하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한살림선언을 다시 보며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은 단지 낡은 족보를 뒤적거리는 선비의 향수어린 습관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30년 역사가 지난 이 시기에 한살림선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나는, 우리는 어떤 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 지금 내게 그 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할 것인지’ 그렇게 살아있는 정신으로 물어보기 위함이다.

한국에 한살림선언이 있었다면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탄생한 프랑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이미 많은 지식인과 실천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갈망하며 선언을 공표하는 전통을 가졌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의 실천을 바탕으로 연구를 축적해갔으며, 그러한 탄탄한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토대로 선언의 형식을 통하여 분명한 사회변화의 전망을 제시해왔다.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적인 변화와

전환의 시기, ‘프랑스 대학과 지식인의 협동조합 선언문’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미래 사회의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조직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1920년대에는 『협동조합공화국』²⁾이라는 이상을 담은 서적이 출간되어 많은 정치적 공화국의 실현에 더하여 경제에서의 공화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대학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다음과 같은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선언문은 218명이 서명하여 1921년 세계 최초의 사회적경제국제리뷰인 RECMA지 1면에 실렸다.

프랑스 대학과 지식인의 협동조합선언문 (부분 발췌)

프랑스에서 공권력은 협동조합에 공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협동조합에 특정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가격상승에 대처하고 국민의 식량보급 및 피해지역 재건, 철도와 우체국의 건설을 담당하고, 심지어 알코올중독과 빈민굴을 일소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대부분의 자문위원회의 몇몇 의석은 소비자대표자들에게 할당되었다.

그러나 여론도, 언론도, 경제학자들도 협동조합운동에 이 선언의 서명자들이 표명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협동조합운동을 강점과 약점을 가진 어느 상업조직과 동일하게 여겼을 뿐, 협동조합운동이 거둔 현실적인 성과를 넘

2) 한국에서는 1985년에 선진문화사에서 『협동조합공화국-협동조합 경제학』(아르네스트 포이즌 저 진흥복 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한국어번역본과 불어 원본을 비교해보니 전문이 번역된 것이 아니며,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 번역본이라기 보다는 편역본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흥복역은 원본이 아닌 일본어판을 편역한 것으로 보인다. 원제는 협동조합공화국 La République Coopérative이며, 저자는 에르네스트 부아종 Ernest Poussin이다. 부아종은 1920년 당시 프랑스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이었다.

어 사회재구축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침이라고 한 이유는 엄격한 틀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이 말하듯 협동조합은 헌법이 아니라 운동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기업도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조건, 즉 이윤 추구와 경쟁의 압박을 벗어나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협동조합기업은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흥분제 없이 일하며, 경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연합을 구축하고 통합함으로써 경쟁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윤 그 자체가 사라지는 날 더 이상 이윤을 위한 경쟁은 필요 없어질 것이며, 그때엔 다만 서로 협동하기 위한 경쟁만 남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발전이 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주의 형태의 경제 국수주의에 대항하며, 제국주의에 다름 아닌 국제주의에도 대항할 것이다. 30년 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창설하면서 협동조합은 '국제연맹(the Lique of Nations)'³⁾을 앞질렀으며, 현재로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투쟁이 되어버린 국제교역이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각국의 자원을 활용하기로 정한 국민들 간의 협동이라는 본래의 형태로 돌려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원칙의 대립만 수립할 뿐, 인간적 적의나 계급투쟁을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소비협동조합 내에서는 이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소비협동조합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만약, 참 바람직하게도,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된다면 자신의 내부에서 이 대립되는 이해를 구별하고 중요성을 따지는 법을 배울 것이고, 보

3) UN의 전신

편적인 것을 위해 개인적인 것을 희생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소비협동조합이 소비자에게 매일 가르치는 교훈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파하고자 하는 경제교육이자 도덕교육인 것이다.

한살림선언의 시대적 배경 및 취지

한살림선언이 발표된 시기는 1989년이지만 이 선언의 공동집필자들은 1980년에 「원주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니 한살림선언은 거의 10여 년의 고민 끝에 세상에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주보고서에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큰 방향을 세웠다면 한살림선언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길을 내어 주며 운동이 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80년대였을까? 그 까닭은 70년대라는 커다란 문명의 전환 시기를 겪은 후에 오는 각성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70년대는 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oil shock)’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이미 68년의 베트남전쟁 및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진 ‘68혁명’에서 그 징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보면 70년대는 석유문명의 위기를 겪은 후 생태적 각성이 일어나고 만연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부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경제 운동인 ‘연대의 경제’가 탄생한 시기이다. 또한 남부국가에서는 독립 후에도 무역을 통한 경제적 종속이 지속되어 산업화된 북부국가의 성장모델이 아닌 다른 개발모델을 추구하며 ‘민중경제’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듯 70년대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격변의 시기였으며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기이기도 했으나 그 전환의 흐름은 8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기형적인 문명으로 정착되었다. 1981년, 영국의 마거

릿 대처 수상이 “더 이상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 선언하며 신 자유주의의 시작을 선포하여 그 나라의 협동조합지원조직이 구조조정되기 시작했다. 대륙을 건너 미국에서는 그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쌍생아인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비영리단체(NPO)들의 보조금이 삭감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비영리 영역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시작된 ‘세상의 상품화’의 단면일 뿐이다. 세상의 상품화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시장의 계약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 시장에서 팔기 위한 상품이 되는 현상을 뜻한다. 그리하여 과거 사회적으로 성취한 무상의 영역인 교육, 보건 의료, 교통 등이 민영화(시장화)되었으며, 문화와 전통도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보존되지 않고 팔기 위한 상품이 되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에서는 개발로 원주민의 삶이 붕괴되고, 전쟁과 더 불어 투기자본에 의해 경제가 붕괴된 지역의 노동자들이나 식량난민들은 전 세계를 떠도는 값싼 노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 지구의 다른 한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고 군사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열망하던 사람들이 저항이 본격화되었다. 그 시기, 민주화운동의 중심인 대도시가 아닌 작은 도시 원주에서 ‘원주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운동을 예고하는 문서(일명 ‘원주보고서’)가 발간된다.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제호가 붙은 이 문서는 1980년에 원주캠프에서 진행된 사회운동인 민주화운동과 지역개발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작성되었다. 1980년 9월에 김지하 시인에 의해 초고가 작성된 이후 무위당 장일순 선생 등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1981년 상반기에 완성되었다. 한살림의 선구자들은 80년대 초, 세상이 죽음의 문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살림의 문명을 열망하며 뜻을 세우고 대규모 협동운동을 펼치고자 했다. 첨단 산업문명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시작되던 시절, 기계를 돌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낫과 호미, 쟁기를 들고 땅을 일구는 농업살림을 택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성장사회가 열리던 때,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로 밥상살림을 이루고자 했으며, 쓰고 버리는 일회용 시대에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순환되고 자원이 순환되는 생명살림의 원칙을 세웠다. 사람의 노동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되어 거래됨으로써 이윤에 지배되는 시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시절, 이윤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거래되는 시장이 팽창하던 시절, 공업 대신 농업을, 이윤 대신 생명을, 돈 대신 사람을 가치로 삼는 사회의 싹을 틔웠던 것이다.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발표된 시기와 운동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죽음의 장이 전장만이 아니라는 것, 정치제도가 아니라 산업(경제)이 죽음의 장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농약을 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이를 장려하는, 살림의 정치가 아닌 죽음의 정치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죽음의 정치에 대항한 운동이 정당운동이나 문화운동의 형태가 아니라 대규모 협동운동이라는 ‘살림’운동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살림선언은 생협운동의 선구자 역할에 제한되지 않는다. 일상의 관계의 변화, 생활정치의 필요성, 살림의 공간의 재정치화의 과제를 제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문제인 ‘이윤에 희생되는 생명의 위기’를 알린 전조가 되었다는 점은 선언의 의미가 현 시점에서 더욱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선언의 구성과 해석

‘한살림모임’ 명의로 발표된 선언은 ‘생명협동운동선언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언의 초안이라 할 수 있는 원주보고서의 제목이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었고, 선언의 발간 취지문에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위한 대중적 협동운동을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산업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2장에서는 그 문명의 사상적 토대인 ‘기계론적 모형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며, 3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사상적 토대로 ‘전일적^{全一的} 생명의 창조적 신화’를 설정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간 안에 모셔진 우주생명’이라는 생명사상을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세계관의 확립에 기초하여 협동적 생존을 구현하기 위한 ‘한살림’운동의 전망을 밝힌다.

선언 전체를 해석하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선언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산업문명의 위기를 사람의 비참한 노예상태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이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학문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당시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샤를르 지드^{Charles Gide}는 산업혁명 후 임금노동사회로 인하여 사람과 사회가 비참한 상태에 놓였으나 기존의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진단으로 사회적경제라는 학문의 등장을 설명한다.⁴⁾ 마찬가지로 한살림선언은 사회의 변화를 노예상태로 변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진단하고, 생명의 의미의 변화를 문명의 위기로 본 것이다, 혹자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발전하고 신분제가 폐지된 평등사회에서 노예상태라고 진단한 것이 과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신분제도에 기반한 노예가 아니라 아렌트^{Arendt}⁵⁾적 의미의 노예, 즉 자유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치

4)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 김신양, 2009.

5) 한나 아렌트^{Hanna Arendt}의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의 세 유형을 참조할 것.

행동(action)이나 문화를 만드는 작업(work)을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하여 노동(labour)이라는 활동을 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정치를 담당하고 생계는 노예가 담당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사는 삶은 노예에 다름 아닌 삶으로 간주되어 ‘노예상태’라고 한 것이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투표권 획득 등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시민권을 누리고 있고 보편 교육의 혜택을 누리며 자유로운 삶의 선택이 가능한 듯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 예속되어 있고, 소비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간주하는 인간이 되었기에 이는 경제의 노예에 다름 아니라는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생명’에 대한 성찰이다. 3장에서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부분의 유기적 전체’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은 ‘정신’이다, 라고 해석한다. 선언에서 생명의 개념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의 저자인 함석헌 선생의 ‘뜻’과 상응하며, ‘전체’는 사회, 세상, 역사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은 유영모와 함석헌의 사상에서 비롯된 ‘씨알’사상과도 조우한다. 그리고 생명의 각성은 씨알사상에서 말하는 전체의 자리에 선 인간, 즉 역사적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이고, 아렌트의 의미로 해석해보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인 행동(action)하는 인간인 것이다.

다섯 번째 장은 취지문에서 밝힌 대중적 협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며,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이 세 가지의 각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한살림운동은 결국 생명(나)-사회(공동체)-자연(생태)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연결해 보면 ‘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지구를 넘어 우주적 존재이니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며, 그 ‘나’가 모인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의 집합이 아닌 운명공동체로서 살아가며, 그 운명공동체의 삶의 터전은 개발의 대상이나 자원이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귀하고 소중한 생태로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살림운동이 본래 지향했던 바는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토대가 된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사상이나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이론과도 상통한다.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에서 '하우^{hau}'라는 마오리족의 용어를 빌려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구조를 설명한다. 하우란 '주어진 것의 영혼, 최초 증여자의 영혼'이다. 그러니 사람과 사물, 주체와 대상 간 확연한 구분이 없으며, 사물이나 자연 또한 인격화된 존재인 것이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 마음이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는 그것을 주는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뿐 아니라 시험을 보는 이에게 짹짹 달라붙는 옛이나 철썩 붙는 찹쌀떡을 선물하는 것도 합격하기를 바라는 주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나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은 칼 폴라니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는 경제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람의 살림살이(the livelihood of man)'로서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살림은 폴라니의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와도 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살림선언과 사회적경제

한살림선언에는 동학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동학은 동양학의 전통과 서양의 기독교의 영향을 고루 받은 사상이므로 한살림선언에서 언급하는 동학의 주요 개념은 사회적경제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한살림운동의 다른 이름을 생명협동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언에서 보인 주요한 개념을 통해 생명협동운동의 원칙을 정리해보자.

첫째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우주와 인간은 협력하고 동역(同役)함으로써 창조적 진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장일순 선생은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다. “우리가 여기 모두 소비자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살 수 있어요? 또 소비자가 없으면 농사꾼이 생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관계다 이 말이야. 이게 없으면 저게 없고,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우주의 모든 질서는, 사회적인 조직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홀대할 수 있느냐 말이지.”⁶⁾ 그래서 “예전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음을”이라 표현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관계 속에 존재하니 그 본성이 협동일 수밖에 없다. 그 협동은 사람과 사람을 넘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까지 이르는 크고 넓은 협동이다.

두 번째는 불연기연(不然其然)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니다. 그렇다’인데 이는 우리가 반대라고 여기는 것의 의미를 뒤집는 논리이다. 예컨대, 우리는 ‘알다’의 반대말이 ‘모르다’라고 배운다. 하지만 ‘옛날엔 나는 너를 몰랐는데 지금은 너를 안다’에서 보듯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보면 ‘몰랐다’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요즘 우리가 흔히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처럼, ‘알다’와 ‘아직 알지 못하다’는 반대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상태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 어느 한 시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화발전하는 시간과 공간,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대립이나 반대의 시각이나 옳고 그름의 이분법이 아닌 ‘다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개념은 향아설위(向我設位)이다. 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이니 언뜻 보면 역사의식이나 전통을 무시하는 듯 보일 수

6) 최성현, 『좁쌀 한 알, 장일순』, 도솔출판사, 2004, 35~36쪽.

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부모님은 또 나의 조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유전자와 DNA가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 안에 그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나의 존재를 역사 속의 존재로 인식하고, 나를 모신다는 것은 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사체 운영원리의 핵심으로 나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너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스스로 말미암는 것이 자유自由이니 향아 설위는 결사체의 토대가 되는 주체의 자유함이라 할 수 있다.

1. 무위이화無爲而化 ▶ 협동의 원리

“우주와 인간은 협력한다.

전일성의 자각은 관계 속의 나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2. 불연기연不然其然 ▶ 다원주의, 민주주의의 원리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이고 다양성이다”

3. 향아설위向我設位 ▶ 행동의 주체인 나의 자유함

“역사적 인식 속에서 나를 세운다”

다시 써야 할 한살림선언

한살림선언의 의의는 한살림생협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언은 한국 사회운동이 저항의 운동에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전환의 운동이 되기를 호소했다. 그리고 그 호소는 미래에 보편화될 운동의 예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살림선언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료가 된다.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

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 살림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일깨웠다.

그런데 한살림의 많은 조합원들이 한살림선언은 읽기 어렵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선언은 많은 학문과 사상을 아우르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개념들이 곳곳에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한살림선언이 살림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나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자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한살림선언은 대중운동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운동이란 글로 읽고 머리로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법, 소수가 이해했었지만 생활과 실천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승되고 전파되어 왔던 것이다. 그 힘은 결국 사람에 있었으니, 한살림선언이 한살림운동이라는 결사체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여전히 지나간 시대의 인식과 소수 전문가의 화법으로 서술된 이 선언문을 붙들고 새로운 운동의 좌표를 설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선구자들의 과오가 아닌 후세대의 몫으로 두어야 할 과제이다. 향아설위라 하지 않았던가? 선언에 담긴 생명협동운동의 원칙은 선구자들, 선배들을 향해 잔을 들 것이 아니라 내게 잔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상을 모시듯 한살림선언을 모셔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있도록, 새로이 창조하는 주체는 '나'여야 한다. 나는 그 탄생철학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한살림선언 다시쓰기가 살림운동의 길을 안내하는 별이 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살림 30년을 돌아보며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비혼자도 늘고 있지만 대개 서른 살 전후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기 살림을 꾸려나간다. 한살림이 올해 서른 살이다. 이제 까지 익숙했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미래를 향해 또 다시 낯선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고, 미래를 향한 새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년을 진단하고 새 비전을 제시하는 본격적인 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체성을 토론한다?

나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일하다가 2004년 9월 모심과살림연구소에 출근하면서 한살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첫 출근 다음날, ‘정체성 토론’을 한다고 해 영문도 모르고 북한산 아래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로 갔다. 이

• 한살림연합 기획홍보부문 상무

제는 돌아가신 박재일 회장님, 당시 직책으로 한살림서울 이상국 전무와 이남선 상무 등 주로 실무자들이 참석해 관련 정세와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한살림운동의 이념과 사업을 진단하며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운 단체에 출근해 긴장해 있던 나에게는 한살림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에너지를 쏟으며 토론하는 풍경이 조금 의외였다. 정체성, 남과 구분되는 나만의 고유한 성질을 말할 텐데, ‘전략기획회의’ 같은 실용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체성 토론이라니’ 싶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시민단체들은 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에 늘 숨이 가빴다. 언론의 조명을 받아도 집회나 행사에 단 몇백 명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한살림은 생산자 회원들의 물품으로 매일의 밥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자립적이고 생활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날도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철이라 충북 영동에서 온 포도와 청암농산에서 온 사과즙, 우리밀제과의 빵 같은 간식들이 준비돼 있었다. 2kg들이 포도를 상자째 테이블 위에 놓고 아무 경계심 없이 씻지도 않은 포도를 꺼내 먹던 광경, 이 모두가 한살림이 다른 사회운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정작 한살림의 리더들은 스스로의 정체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2004년 당시, 조직과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점이었기에 그런 논의가 절실했던 것 같다. 사실 요즘도 한살림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는 일이 분명하고 추구하는 바가 분명한데도 무엇인가 스스로에 대한 정돈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살림은 가치지향이 분명한 운동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시장에서 경쟁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운동단체다운 철학이 조직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기업들에 비하면 너무 순진하고 미숙하다’는 지적도 한다.

그날 ‘정체성 토론’에서 박재일 선생이 “한살림은 상호이면서 지향이었다”고 한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다. 한살림이 가치 실현을 위한 (생명)운

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였으리라.

한살림농산이 문을 연 1986년 12월은 1987년 6월 항쟁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1970년대에 정농회 등 유기농운동이 있었지만, 한살림은 보다 큰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운동을 시작했다.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연 박재일 선생은 4.19혁명을 뒤엎고 등장한 군부독재에 치열하게 맞섰던 학생운동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 1968년 원주로 이주해 근 20년 가까이 지학순 주교, 장일순 선생 등과 함께 ‘사회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민중들의 삶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의 경험이 한살림에 자양이 된 것은 물론이다.

원주의 운동가들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섰지만, 독재 권력을 쓰러뜨린다고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정치권력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주인은 민중들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것 역시 우리 개인들이라는 점을 떠올려볼 때 선배운동가들이 주인 된 자세로 미래를 모색한 점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며 동서양의 새로운 사회 이론과 철학, 사회운동의 흐름을 섭렵하고, 일본과 대만의 생협, 유기농업운동단체들을 방문하기도 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늘 반복되는 자잘한 일상의 일들을 가리키는 ‘살림’이란 말을 장일순 선생과 그 제자들은 낯설게 조명해 철학적인 개념으로 제시했다. 살림은 자연을 수탈하며 이기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던 현대 문명을 성찰하는 어휘가 되었고, 누구나 하는 보잘 것 없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온 세상과 어우러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앞에 ‘한’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되었다. 제기동에 문을 연 한살림농산 간판에 처음으로 한살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돌아가신 박재일 선생이 쌀가게를 준비하며 분주하던 그즈음 전철 1호선 안에서 그 표현

을 떠올렸다고 했다.

한살림의 등장과 성장, 원칙을 지키며 변화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업의 규모나 조직의 팽창 속도만 놓고 본다면 한살림은 어느 성공한 기업의 성장신화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회원(조합원)은 1986년 400여 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1만 세대가 넘었고, 다시 5년이 지난 1997년 2만 세대, 2005년 10만 세대, 2012년 30만 세대, 2015년 50만 세대, 2016년 5월 현재 58만 세대가 넘었다. 조합원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나 한 달에 5천 세대 가까이씩 늘고 있으니 곧 60만 세대가 된다. 올해 안에 전국 세대 수의 3%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 22개 지역 회원생협의 매장도 205개나 된다. 2006년,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가 발행되던 때와 비교해도 조합원(13만2,787세대→58만 세대), 공급액(932억 원→3,620억 원), 매장(71개→205개) 모두 크게 늘었다. 농민 생산자들도 112개 공동체 2,159세대에 달한다. 한살림에 상근하는 실무자와 활동가, 가공생산지 인력까지 모두 합치면 상시적 일자리에 5,194명이 일하고 있다. 규모만 놓고 보아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살림이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일반적인 마케팅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한살림은 유료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진정성을 이해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이 한살림을 사회에 널리 알려왔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투박하고 거친 물품과 포장디자인, 미숙한 사업운영조차도 진정성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불친절하다거나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면 여전히 한살림에 대해서 ‘가장 믿을 수 있다’는 평가가 견고하다.

한살림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은 강한 가치지향과 시대변화를 꿰뚫어 본 앞선 시대정신이었다. 공해문제나 식품안전,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던 시대에 한살림은 돈보다 생명, 도시와 농촌 및 이웃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사는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 사람들을 설레게 했다. 매사에 적과 아를 구분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용어가 일반화 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와 비교해 한살림의 언어와 문화는 많이 달랐던 것이다. 신념을 공유한 초창기 생산자들과 헌신적인 소비자, 실무자들의 끓어오르던 열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살림을 어떤 신흥종교 집단처럼 오해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살림은 한편으로는 꾸준히 사업과 조직을 변화시키며 현실에 조응했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물류체계 등 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처음 한살림농산 시절에는 전화 주문을 받아 개별공급을 했으나 회원이 늘어나면서 공동체공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물론 비용과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개인화되고 고립되어 가는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마을을 복원하자는 생각도 담겨 있었다. 공동체공급 원칙을 고수하다가 1992년 무렵 논쟁을 거쳐 개별 가구 공급을 허용했고, 1996년 과천, 1997년 사당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매장을 통한 공급이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매장 공급이 80%를 넘어섰다.

1996년 경기도 광주 문형리에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2002년 (주)한살림 사업연합을 설립해 당시 20개 지역 생협 중 17개 회원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물류사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개별 생협들이 분산 운영하고 있던 주문, 발주, 검수, 입고, 집품, 배송, 반송 등의 업무와 생산관리, 품질관리, 구매 관련 업무가 통합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효율이 높아졌고, 지역 생협들의 경영도 안정화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다시 ‘가까이 사랑’ 같은 지역 물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 편의성도 꾸준히 개선해왔다. 한살림은 2000년 인터넷 장보기 사

이트를 개설했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이 보급되면서 인터넷쇼핑이 막 확대되던 시점이었으니 무척 빨랐던 셈이다. 최근 모바일 장보기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다. 한살림이 모바일 앱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10년이였다. 3G 아이폰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였다. 그 뒤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개편하고 모바일 시대를 대비했으며, 가장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장보기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올 3월부터 시작했다. 흔히들 한살림이 시대변화에 둔감하고 변화에 더디다고 여기지만 원칙과 정신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조합원·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조직의 변화, 하나의 가게에서 생산과 소비의 연합체로

1986년 12월 문을 열 당시 한살림농산은 개인이 운영하는 짬가게 형태였다. 그러나 1년 남짓 뒤인 1988년 4월, 이내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을 결성했다. 1980년대 사회적 분위기 속에 ‘공동체’를 내건 한살림의 이미지는 사회운동 진영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당시의 사회운동은 대개 계급의 관점으로 사회 모순을 바라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살림이 말하는 ‘생명’과 ‘공동체’는 낯선 어휘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한살림을 ‘한살림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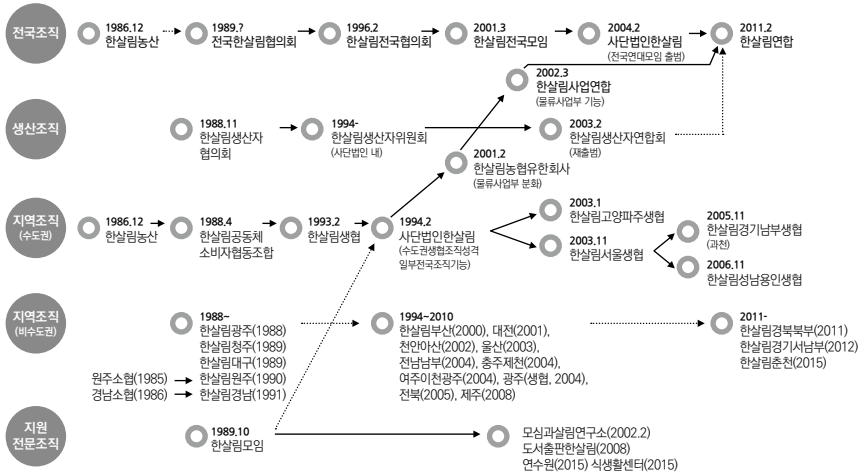
당시에는 법인격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 ‘한살림공동체’를 붙인 까닭은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라는 말이 가지는 한계 때문이었다. 그것은 절제 없이 ‘쓰고 버리는’ 이미지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나(소비자)의 소비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꼭 들어맞지 않았다.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형식은 소비자협

동조합일지라도 한살림은 농산물을 길러내는 자연, 그것을 맘 흘려 생산하는 농민생산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심에 두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연과 환경 등 거창한 공익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면서도 농민생산자들을 납품업자로 취급하며 대상화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한살림의 초창기 소비자조합원들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농민들을 후원하고 연대하는 또 하나의 주인으로 초창기 한살림의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 1993년 2월, 한살림은 소비자라는 말을 빼고 ‘한살림생활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4년에는 각 지역 생협과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연합조직으로 ‘사단법인한살림’을 결성했다. 2002년에는 물류 사업을 전문화 한 (주)한살림사업연합 설립과 함께 생산자모임(2007년 생산자연합회로 변경)도 따로 조직하고, 한살림모임을 계승·확대한 모심과살림연구소를 설립해 생명사상 연구, 한살림운동에 대한 장기적 비전 모색, 일부 실무자·조합원·임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도서출판 기능까지 담당하게 했다.

지역에서는 1985년 설립한 원주소협이 1990년 원주한살림으로, 1986년 설립된 경남소협이 1991년 한살림경남으로 변경했고, 한살림광주(1988), 한살림청주와 한살림대구(1989) 등이 속속 한살림에 참여했다. 다른 한편, 한살림농산으로부터 시작해 수도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사단법인한살림은 2003년 1월 한살림고양파주, 11월에 한살림서울을 분화시키고 2006년 과천생협(현 경기남부)과 2007년 분당지부를 한살림성남용인으로 독립시켰다.

2010년 생협법이 개정돼 생협들이 설립한 연합조직도 생협조직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한살림도 2011년, 사업과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연합 조직으로 ‘한살림연합’을 결성했다.

〈그림〉 한살림 조직변천사



한살림은 이상한 협동조합?

한살림은 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법제도상으로 용인되는 법인격으로 생활협동조합의 틀을 선택했지만 애초부터 생협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다. 한살림운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앞선 경험을 지닌 일본 생활협동조합들의 사례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유기농업의 원칙을 강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살림의 관점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강조하는 일본 생협들과도 차별성이 있었다. 이렇듯 한살림이 정립한 새로운 생협운동 모델은 이후에 등장한 다른 생협조직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소비자협동조합만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모델이 한살림인데, 전통적인 협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한살림의 모델은 낯설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살림의 조직과 운영의 특성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아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예컨대 2015년 7월 초, 협동조합주간을 맞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주최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의 방도를 찾아’라는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가 한살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들어보자. 그는 한살림이 생산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되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살림은 소비자생협인지 농민단체인지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모호한 성격이 한살림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살림은 처음부터 생산과 소비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농민들에게 정당한 생산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탱시키는 데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한살림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였기에 한살림의 이사회 구성이나 물품가격 결정체계 등 조직 운영 원리에 이러한 가치지향이 녹아 있다. 다음해에 수확할 주요 농산물 가격과 생산량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결정하며, 물품가격에서 75% 내외를 농민 생산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그렇다. 한살림 모델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생협운동이 시작되고, 직거래방식이나 물품의 외양이 비슷하다 해도 운영원리나 방식은 생협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당면한 소비자 편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소비자의 삶이 생산자 농민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에 다양한 시도로 인해 다양한 모델이 발전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토론회 때 다소 아쉬웠던 것은 한살림을 한살림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왜 한살림이 소비자를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냐?’라며 하나의 상을 두고 한살림을 판단했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조직의 역사가 다른데, 꼭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오해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협이 처한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 이후 사업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주요 생협 현황

(2015년말 기준)

	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계
조합원 수(세대)	53만2,183	23만5,942	18만4,768	3만7,072	
공급액(백만원)	367,422	525,598	116,133	21,023	1,030,176
매장 수	204	177	112	25	518

생협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자들과의 연대, 환경과 농업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 고유의 가치를 홍보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단체급식 등을 통해 사업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협동조합답게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일반 자본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도 하며, 과도한 경쟁의식을 부추기기도 해 심히 우려가 된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공동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지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생협운동의 근간이라 볼 때, 생협의 사업과 운영의 근간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생협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히려 저성장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이러한 토론과 모색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농업살림의 긴 여정

한살림은 자기 사업에만 골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기반과 법제도를 갖추는 일에 앞장섰다. 한살림이 성장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생산기반과 관련 사회인프라도 갖춰지게 된 것이다. 1991년 한살림이 출자해 괴산미생물연구소(현 흙살림)를 설립하고, 1993년 처음으로 미생물 농자재 ‘생명토’를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자재와 기술개발이 촉발되었다. 1994년 11월 8일에는 한살림이 앞장서 10개 생산자·소비자 단체가 모여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를 창립했다. 이런 움직임과 연동해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가 설치되고, 1995년부터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박재일 회장과 한살림이 직간접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친환경농업의 생산과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2011년~14년 사이에 친환경농산물의 농가 수는 19.1%, 경지면적은 평균 16.6%씩 감소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저농약인증이 친환경인증에서 제외된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과 자연,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기적인 관계에 기반한 유기농업의 원칙보다는 허술한 인증체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려온 거품이 빠지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표 2〉 친환경농업의 위축

	2009년	2014년	2015년
인증면적(ha)	8만4천	8만3천	7만5천
인증농가(호)	7만3천	6만8천	6만
인증량(%)*	12.2	4.6	

*전체농산물 대비

한살림의 첫 간판은 ‘한살림농산’이었다. 당시에 흔히 쓰던 무슨 상회 같은 게 아니고 ‘농산’이었던 데에도 한살림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 무렵 우리 농업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희생양으로 이중곡가제 폐지, 추곡수매 동결, 밀 수매제도 폐지 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었다. ‘3저 호황’으로 무역흑자가 늘고 경제 사정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업·농촌은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다. 1987년에 발간한 첫 소식지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표 3〉 농가인구 비율 및 경지면적 변화

	1980년	2000년	2008년	2014년
농가인구 비율(%)	32.4	17.1	6.6	6.1
경지면적(ha)	219만6천	188만9천	175만9천	169만1천

‘쌀,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새겨진 생명의 원형질’. 이 문구는 지난해 한살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다음해 쌀농사의 규모와 쌀값을 정하는 ‘쌀생산 관련회의(쌀값결정회의)’에 등장한 것이다. 매년 소비자·생산자 대표들이 모여 다음해 쌀값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정한 뒤, 책임소비를 위해 전 조직이 함께 노력한다. 매월 이사회에 쌀 소비 실적이 공유되고, 한살림 소식지에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이 연중 진행된다. 벼의 생육과정을 연중 지면 증계하거나, 쌀과 관련된 요리 사진, 레시피 공모전 등도 지속된다.

잡곡은 친환경인증뿐만 아니라 ‘국내산’까지 취급한다. 친환경인증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내산을 보존하는 게 급선무라 그렇다. 1983년 정부가 밀 수매제도를 폐지한 뒤 밀은 멸종 직전까지 갔었다. 1988년, 한살림은 경남 고성 두호마을에서 우리 종자를 구해 ‘우리밀살리기운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가톨릭단체 등이 결합해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2010년에 와서야 우리밀 자급률 1%를 넘어섰다. 보리도 마찬가지다. 곡물 소비는 줄어드는데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수입곡물의 절반가량이 가축사료로 소비되고 있어 곡물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2년 보리 수매제도마저 폐지했다. 사료 원료 대부분이 수입옥수수(미국산은 대부분 GMO일 가능성이 크다)인 점에 대응해 한살림은 2012년부터 수입옥수수를 발아보리로 대체하는 ‘우리보리살림사료’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보리살림돼지’ 등으로 1,844톤의 곡물 수입을 줄이고 290만㎡(약 88만 평) 규모의 국내 보리생산면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토종종자 보전과 농지보전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몬산토 등 외

래 자본이 장악한 종자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벌여, 2015년 한 해 동안 앓은뱅이밀, 선비콩 등 토박이씨앗작물 46종, 52만 톤, 47억7348만 원어치를 공급했다. 2016에는 ‘농지살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농지 소유를 공공화함으로써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살림은 농산물 가공사업 역시 1차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편으로 여겨왔다. 두부 등 콩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아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의 경우처럼 1차 농산물 산지에 농민들이 공동출자해 가공생산을 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생협 중에는 가공산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소유를 일원화 해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지만 한살림은 농민 생산자들이 직접 출자해 산지 가까이 설립한 사업체들을 통해 ‘분산형 네트워크’를 추구해왔다. 기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복으로 산지를 개발하지는 않지만 공급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생산지를 설립함으로써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매출과 이익의 한계선을 설정해 적정한 살림의 양식을 만들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며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도전. 여기에 한살림의 꿈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30년을 향해

30년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컴퓨터를 손에 들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머잖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가족의 개념이나 개인의 삶의 양태도 예기치 못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살림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식품시장 규모 157조 원(2013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지나지 않는 수준

이다. 그리고 출발 당시 스스로 진단한 문명의 위기,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불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단해졌다. 심지어 우리 농업은 위기 정도가 아니라 절멸의 지경까지 내몰렸다. 끝없이 성장하고 팽창할 것만 같던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쪼그라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현실에 희망이 없다며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있다. 한살림의 새로운 30년은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출발점이 되어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정체성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점에서 남과 구분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주변의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심층의 의식과 미세한 느낌, 현상에 대한 반응양태까지... 어찌 보편한 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 나의 '정체성'을 이룬다. 한살림은 사람처럼 단일한 인격을 지닌 존재도 아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고,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공통의 경험일지라도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한살림을 해석한다. 정관과 규약·규칙, 생산·출하기준, 가급적 수입물품을 취급하지 않고 인위적인 첨가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물품취급기준, 생산자 농민들에게 75% 내외의 수취가를 돌려드리려 하고, 쌀 등 주요 물품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량과 가격을 정하고 생산과 소비를 함께 책임지려고 하며,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기업에 비하면 한없이 더디고 느리지만 합의를 이루려 애쓰는 의사결정과정, 한살림 생산자/소비자와 실무자/활동가들의 유형화된 행동양식, 발행하는 매체, 심볼과 로고타입, 이 모든 것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 등 수많은 요소들이 한살림을 한살림다운 이미지로 느끼게 할 것이다.

10여 년 전처럼 '정체성 토론'을 전면에 걸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살림은 여전히 매순간 스스로의 정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벌인다. 지난 몇 달 동안 한살림의 각 단위 이사회에서는 매실이 공급되는 6월 전

후로 공정무역 유기농설탕을 취급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진통을 앓으며 토론을 벌였다. 결론적으로, '한시적 특별품'이라는 단서를 달고 민중교역, 공정무역의 원칙을 적용해 유기농 설탕을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여전히 몇 개 회원생협은 취급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30년 생존율은 5% 남짓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도, 서른에 비로소 독립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가량이기 때문일 것이다. 때마침 세대가 바뀌는 즈음인 2015년 사업성장세가 위축되면서 회원생협들의 경영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성장이 둔화되는 추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매장과 가정공급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해 물품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4인 가족의 가정취사를 기본으로 하던 사업패턴에서 1~2인 가구 및 고령자들을 배려해 소포장과 간편조리식 등을 늘리는 쪽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단체급식에 한살림 물품(또는 한살림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생산되고 직거래 취지에 맞게 농민생산자들에게 적정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물품)을 공급하고, 가정 취사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안적인 외식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사업 방식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경하지는 않더라도 시대변화에 조응하면서 사업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생협운영이나 사회변화 추이가 우리보다 20년쯤 앞선 일본이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고령화, 가속화되는 가족해체에 대응해 돌봄사업 등 지역 기반 복지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인증체계에 의존하면서 관행화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한살림자주인증체계'를 확대·심화하고 독자적인 인증체계 비중을 높여가는 노력, 토박이씨앗과 농지보전운동을 통해 한살림이 추구하는 농업기반을 지키고 확대하는 일, 기존 한살림 틀 외에도 협동사회경제영역을 한살림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후

원하고 미래 사업기반을 함께 모색하는 일 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사업의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커진 사업규모로 인하여 약화될 수 있는 관계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커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한살림 스스로의 조직틀, 문화,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방식은 과연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한살림 조직 자체를 한살림운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자는 데 공감의 확대되고 있다. 사회변화를 외치면서 스스로가 정체되어 있다면 새로운 30년은 성숙해지는 길이 아닌 그냥 나이만 먹는 쇠락의 길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조직개편TFT'를 운영해 현재의 조직틀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틀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단위생협의 규모와 사업범주를 생활단위 중심으로 재설정하기, 단위생협과 권역별 연합 조직 등으로 분화·독립하기, 연합틀의 재구성을 통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생협과 생산자조직이 권역별로 연대를 강화하기,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고 단위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업과 인재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등을 과제로 정리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980년대애, 생명을 존중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더불어 살자는 한살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살림이 성장해온 것은 이 악스런 장삿속과 영악한 처신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날 수 없는 진정성을 이해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살림이 살아남고 성장한 비결도 바로 이 남다른 점 때문이었다. 공동체공급을 받은 판 두부를 나눈 뒤 서로 작은 것을 가져가려 실랑이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형편을 염려하며 스스로 쌀값을 내리자고 호소해 참석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화에서 보듯 한살림이 한살림으로 존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간판을 단 매장이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황량한 욕망의 경연장에서 다들 목말라하는 함께 사는 길, 자본과 시장의 욕망을 넘어서려는 그 원대한 꿈을 유지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역살림운동: 새로운 살림운동의 전망

들어가며

“현재의 협동조합에는 고객만 있을 뿐 조합원은 없다”는 레이들로 박사의 경고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퇴행의 모습일 것이다. 더불어 “많은 조합원이 조합원임을 의식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 충성심을 요구하는 것에 때로는 무리가 따른다. 많은 협동조합이 흔한 상품광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조합의 약점을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결의가 상실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는 “소비자협동조합은 인간존재 총체 중 아주 부분적이고 인격과 무관한 부분만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중략)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를 위한 구매에 관계된 것이다. 공동구매가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리면 그 책임은 직원에게 넘겨지며, 소비자협동조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중지하게 된

•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살림과자치센터 소장

1) 마틴 부버, 레이들로, A. F.,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구소, 2000. 재인용.

다”¹⁾고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살림운동이 어떻게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새로운 협동운동의 장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작성되었다. 지역살림운동은 분명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합원 활동이다. 여기서는 그것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마을기반 속에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운동과 자치운동으로서 협동의 관계망을 만드는 마을자치운동이라는 지역살림운동의 전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역살림운동에서 지역의 의미는 ‘마을’이다

지역살림운동에서 말하는 지역은 마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자본주의의 산업화로 인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소비지로서 도시는 팽창해갔다. 이 과정에서 도시 기능은 부문·계층·지역별로 분절되어 갔으며, 마을 단위의 관계를 해체하거나 신도시처럼 마을 형성의 과정을 배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마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사실 팽창된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마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자본주의 산업화에 의한 도시발전이 가정했던 성장과 확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주의의 성장 둔화는 이윤 획득의 기회가 제한되어 가면서 산업자본의 투자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분배를 위한 예산 압박을 받는 정부는 복지 제공에 더욱 인색해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복지 제공을 위한 세금부담이 낮은 나라에서는 국민복지의 폭과 깊이가 더욱 더 제한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라는 요구를 강화한다. ‘스스로 해결하라’는 요구는 자기통치의 자치에 대한 강조와 연계된

다. 개인에 의한 자기통치가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되고 있다면, 최근 마을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에 의한 자기통치’에 대한 기대이다.²⁾

마을은 ‘근거리’라는 장소성과 ‘이웃’이라는 사회적 거리감을 모두 의미하지만, 단순히 사회적·공간적 친밀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은 주민들의 생활세계 욕구의 발현장이며, 공동의 필요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이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애와 협력의 장으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은 마을에서 실행되는 사회적경제운동이다

마을이 공동체에 의한 자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의 주체로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살림운동은 마을 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자치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은 “한살림이 그동안 펼쳐 온 직거래사업 및 생활실천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다양한 생활 속 필요와 지역이 당면한 과제들을, 조합원의 참여로,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협동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것”³⁾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자원동원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의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의 장으로서 마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

2)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윤미란 역, 이음, 2009. 93~94쪽.

3) 한살림서울, 「지역살림함께만들기 설명자료」, 2012.

적인 생활세계의 욕구를 구성원들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한살림과 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사회적경제운동은 시장 자본과 국가권력의 지배 아래 있는 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통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그 지향이 있다. 사회적 위기의 진원 중 하나인 경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역량강화(social empowering), 즉 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운동의 가치이다.⁴⁾ 지역살림운동이 마을 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자치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마을에서 실행되는 사회적경제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살림운동의 다양한 실천모습

한살림을 비롯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누구인가? 2014년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한살림 조합원의 주요 구성은 ‘30~40대’의 ‘3~4인 핵가족’ ‘전업주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가입한 조합원 중에는 30대(43%)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⁵⁾ 우리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조합원들이 떠올려질지 모른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창업에 도전하려는 40~50대. 육아문제로 현재는 힘들지만 언젠가는 사회활동의 장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20~30대. 주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실현의 장을 넓히고자 하는 의욕 있는 여성들. 지역사회

4) 라이트, E. R.,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권화현 역, 들녘, 2012.

5) 한살림연합 · 모심과살림연구소, 2014.

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생활상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개인 여성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속에서 경력단절을 극복하는 자기고용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여성들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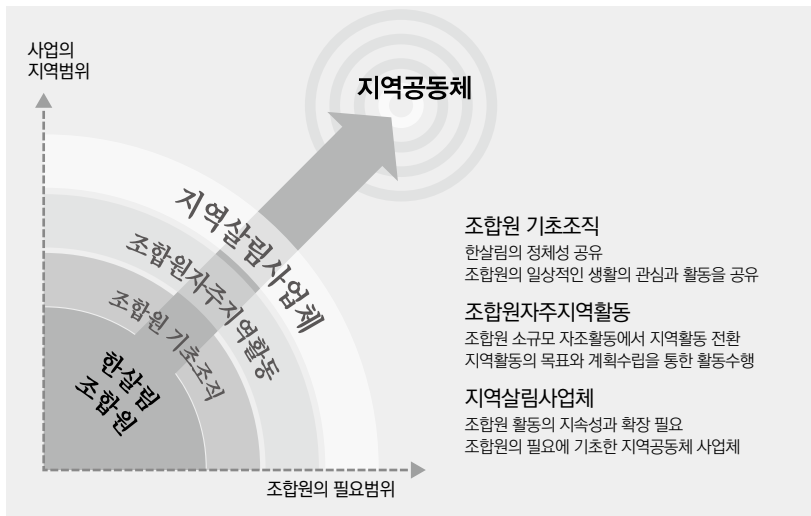
일례로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지역살림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대략 지역살림 기초조직, 지역살림 자주지역활동, 지역살림사업체 등의 경로가 고려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 공간이 조합원 기초조직이다. 이것은 한살림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조합원이 고민하고 있는 육아, 자녀교육, 치매부모 돌봄, 건강관리, 자기계발, 취업, 요리 등 다양한 일상적인 생활의 관심과 활동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다양한 개인적인 관심을 모임 구성원들의 공동의 관심사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요리모임이나 육아소모임, 자기계발모임, 독서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된다.

조합원 자주지역활동은 조합원의 소규모 자조활동을 지역주민의 관심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천한다. 조합원의 관심과 욕구가 지역주민의 그것과 공유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역 활동의 목표와 계획 속에서 활동이 진행된다. 버려지는 생활용품을 재이용하도록 해서, 수익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한살림서울 남부지부의 ‘햇살나눔봉사단’, 지역의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공유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부지부의 ‘아이스레 화곡동엄마들’, 엄마들의 맘으로 마포구내의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서지부의 ‘한 입만 더’, 맛별이 가정 아동의 밥상을 돕는 북동지부의 ‘나눔찬’ 등등 다양한 조합원 자주지역활동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협동의 관계망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살림사업체는 조합원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체로 운영되는 지역공동체이다. 한때 일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만든 ‘워커즈 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가 가장 유사한 사례라 할 만하다. 일본에서 만난 이곳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참여 동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개인의 자아실현이다.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를 실천하는 장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결핍 해소이다. 정부나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개인적 결핍을 공동체의 용기와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이었다. 셋째, 경력단절을 극복할 자기고용 전략이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속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여성들이 일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노동력 판매자에서 노동력의 공동구매자로 자신들의 자기고용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제한적인 경험이지만,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살림의 자주관리매장에 대한 경험도, 여성의 일 경험과 창업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회진출을 함께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한살림의 가치와 생활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카페공간을 마련한 한

〈그림 1〉 한살림 지역살림운동의 다양한 실천모습



살림고양파주의 ‘다운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봄’, 건강과 환경을 위한 바느질로 친환경 여성전용 생활용품과 소품의 생산 및 장애인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목화송이협동조합’ 등 지역의 마을기업으로 주민들과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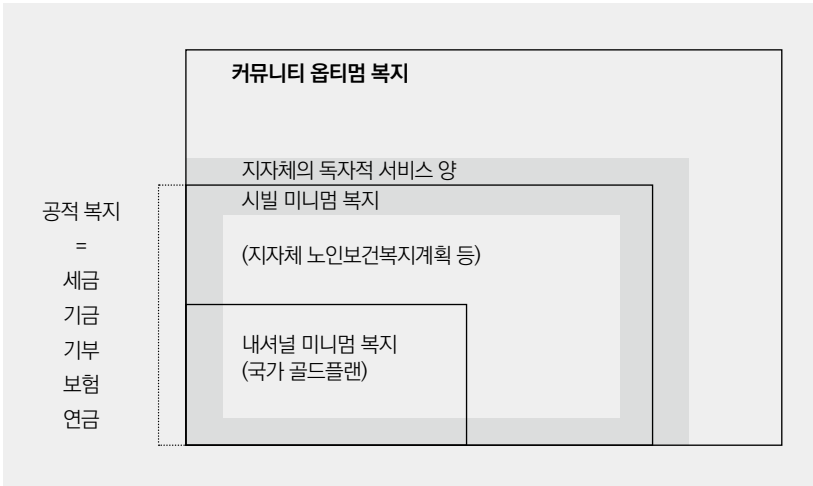
최근 보건의료나 보육과 노인요양 등의 돌봄 분야에서 조합원의 관심은 커져가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 노동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 영역인 지역사회는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돌봄,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의 공통적이고 집합적인 소비 영역을 만들게 된다. 특히 이들 영역은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통해 개입하며, 언제나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용이라는 공공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들 영역에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일차적인 주체는 정부가 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집합소비 영역에 사적 시장의 진입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영역에서 시민부담을 늘리면서 공공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는 집합소비에 대한 보편적 이용이라는 공공성의 전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집합소비 영역에 대한 정부의 후퇴와 시장 진입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반격이 지역살림운동을 통해서 이루지기도 한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출자를 통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는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아동과 노인을 함께 돌보자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노인요양협동조합 등의 공동체 돌봄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나 돌봄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상품은 대표적인 경험재에 속한다. 경험재는 재화와 같이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용 후에 상품의 질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와 제공자의 정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되며,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는 이용자의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 이들 영역에서 상품광고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입소문이나 지인을 통한 검증된 추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결국 지역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유통된 서비스 정보가 서비스 공급자 선택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돌봄 운동은 충분히 대안적이다. 공동체 돌봄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공동생산을 통해서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된다. 이윤을 위한 기만의 조건을 공동체 소유와 운영이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도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제한적인 책임의 영역에서 공동체 돌봄을 통해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과 만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직원과 소비자 등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들 조건을 잘 충족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등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그림 2〉 복지생활클럽생협의 공동체 최적복지 체계⁶⁾



6) 한살림고양파주, 「지역살림전문연구자료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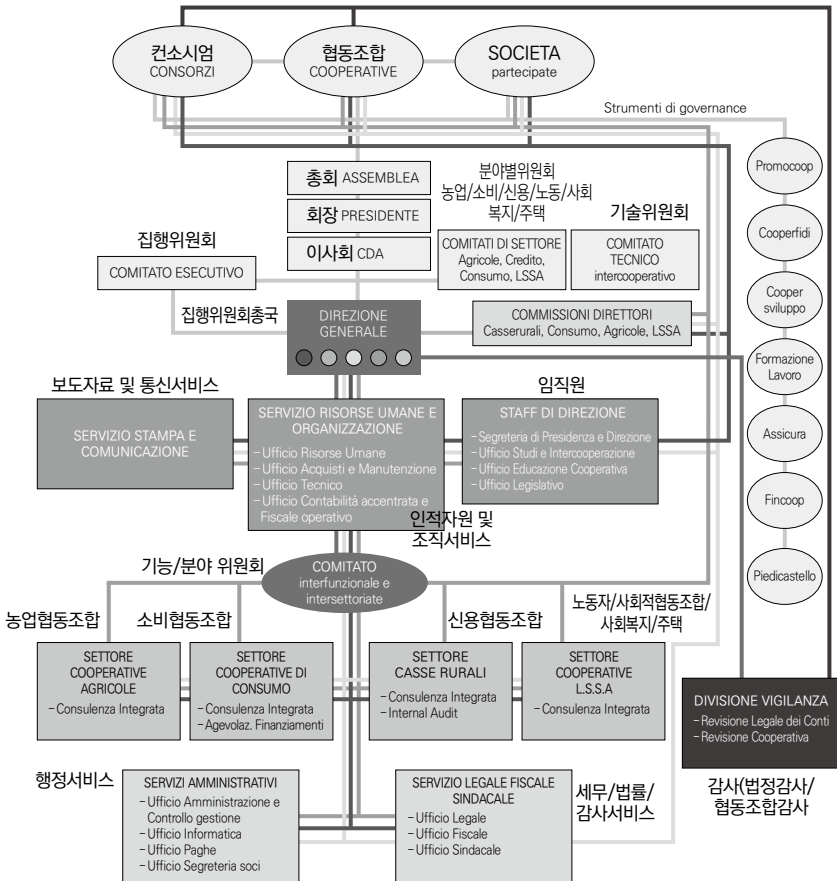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복지 생활클럽생협은 ‘커뮤니티 오퍼텀 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중앙·지방정부의 공적복지를 기초로 공동체를 통한 주민들의 최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의 재택복지지원시스템은 첫째, 택배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동구입 시스템, 둘째, 가사·간병·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 지원의 공간의료시스템, 셋째, 데이케어 서비스나 노인 홈 같은 시설네트워크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나오며: 지역살림운동의 실천전망은 지역자치운동에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운동의 ‘리얼 유토피아’의 상상력은 구체적인 주민의 필요와 염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실천의 문제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커다란 국가와 작은 시민사회의 힘의 관계에서, 정부주도성은 사회적경제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참여경제의 이상을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주민의 생활세계와 유리되는 시장화의 퇴행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주민공동체를 통한 자치 실현의 장인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의 고립분산적인 보조금사업으로 인큐베이팅의 변태과정을 겪고 있다. 지역살림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운영의 자원과 역량을 시장이나 정부에 쌓는 것이 아닌, 사회에 축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흔히 사회적경제 생태제라 불리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살림운동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영역, 소비 영역, 신용 영역, 집합소비 영역의 경제적 관계를 협동과 연대라는 관계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관계망은 구체적인 연합회운동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역 신용·금융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연합의 체계는 지역에서 경제의 사회적 실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이탈리아 트렌티노 협동조합연합회 체계⁷⁾



7) 장원봉, “지역살림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 한살림고양파주 지역살림교육자료, 2015.

지역살림운동은 조합원 개인의 생활세계 욕구를 협동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이며 지역자치운동이다. 자치는 주민의 자기통치를 말한다. 즉 지역의 다양한 주민의 자주관리조직을 통해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기통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살림운동이 가진 가치이다. 따라서 그것은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 관계망을 구성한다. 지역살림운동을 통한 주민 참여의 훈련과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자원연계의 경험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의 기반이 된다.

지역 주민은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배분에서, 자본의 각축장인 시장에서 가격신호에 의해 자신의 필요를 위한 구매에 의존하는 소비자나, 권력의 재생산에만 제약되어 국민을 구제하는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정치권을 선택해야 하는 좌절된 표심의 주체인 유권자로서만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⁸⁾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3주체'라 일컫고 있지만,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인 자원 배분의 역할을 자본과 권력에 지향된 시장과 국가에 의존한 채, 가계의 주체인 주민은 소극적인 행위자로 사회적 자원 배분에서 주변화된다.

생존을 위한 자원을 노동시장에서 얻어야 하는 주민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할 자기통치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여력을 갖지 못한다. 노동자가 안정적인 노동자로 살아가야 자신의 생존이 보장된다는 착시와 같이, 주민은 생존을 위한 경제에 몰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을 협동의 관계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제를 생활세계의 욕구를 해결하는 경제로 옮기게 한다. 이는 생존을 위한 경제영역을 자치의 영역으로 이행시킨다. 지역사회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재화와 용역

8) 장원봉, "선택 가능한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과제", 참여연대 편, 『반성된 미래: 무한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14.

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경제의 과정이 지역주민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는 주민들의 자기통치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제 주민은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사회적 자원배분에서 대안적인 행위자로 등장한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동의 관계망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살림운동의 새로운 전망으로써 지역살림운동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다.●

‘한’ 사람 주체성과 ‘나’들의 공동체

전환 통^痛

고단하다. 불안하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버겁다. 아픈 나와 우리를 감각한다. 전복적 변화가 절실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새로운 삶을 그리는, 혹은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환기다.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나의 삶도,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한살림도,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지구촌도 ‘기름이 위태롭다’. 위기^{危機}다.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되려는 순간이다. 임계점이다. 임계점이란 사전적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뜨거운 김이 새어나고 뚜껑이 들썹거리듯, 전환기에는 몇 가지 신호가 있

* 한살림연수원 사무처장

다. 징후가 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절망: '희망 없음'에서 비롯된 극한 피로감이다. 청년들의 예고 없는 죽음과 요양병원의 예고된 죽음을 목격하며 정녕 이렇게는 아니라는 감각.

낯섦: 가상현실도 그렇고, 알고고나 인공지능도 그렇고 잘 알 수가 없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속출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다. 아이들의 낯선 감정표현과 골목을 장악한 편의점의 편리한 밥·술 문화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혼돈: 무엇보다 혼란스럽다. 산업화·민주화 이후를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 유신의 잔영과 성장신화와 삼포세대가 뒤죽박죽으로 공존한다.

두려움: 불안하다. 두렵다. 취업을 못해서 두렵고 취업을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이 두렵다. 생존에 대한 공포 때문일까.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징후들은 뭉쳐서 가끔 아픔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몸살을 앓듯 온몸이 쭈시고 아프다. '성장통'일까? 아니면 '성숙통'일까? 성장통은 다음의 성장을 전제하지만, 성숙통은 성장 없는 아픔, 마음의 아픔이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전환 통痛', 마치 갱년기의 그것처럼 전환기의 아픔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위기의 증거가 아니라 전환의 징후이다. 극적인 변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살아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아프다. 살아있음의 증거다. 더욱이 그것이 특별한 목적의식과 가치와 이상을 지닌 사회적 활동의 주인공들, 즉 사회운동의 주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통증은 전환의 시그널이다.

예의 그 나비 이야기다. 지금은 고치의 시절, 애벌레의 시기는 지났으나 나비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절로 나비가 되지는 않는다. 상상세포(imaginal cell) 하나하나의 상상력과 그들의 공모共謀, 마음 속 깊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애벌레 시절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축복과 불안'의 역설적 시기, 고치의 시절이다.

‘조직’ 혹은 ‘3인칭’이라는 이상

전환기의 주된 감정상태는 무엇보다 불안과 공포다. 두려움이다. 혼란스런 현재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의 배후에는 ‘자기’에 대한 혼돈이 자리하고 있다.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도 조금 다르다. 실존적 혼돈이다. 경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다.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이후도 아니다.

‘대2병(대학교 2학년 신드롬)’ 기사를 읽는다. 공부도 안 되고, 취업도 걱정이고, 자존감 상실도 문제지만, 핵심은 정체성의 부재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입시생 3년의 ‘나’ 없는 삶 때문일까? 소설 ‘노르웨이의 숲’의 또 다른 제목처럼 ‘상실의 시대’다. 정체성의 상실, 즉 명시적 자기인식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주체성의 상실, 즉 동사적 삶에 대한 자기돌봄이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

사회적 활동의 주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외적인 변화의 추이도 중요하고 조직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더욱이 사회운동이 객관적인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나’들이 이루어내는 가치창조, 나아가 세계창조라면 더욱 그러하다. 다시, 주체성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주체성의 ‘주체’는 어떤 존재인가?

“〈한살림모임〉은 앞으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위한 대중적 협동운동(강조 글씨)을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 「한살림선언」 발행의 글 “한살림모임은 이렇게 창립되었습니다”에서

30여 년 전 한국에서 대안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한살림운동은 ‘대중적 협동운동’을 지향했다. 새로운 가치를 확산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했으면서도 그 방식은 그 당시의 것, 즉 ‘대중운동’이었다. 한살림 생활양식 창조의 주체는 ‘대중’으로만 유의미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요구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적 생존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절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적 접근은 불가피했다.

그것은 시대적 한계였다. 전통적 사회운동은 집합으로만, 대중으로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다. 세력으로 과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중(mass)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롯이 드러나지 못한 채 ‘무리’로만 존재한다. 더욱이 대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조직이 커지면 한 사람은 집체(집단적 전체)라는 시스템의 일부로써만 ‘작동’당한다. ‘나’는 더 이상 없다. 소수의 리더와 전모를 알 수 없는 조직(시스템)만이 ‘우상’처럼 존재하게 된다. ‘나’는 조직적 위계 속에서만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게 된다. ‘나’는 조직에 치이 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미 40여 년 전에 서구 사회의 경험을 배경으로 저술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이야기하며 ‘탈(脫)대중화’를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시기 한국 사회는 산업화의 정점에서 있었다. 한국의 대안운동은 그 이념적 지향과 관계없이 시대적 한계 내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나’는 대중이라는 ‘집단’이나 조직화된 집단인 ‘조직체’ 속의 존재로만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나’는 가치 창조와 세계 창조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목적 실현을 위한 집합적 구성인자, 즉 조직화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조직, 조직화, 조직체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조직(組織)은 본래 동사다. ‘짜서 이룸’, 혹은 ‘엮어서 만들’이다. 씨줄과 날줄을 엮는 일이다. 조직이라는 동사가 실체를 가지면서, 명사화된다. 조직체(組織體)다. 당연히 ‘체’가 있어야 한다. 실체 없는 조직은 연체동물과 같다. 뼈대 없는 호랑이와 같다. ‘조직화’가 그 경계에 있다. 대상화하여 실체화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열망을 물질화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아슬아

슬하다. 조직체가 완성되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괴물이 되고, 이윽고 조직체는 하나의 우상이 된다.

우상화의 치명적 증거 중 하나가 '3인칭화'다. 사회운동적 서술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라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3인칭 집합명사가 된다. '노동자'와 '계급'도 그러하거나 '한국 사회'와 '역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간'과 '생명'도 그렇다. 수많은 '조직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속의 '나'는 있으나 '나의 국가'는 없다. '조직' 속의 '나'는 있으나 '나의 조직'은 금기시된다. '생명의 그물망 속 나'는 있으나, '나의 생명그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심지어 대안적 세계관을 선언했다는 한살림선언마저도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쓰였다. 그 철학은 유물론과 변증법에 대한 도전이었으나,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듯 시점은 여전히 전지적 작가시점의 객관주의였던 것이다.)

사적 욕망과 비공식의 너와 나는 사라진다. 아니 비공식으로만 존재한다. '나'와 '너'는 뒷골목이나 술자리나 뒷담화로만 살아 있다. '나'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으로만 말한다. 심판으로 평론하고 항상 전체를 아우른다. 사私와 공公은 이분법으로 분열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멸종되고 공만 남는다. 멸사봉공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집작할 것이다. 대안은 활사개公活私開公. 공공철학자 김태창 선생의 언어다.)

그것은 무엇보다 객관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시선의 문제이다. 인식론의 문제이다. 이념이란 말도 그러하거나 실재 혹은 진리는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사회운동은 객관적 진리의 실천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 조직체만이 아니다. 3인칭화된 이념이 우상이 된다. '나'는 이념과 교조의 노예가 된다.

사회적으로도 3인칭화人稱化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객관주의로 포장된 유체이탈 화법이다. 선생님은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생각에는 말이야...”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과 같다. “짐의 생각은 이러한데 경들은 어떠하오?”처럼 말이다. 집안에서는 “아빠가 그랬

어.”, “엄마가 그랬어.” 식이고 글을 쓸 때에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식이다. 물론 ‘필자(^)’도 그러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 된다. 집합적 사고방식과 명사적 사고방식, 객관주의적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실재를 실제로 보는 이상화의 사고방식이다. 조직과 이념 속에서 ‘나’는 뭔가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불편한 존재가 된다.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이라는 뜻처럼 ‘우리’는 때로는 감옥이 된다.(반대로 서양의 경우 ‘I’가 강하다. 때문에 서안의 대안운동은 반대로 ‘we’, ‘oneness’를 강조한다.)

잠정적 결론은 이렇다. 3인칭 집합명사라는 이상과 주체성 상실의 시대. 3인칭화 속 1인칭의 상실, 집체 속 ‘한 사람’의 상실, 초월적 이념 속 몸의 상실이다.

‘나’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조직의 역사는 대강 ‘나 없는 공동체’에서 ‘너와 나의 연합체(결사체)’를 거쳐 ‘나들의 초^초공동체’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다. ‘나’들의 초공동체로 가자는 것.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안고 넘는 새로운 공동체 말이다.

이는 의식의 진화사이기도 하다. 전분별-분별-초분별, 전이성-이성-초이성이 그것이다. 우리는 흔히 전분별^{前分別}과 초분별^{超分別}을 혼동한다. 켄 윌버의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전초^{前超}’ 오류다. 이제 인간의 의식은 유아기의 무분별과 질풍노도 시기의 극단적 분별을 넘어 나와 너를 분별하되 동시에 ‘내 안에 너 있음’을 자각한 단계로 왔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대중/조직에서 한 사람으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한국 사회가 일제의 강점과 미국식 초고속 근대화를 겪지 않았다면 ‘세속적이면서도 거룩한’ 1인칭 단수를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것이란 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겪어야 했다. 주체 없이 주체성 없다. 욕망 없이 열망 없다. 항산^{恒産} 없이 항심^{恒心} 없고 적

공 없이 전환 없다. 요컨대 구속의 공동체로부터의 해방 없이, 나의 독립을 경과하지 않고서 전일적^{全一的} 나에 대한 자각, 즉 진정한 초월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포월^{抱越}이다. 안고 넘어간다.

이제야 비로소 때가 되었다. 인도와 동아시아를 비롯해 동쪽의 문명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한국인에게는 자기초월의 유전자와 비전이 내재해 있는지도 모른다. 동학과 한살림이 그 증거 중 하나이다. 시대를 앞선 통찰은 새로운 주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 사람 주체성

희망이란 더 나은 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깨달음이다. 위기의 증거라면 ‘극복’이 짝이겠지만, 전환의 징후라면 ‘상상’이 답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희망과 자각의 주인공, ‘한’ 사람이 있다.

개체 없이 개성 없고 주체 없이 주체성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1인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주체성 창조의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공동체의 조건이기도 하다. 한 사람과 1인칭, 이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한’ 사람 사회는 이미 도래했다. 서유럽만이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도 그러하다. 물론 전일적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1인’ 사회다.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1/4, 25%에 이르렀다고 한다. ‘혼밥’이 상징하듯 먹을거리 문화가 바뀌고 주택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생활협동조합의 물품 구성과 이용 패턴이 바뀌고 있다. 블로그와 인터넷방송국 등 1인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1인 제작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를 통해 지구촌을 출렁이게 한다. 소액대출이나 중고물품 등의 개인 간 거래 시스템인 p2p경제는 만만치 않은 규모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3차원 프린터 등의 기술융합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인 1품’ 생산시대가 열린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한 사람 경제다.

시민단체들의 집합 행동 대신 1인 NPO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1955년) 단지 인종차별 버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된 로자 파크스의 ‘한 사람 혁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링컨의 명구名句를 다시 읽는다. ‘한 사람의,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을 위한 사회운동’을 상상해본다.

그렇다. 1인 사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생명의 그물’을 출렁이게 한다. 1인 사회는 ‘한’ 사람 주체성의 사회적 조건이 된다. 결사체에서 독립된 ‘나’를 확인한 한 사람이,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자각한다. 전일적 주체에 대한 깨달음이다. 주체성의 회복이다.

여기서 주체성이란 자발성과 능동성만이 아니다. 주인으로 살기. 지금 여기의 실존 혹은 현존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 실제로 존재함. 즉 살아있음이다. 지금 여기 한 사람으로 살아있음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비롯한 성인들의 깨달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자기를 실체가 있는 주체主體로 인식하게 되면 주인됨이 명사화된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순간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탈근대주의자들이 주체를 해체한 모양이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주체는 없다. 과정과 관계만 있을 뿐이다.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주체가 아니라 주체성, 주인됨이다. 다시 말해 실존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로 살기, 한 사람으로 살기다. 나-한 사람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전일적 주체성이다. 독립주체도 아니고 집합주체도 아니다. 사私안에 있는 공公이다. 이기와 이타, 욕망과 열망, 진보와 보수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복합주체성이기도 하다. 한 사람 주체성은 1인칭이면서 3인칭이고, 몸(體)의 주인이면서 몸을 초월하며, 완성이면서 생성이고, 독립적이면서 관계적이고, 하나이면서 모두다.

그런데 전일적 주체성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양성(養成, 길러 이루는 것이면서, 동시에 양성(釀成, 술을 빚듯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먼저 자기를 양성하지 않으면 지금의 여기의 ‘나’로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자기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서쪽의 철학자 미셸 푸코와 동쪽의 종교사상가 해월 최시형이 만난다. 나-한 사람으로 만난다. 푸코는 자기배려(self care)라고 말했고 해월은 향아설위(向我設位)라고 말했다.¹⁾

푸코에게 인간의 주체성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권력이나 도덕 혹은 어떤 형이상학적 담론들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그것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근대적 주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자기 찾기이다. 그 출발점이 자기배려다. 자기가 깨어나도록, 진리와 하나가 되도록 스스로 거듭나는 일이다. 나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환골탈태하는 ‘나’, ‘자기전환(self transformation)’이다.

이것이 푸코식 영성이다. 푸코에 따르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영성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점이 중요하다. 단순한 인식(판단)만으로는 실재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말이다. 자기수련, 자기양성 없이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고, 전환적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을 푸코는 자기배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원형을 소크라테스에서 발견한다.

그런데 푸코는 그것을 서양의 역사에서 발견하지만, 또 다른 전형이 동아시아에 있다. 수행, 수양, 수련이 그것이다. 경영학의 학습이론에서 말하는 학습이 바로 수양(practice)이다.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그것을 가장

1) 이하는 푸코의 주체의 해석학과 해월법설, 관련 논문으로 「미셸 푸코의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해월 최시형의 “향아설위”」, (허경, 『동학학보』, 19호, 2010)를 참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살림서울에서 상무이사로 활동하는 김재겸 님과의 대화에서 많은 도움과 영감을 얻었다는 점을 밝힌다.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동학이다. 수양을 대중화하여 양반만이 아니라 백정과 노비에게까지 성인과 군자가 되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온몸으로 싸웠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해월 최시형은 스승 수운 최재우로부터 배운 공부법을 실천하고 또 실천한다. 자기양성이다. 그리고 스승이 체험한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깨달음과 같은 자기전환을 체험한다.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고 연마하고 또 공부한다. 그리고 갑오년 동학혁명의 참혹한 패배 이후 향아설위, ‘나로 향한 제사’를 선포한다. “아즉천我即天”, 내가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의 집합명사 사람이 아니라, 나-한 사람이 하늘임을 고백하고 선언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천상천하유아독존의 부처님처럼. 집합적 주체에서 한 사람 주체로, 3인칭의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1인칭 나의 시점으로의 전회轉回다.

최근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문재인이 히말라야로 도를 닦으러 갔다는 기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자가 해월에게 묻는다. “어떻게 도道를 깨우칠 수 있습니까?” 해월은 이렇게 대답한다. “도를 안다 함은 곧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니, 자기를 알고자 아니하고 먼저 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야 가히 민망치 아니하라.” 그렇다. 정치인 문재인도 이제 한 사람 문재인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양성하고 전환하기 위해 히말라야로 떠났을 것이다.

해월에게 자기배려란 ‘내’ 안에 마음의 씨를 모시고 기르고 살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해월의 십무천十母天의 주어를 ‘나(자기)’로 바꾸어 다시 읽는다. 이를테면 동학판 ‘자기배려의 십계명’이라고나 할까. 9번째 계명, ‘나를 싫어하게 하지 말라’를 보니 마음이 스산해진다. 10번째 계명 ‘나를 굴屈하게 하지 말라’를 읽으니 부끄러워진다.

1. 나(자기)를 속이지 말라

2. 나(자기)를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3. 나(자기)를 상하게 하지 말라
4. 나(자기)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5. 나(자기)를 일찍 죽게 하지 말라
6. 나(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7. 나(자기)를 주리게 하지 말라
8. 나(자기)를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9. 나(자기)를 싫어하게 하지 말라
10. 나(자기)를 굴하게 하지 말라

필자(^^)의 고향 정읍엔 ‘정해^{井海}’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 있다. 직역하면 우물바다인데, 보통은 ‘샘바다’라고 부른다. 보이는 것은 하나의 샘이지만 그 아래는 거대한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한 생명(a life)이면서 동시에 우주생명(cosmic life), 하느님이시다. 날 하나이면서 온 하나인 ‘한’ 사람. 샘이면서 바다인 샘바다 말이다. 샘이 바다를 만나려면 나를 뚫어 바다와 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다.

‘나’들, 자기실현의 공동체

이것은 이를테면 새로운 사회조직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다시 공부해보자는 말이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조직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나’들의 공동체라고 말해도 좋을 듯하다. ‘나’들의 공동체는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나’들도 그렇고 ‘나’들의 공동체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여기

서 ‘나들의 공동체’란 선택불가능한 자연적 결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자각에 기초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망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을 자각한 ‘나’들의 결사체(의도적이라는 점에서), 한 사람 네트워크라고나 할까. 이때 ‘한’ 사람은 새로운 사회조직론의 인간학적 기초가 된다.

‘나’들의 공동체는 이를테면 바둑과 같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화제가 된 그 바둑 이야기다. 초나라 왕과 한나라 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 전투조직 사이의 대결을 표현한 장기와 비교하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을 독립된 실체로 보는 원자론적 사회조직 모형과도 다르다. 바둑알 하나하나가 바둑판이라는 우주를 출렁이게 하는 중심이 된다. 바둑알 한 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둑판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바둑알 하나가 우주의 배꼽이다. 거기엔 직책도 없고 직급도 없다. 바둑을 두는 지금 이 순간의 실존적 가치만 있을 뿐이다. 미래에는 미래의 실존으로 과거에는 과거의 실존으로 어떤 때는 폐석(버린 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하의 명점이 되기도 한다.

‘내’가 ‘생명의 그물’ 속의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그것은 이미 ‘공동체(共同體)’, 함께 몸이다. 생명공동체다. ‘세계 내 존재’, ‘관계 지워진 존재’, ‘함께 존재’인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경험한 자기초월의 공동체이다.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자각적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주인공은 나다. 조상들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너’가 ‘나’임을 자각한 ‘나’들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들을 위해 존재한다. 자기실현의 공동체이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이웃과 협동함으로써 공생하지만 결코 그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참다운 자기실현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한살림선언」

그렇다. 한살림은 ‘한’ 살림이다. 날 하나하나가 온 하나로써 자기를 실

현하는 자기실현의 공동체를 지향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의미의 한살림 공동체가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가 진짜 가능한 일일까? 그런 사회조직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 있다. 그렇게 기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말이다. 일본의 대안적 공동체 애즈원커뮤니티^{as one community}와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호텔 체인 토요코인^{Toyoko Inn}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다. 또한 인간주의 경영학자 최동석이 소개하는 기업들에서 그것을 확인한다.

애즈원커뮤니티는 일본의 미에 현 스즈카 시에 자리 잡은 공동체이다. 무소유공동체 ‘아마기시즈 실현지’를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나와 2001년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애즈원커뮤니티다.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한다.

애즈원커뮤니티의 모토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에서 자기답게 산다.”이다. 그리고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예컨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에게도 사회에도 속박/강제가 없다.”, “일체의 대립이 없다.” 등이 그것이다. ‘속박/강제가 없다’라든가 ‘대립이 없다’라는 말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애즈원커뮤니티가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또 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고, 상하 관계가 없는 회사인 <애즈원 커뮤니티 컴퍼니>, <엄마손 도시락> 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까? 우여곡절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애즈원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강조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

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사회를 실현해보는 것, 그것이 애즈원커뮤니티다.

토요코인, 또 일본이다. 이번에는 기업이다. 전 세계에 256개, 한국에도 8개의 호텔체인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호텔체인 토요코인에서 자기실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업을 발견한다. 1986년 창업하여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토요코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강조하는 독특한 경영철학이다. 공식적으로 ‘회사의 자기실현’보다 ‘개인의 자기실현’을 우위에 놓는다고 공언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적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토요코인에서 일하는 호텔매니저의 99%가 현지에서 채용한 주부 출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성으로써, 주부로써의 자기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이는 토요코인의 독특한 인재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자가 기대하는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다시 한번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둘째, 용기와 사랑이 있는 사람. 셋째,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다. 특히 세 번째 ‘자신을 아는 것’을 좋은 지배인(직장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관(內觀)’이라는 독특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양과 사업의 두 바퀴라고나 할까.

‘자기실현의 장이 되는 일터’는 홍보문구나 이상적 구호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주요기업들의 모토가 되고 있다. 자기실현 없이는 회사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학자 최동석이 ‘자기실현을 위한 인간존중의 조직설계’를 제안하며 소개하는 기업조직들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된다. 서열이 없는 조직을 운영하는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 고정된 근무시간이 없으며 ‘왜’라는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브라질 회사 썸

코, ‘자기경영’을 모토로 하여 일을 중심으로 동료들과의 자생적 질서를 만들어 스스로 일하는 세계 최대의 토마토 가공회사 모닝스타 등이 그것이다.

열풍이 지나간 했지만 유력한 경제사회적 대안 중 하나인, 사업하는 결사체 협동조합을 떠올린다. 자기실현의 길을 지향하는 공동체, 한살림을 떠올린다. 기업에서는 오너가 직원의 자기실현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면, 대안적 공동체라면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들이 목표뿐 아니라 과정의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자각이 없는 나들이라면 협동조합은 이익집단이 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규모가 큰 애즈원커뮤니티는 불가능한 일일까? ‘한 살림’ 세상의 이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다시 전환

이번엔 ‘자기 전환’이다. 삶의 전환, 사회의 전환이란 무엇보다, ‘자기의 기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에서 시작해 자기로 돌아온다. ‘나’를 향한 제사다.

다시 ‘한’ 사람이다. 출판가에는 여전히 자기계발서가 넘쳐나지만, 이제 그 속에 담긴 숨은 뜻을 물어야 할 일이다. 고치의 시간을 겪고 있는 애벌레에게 희망은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언론은 ‘젊은 육체에 성숙된 정신으로 리셋’이라는 타이틀을 뽑고 있다. 이른바 ‘리셋(초기화/reset)’ 세대 이야기다. 2015년 삼성이 공개한 글로벌 신세대소비동향 보고서의 일부라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리셋 세대들로 하여금 삶을 진지하게 보게 만들었다. ‘생활의 변화에 욕구를 희생하겠다’는 비율이 65%였다. 3분의 1은 절약하기 위해 소비를 줄인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을 묻는 질문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꼽은 비율이 6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건강'을 선택한 비율은 58%, '사랑과 로맨스'는 47%였다. '진정한' 리셋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계발이 요구된다. 자기는 자기만이 아니고, 이웃이고, 자연이고 우주라는 각성 말이다. 자의식과 더불어, 70-80년대 386들을 설레게 했던 사회의식도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까지.

그렇다. 하나의 촛불이 100만 개의 촛불이 되는 '다시개벽'의 전야다. 구성원이 절반은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청년들), 구성원의 절반은 너무 일찍 밀려나는(장년들) 시스템이라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시스템 밖에 있는 것이 행운인지도 모른다. 돔 건축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미국의 한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현실과 싸워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통해 기존의 모델을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때 이루어진다."

이미 리셋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시스템 말이다. 나아가 리셋 세대에 의한 문명의 리셋.

어떻게 하면 리셋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을까? 순수한 영혼으로 체코 혁명을 이끌었던 '한' 사람 바츨로프 하벨의 시가 내게로 온다.

시작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일단 내가 시작해야 하리, 해보아야 하리,
여기서 지금,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어디서라면
일이 더 쉬웠을 거라고
자신에게 핑계대지 않으면서,

장황한 연설이나
과장된 몸짓 없이,
다만 보다 더 지속적으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알고 있는
존재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어 살고자 한다면
시작하자마자
나는 홀연히 알게 되리
놀랍게도
내가 유일한 사람도
첫 사람도
혹은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그 길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정말로 길을 잃을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내가 길을 잃을지 아닐지에 달렸다는 것을.●

참 고 문 헌

- 최동석. 2013. 『다시 쓰는 경영학』. 21세기북스.
고미숙. 2012.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북드라망.
유상용 스기에 유지. 2012. 『사람의 본성에 맞는 사회』. 히어나우시스템.
주요섭. 2015. 『전환이야기』. 모시는사람들.
미셸 푸코. 심세광 역. 2007.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한살림모임. 1989. 『한살림선언』.
천도교 경전.
-

GM 식품임을 알고 선택할 권리

유통되는 GM 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015년 우리나라에 약 214만5천 톤의 유전자변형(이하 GM) 농산물이 수입됐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옥수수가 약 111만6천 톤, 미국 브라질 등에서 대두 102만9천 톤이 수입됐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2014년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표>의 수치는 정부발표 자료를 합한 추정치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들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데 통계자료는 여러 개가 상존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14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옥수수와 대두 가운데 GM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8%, 66.0%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나는 최종식품에는 GM 농산물 등이 원재료로 쓰였는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현행 GM 표시제도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표〉 2014년 국내에 GM 농산물은 얼마나 존재했나

(단위 : 천 톤, %)

구분	옥수수	대두(콩)
2013년 이월*	473 (12.3)	61 (3.9)
2014년 국내 생산*	80 (2.1)	154 (9.9)
2014년 식용 수입*	2,034 (52.8)	312 (20.2)
2014년 식용 수입 GM 농산물**	1,262 (32.8)	1,021 (66.0)
총계	3,849	1,548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GM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는 GM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2조의2). 그리고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 제2014-114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200만 톤이 넘는 양을 수입하고 있으니 식품에서 GM 표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눈을 찢고 찾아봐도 GM 식품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렇다면 표시가 없는 식품들에는 GM 농산물이 원재료로 쓰이지 않은 걸까? 바로 답하자면 ‘모른다’이다. ‘맞다’, ‘아니다’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한 답변이지만 진실이다. 앞서 지적했듯 우리나라의 GM 표시제도가 치명적인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¹⁾가 만든 GM 표시제도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²⁾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표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 여기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로 통일한다.

2) “주요원재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의미한다(동 고시 제2조제3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호). 말하자면 “주요원재료”, “GM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라는 두 면제가 모든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 표시가 불완전해지고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했다. 특히 많은 GM 농산물이 수입되어 식용유 등으로 가공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GM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 조항은 치명적이다.

허나 정부는 GM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한다. 즉 “GM 성분검사는 DNA나 단백질 성분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데, 식용유의 경우 그 성분이 100% 유지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전자변형 성분 검사를 하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³⁾ 면제해준다는 이야기다.

함량 5순위가 아닌 GM 원재료에 대한 표시면제 사유는 설명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함량 5순위를 정의하고 있는 “주요원재료” 용어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법령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 표시제도에만 존재한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여전히 미스터리다.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인 정보도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운동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실련은 2013년 GM 표시제도 개선운동에 뛰어들었다. 2012년 9월 미국 과학저널 『식품화학독성학(FCT)』에 프랑스 세랄리니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출판된 직후라서 GM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더욱 달아올라 있었다. 경실련에서도 초기에는 GM 농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안전관리 -> 안전성확보 노력 -> 표시제도 현황 페이지 참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전 경실련은 그간 한국에서 GM 표시제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된 동향을 살폈다.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GM 농산물 등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너무나 고생을 했다. 특히 2008년 5월 한국전 분당협회 소속 식품업체들이 전분과 전분당 원료용으로 GM 옥수수 5만여 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유전자조작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를 조직하여 한국에 GM 농산물·식품 등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초아를 만들었다.

그들은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GM 옥수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6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농심켈로그, 동원에프엔비, 롯데햄, 매일유업, 정식품, 한국코카콜라 등이 “국제 곡물값 상승으로 원가 부담 증가와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GM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⁴⁾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익만을 강조하는 기업과 안전성 문제는 완료됐다 맹신하는 정부에 의해 서서히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전 세계적인 GM 농산물 생산의 확대, 국내의 낮은 곡물자급률 등의 프레임이 발동되며 시민사회의 운동을 점점 위축시켰다.

경실련은 GM 농산물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원활하게 협력하지도 소통하지도 않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를 지켜보며, 운동 전략을 GM 표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세웠다. 관련 이슈를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들을 확립하고 운동에 착수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4) “GMO 사용·비사용 기업, 소비자 선택은?”, 《세계일보》 2008. 6. 9 참고.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GM 농산물, 식품, 가공식품 등에 대한 수입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들의 이름을 비공개했다. 총 수입량은 공개할 수 있지만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어떤 GM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보호해야 한다는 사유에서였다.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으니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에는 과자, 두부, 두유 총 135개 제품, CJ제일제당 등 주요 GM 농산물 수입업체가 생산하는 1,077개 제품 등의 표시를 살펴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GM 표시는 없었다.

2014년에는 수출용 삼양라면에 GM 농산물이 포함되었다는 제보를 계기로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라면 제품에 대한 GM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해당 원재료가 GM 농산물인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지만 그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에는 평창에서 열린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MOP7)’에 대응하기 위해 21개 시민사회단체가 ‘MOP7 한국시민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공동 활동을 전개했다.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장, 울리고당, 물엿, 건강기능식품, 시리얼, 팝콘 등 다양한 시판 제품의 GM 표시를 점검했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하여 GM 표시제도의 문제를 톺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GM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로 전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기업만 바라보는 정부와의 싸움

경실련은 정부의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운동을 전개했다. 바로 정부가 「정보공개법」의 뒤에 숨어 비공개한 업체별 GM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경실련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비공개했다. 해당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실련은 이미 일부 GM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고, 직접 언론 등을 통해 GM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식용유를 만들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2013년 5월 이운룡 의원이 GM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의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했을 당시, CJ제일제당 등 법인들의 이익이 전혀 감소하지 않고 대부분 증가했다는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시 경실련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임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피상적인 수치에 기인한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됐을 시 기업이 받을 피해를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현재 GM 농산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괜히 공개하면 기업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경실련에 있으면서 다양한 소송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기업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것은 쉽게 만나기 힘든 모습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은 배제하고 기업의 편에 서 있는 행태는 충격적이고 실망이었다.

다행히 정부보다 법원은 중립적이고 정확했다. 법원에서는 해당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기는 하나,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의 제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항소했고, 2016년 5월 10일 항소심은 기각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했다. 정부만 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했다.

이제 정부가 또 다시 상고(2심 고등법원에서 3심 대법원으로 상소하는 것)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몽니 부리기를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GM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자명해 보인다. 경실련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업체가 GM 농산물을 수입하는 현황은 모두 공개되게 된다. 소비자들에게 매우 기본적인 정보가 비로소 정당하게 제공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우리와 같나?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2015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4개국에서 GM 표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세르비아, 잠비아 등 공식적으로 GM 농산물 등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있는가 하면 GM 종주국이라 불리지만 표시제도가 없는 미국 같은 국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GM 관련하여 자율표시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경우에만 일반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⁵⁾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GM 기술의 종주국에 해당하는 미국에서도 GM 농산물 등은 안전하기 때문에 별도 표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5) 위 기사.

지금 미국에서는 GM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활발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2014년 5월에는 최초로 버몬트 주에서 GM 표시제도가 통과되기도 했다. 기업들의 반대도 거세다. 일부 기업들은 개별 주에서 도입된 표시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연방법인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표시법(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 H.R.1599)’을 제정하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NGO들은 이 연방법을 “미국인들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법안(DARK Act: Denying Americans the Right to Know Act)”이라고 칭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활동에 기네스 펠트로와 같은 유명인사가 함께하며 직접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국내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말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48대 49로 부결시켰고 결국 버몬트 주에서 GM 표시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⁶⁾

버몬트 주에서 시행된 GM 표시제도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모든 GM 농산물에 GM 표시를 해야 하며 GM 농산물을 가공한 통조림, 훈제, 조리, 냉동, 발효식품 등은 모두 표시해야 한다. 다만 GM 농산물 함량이 0.9%를 넘지 않으면 표시가 면제된다. 양이 아닌 순위에 따라 면제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음료, 의료식품, 즉석식품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⁷⁾

지금도 면제대상인 음료에 대해 NGO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700여 개 단체가 연합한 ‘저스트 라벨 잇(Just Label It)’은 GM 표시제도를 반대하는 펩시 등의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하고 있다.⁸⁾

6) [정리뉴스] GMO 표기제, 미국의 작은 주가 일으킨 변화, <경향신문> 2016. 4. 5 참고.

7) [미국] 버몬트주, GM식품 의무표시제 법안 통과, 해양수산부 수산·해양 LMO 안전성센터, 2014. 5. 16 참고.

8)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 412-413쪽.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GM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 몬산토 등 GM 농산물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가며 GM 표시제에 반대한다. 실제 이로 인해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된 GM 표시제도 도입 시도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관련 주민투표 전 몬산토, 펩시, 코카콜라, 크래프트, 켈로그 등의 주요 농업 및 식품 기업들은 GM 표시제도 도입 반대 홍보 캠페인에 4,500만 달러를 지원한 반면, 찬성 측은 주로 소비자 단체에서 겨우 8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실제 해당 주민투표는 부결됐다.⁹⁾

최근에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은 'Whole Foods Market's'의 자체 표시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업자, 소매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농부, 종자 육종자, 소비자 등과 제휴하여 자발적으로 Non-GMO 표시를 실시하고 있다.¹⁰⁾ 식품업계 선두주자인 델몬트 사도 GM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델몬트는 직접 “델몬트의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반응과 소비성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¹¹⁾

유럽의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GMO에 대한 반대여론이 매우 강하며 GMO가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표시제 역시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다. 무조건 의무표시이다. DNA 잔류 여부는 관계없다. GM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으면 GM 식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9) [미국] 'G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4500만 달러를 들인 식품 업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2. 11. 15 참고.

10) [미국] Whole Foods Market, 자체 non-GMO 표시 시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9. 7. 7 참고.

11) [미국] 델몬트, GMO 성분 사용하지 않을 것,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6. 3. 29 참고.

유럽의 NGO들 역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유럽 내 GMO 정책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한다. ‘식량과 물 유럽(Food & Water Europe)’ 등은 미국의 사례를 반추하며 GMO와 Non-GMO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GMO와 Non-GMO의 공존은 오염예방 비용 증가 등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유럽은 실패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¹²⁾

준정부기관도 중립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노르웨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GMO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GMO가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 생태계를 비롯해 동물과 인간에 미치는 충격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스위스의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네슬레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최근 네슬레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일부 제품들 중에 포함된 GM 성분 및 첨가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¹³⁾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업체는 GM 표시제도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업체를 대변한다. GM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한 논의는 없다. 최근에는 GM 농산물을 국내 재배하며 GM 기술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GM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면 무조건 GM 식품임을 표시케 하는 GM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 이를

12)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 413쪽.

13) 『[스위스] 네슬레(Nestle), 일부 품목에 GM성분 및 첨가제 제외 발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6. 4. 20 참고.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이 법은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제도개선에 그쳤다.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두 면제 조항 중 “주요원재료” 개념만 삭제됐고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 조항은 남게 됐다. 대부분의 GM 농산물이 수입되어 식용유로 가공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GM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개선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업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미완의 제도개선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다. 소비자, 더 넓게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된 힘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편한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경실련에서 여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 넓게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우리가 매일 만나고 섭취하는 제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현행 제도로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실태를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동시에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섭취해야만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완성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쌓이다 보면 소비자들이 직접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에서 시민들의 움직임은 온도차가 크다. 미국 등에서는 소비자,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자발적인 행동, 조직된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GM 관련 운동은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NGO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분노한 직접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표시법(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 H.R.1599)’이 제정되려 할 때, 시민들은 이 법안이 “미국인들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법안”, 일명 “DARK Act”라고 칭하며 자신의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강력히 반대했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때 수십만에 달하는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에 모여 직접 이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¹⁴⁾ 어쩌면 이러한 강력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행동이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실제 미국에서는 상원 표결 결과를 “소비자들의 승리”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기 전까지는 강한 행동으로 원할하게 이어지질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등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공권력에 어떻게 짓밟히는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지 등의 부정적인 행태만 목격했다.

어쩌면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자평하곤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현재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양이 수입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11만2,430톤으로 전체 수입량 29만7,265톤 중 37%를 차지했다.¹⁵⁾ 우리의 직접적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질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미완의 성공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소비자,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공사례들은 우리에게 시민 직접 행동

14) [미국] 10월 17일, GM표시제 법안 ‘Dark Act’ 반대 집회 예정,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5. 10. 6 참고.

15) “미국산 육류 안전성 논란 ‘재점화’”, 《농민신문》 2016. 3. 11 참고.

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본 척 지나가면 영영 이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가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 아니고 헌법과 다양한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시민들의 역할은 첫 번째로 관심, 두 번째는 참여이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먹어도 잘 먹는 게 아니고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다.●

먹거리와 인권: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

이 글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자료는 유엔에서 작성한 먹거리권과 농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나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점차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도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정책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에서는 매우 생소한 영역이다.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한국인권회의: 지역사회와 인권> 행사에서도 기획 초기에는 누락되어 있다가 필자의 노력으로 농민과 먹거리에 관한 내용이 겨우 개별 분과로 다루어졌고, 인권 담당관을 두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아산시가 최근 공동으로 먹거리와 농민인권 포럼과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는 사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

-
- 편집위원,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장

언에서부터 인정된 권리였다. 먹거리권이 점차 국제사회 속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자 2000년 유엔은 먹거리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제도를 신설하여, 국제사회에서 먹거리권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쓴 장 지글러(Jean Ziegler)가 초대 특별보고관이었다. 먹거리권은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금전적 구매수단을 통해 정기적·영구적·무제한적 접근성을 가질 권리. 물리적·심리적, 개인적·집단적인 충족과 두려움 없는 삶을 보장하는” 권리로 정의되었다. FAO에서 2005년 먹거리권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1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인권, 법률 규범	가이드라인 9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2 경제발전정책	가이드라인 10 영양
가이드라인 3 전략	가이드라인 11 교육과 인식 제고
가이드라인 4 시장 체계	가이드라인 12 국가재정자원
가이드라인 5 제도	가이드라인 13 취약계층 지원
가이드라인 6 이해당사자	가이드라인 14 안전망
가이드라인 7 법적 틀	가이드라인 15 국제식량원조
가이드라인 8 자원·자산에 대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16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가이드라인 8A 노동	가이드라인 17 모니터링, 지표, 벤치마크
가이드라인 8B 토지	가이드라인 18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 8C 물	가이드라인 19 국제적 차원
가이드라인 8D 농식품 유전자원	
가이드라인 8E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8F 서비스	

당초 먹거리권은 주로 먹거리를 먹는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소비 측면)로 출발했다면, 현재의 먹거리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농업 관련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 중이며, 농민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수렴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취지는 지난번 유엔 먹거리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Olivier de Schutter가 작성한 아래 권고안에 잘 나타나 있다.

크게 4개 부분(A.자원 접근성, B.지역 푸드시스템, C.국가전략, D.국제환경)으로 나뉜 권고안에서는, 첫째, 농민들의 먹거리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농업자원(토지/물/숲, 종자, 어업)에 대한 접근권과 결정권 보장이 먹거리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GMO 개발 시대에, 종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을 소농 주도로 보전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둘째, 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차원에서 가공·유통·판매할 수 있는 지역시장의 창출과 지역 소비자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의 푸드시스템(로컬푸드 활성화)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농업자원을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사를 영위하는 농생태학적(agroecological) 농업이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속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계약영농(소위 계약재배)에서의 공정한 관계 확립방안을 제기한다. 그리고 농민과 함께 주요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국가전략 부분에서는 인권침해 문제와 여성의 권리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방안과 평등하고 적절한 영양섭취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먹거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공식품의 영양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통해 문제가 되는 영양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소농이 생태적으로 생산한 로컬푸드)의 우선적 공공조달을 위한 장치를 언급한다.

넷째, 국제환경 부분에서는 농업부문의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에 있어

서 식량가격 급변의 문제, 농업무역의 불공정성 문제, 다국적 농기업들이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농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지금처럼 극소수 다국적 농기업과 금융자본의 손에서 가격이 급변하면서 전 세계 농민과 소비자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농산물 시장과 농업투자를 규제할 국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먹거리권과는 또다른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해 있는 전 세계 농민과 농촌지역 농업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엔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9월 유엔 세계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농민 인권에 관한 중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 농민과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차원의 선언문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전 세계 농민운동 네트워크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의 노력이 많은 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작성된 농민인권 선언문을 2013년 가을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 등 농산물 수출국가와 초국적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먹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고 건강하게 소비하는 사회, 그것이 먹거리권과 농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하는 두 자료에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인다.

유엔 먹거리권 핵심 권고사항^{1) 2)}

유엔 먹거리권 특별보고관이 2008~2013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9차, 10차, 13차, 16차, 19차, 22차 회의)와 총회(63~68차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 권고사항을 요약한다.

A. 자원 접근성 보장	1. 토지 접근성 2. 종자 3. 어업
B. 지역의 푸드시스템에 대한 지원	1. 농업에 대한 재투자 2. 농생태학 3. 소농 지원 4. 계약영농(의 개선) 5. 농업노동자
C. 국가 전략 실행	1. 국가 전략 2. 인권영향평가 3. 여성의 권리 4. 사회적 보호 5. 영양
D. 바람직한 국제환경 조성	1. 식량가격 급변(에 대한 대응) 2. 농업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틀 3. 농산업(agribusiness) 규제 4. 농산연료(agrofuel)(의 규제) 5. 식량원조와 개발협력

A. 자원 접근성 보장

1. 토지 접근성

토지에 대한 상업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 국가가 토지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A/65/281) ‘토지와 기타 자연자원 보유권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³⁾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2014, Final report: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right to food (A/HRC/25/57)

2) 번역: 박준식 (농업·먹거리 분야 전문번역가)

3) Voluntary Guidelines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 (a) 퇴거방지법의 채택과 수용 관련 규제를 개선을 통해 토지보유권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b) 다양한 사용자들의 토지권을 분권화된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습적인 보유권 체계를 강화한다.
- (c) 임차인을 퇴거와 과도한 임차료로부터 보호하는 토지보유권 관련법을 채택한다.
- (d) 공유재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원주민, 어민, 유목민, 목축민 같은 특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한다.
- (e) 퇴거, 토지권의 파괴적인 이전, 토지집중 심화를 초래하지 않는 개발모델을 우선시하고, 모든 토지 투자 프로젝트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준수하게 한다(A/HRC/13/33/Add.2).
- (f) 토지 없는 주민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 (g) 고도의 토지 소유권 집중과 심한 농촌빈곤이 결합되어 많은 주민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농들이 적은 면적의 토지를 과도하게 경작하는 지역에서 토지를 재배분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고, 그 수혜자들이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h) 토지시장을 규제하여, 토지투기로 인해 토지집중이 강화되는 것과 농민들이 빚 때문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종자

미래에 먹거리보장을 달성하려면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뜻하는 농업생물다양성(agricultural biodiversity)을 지원해야 한다(A/64/170). 이는 자가채종 종자와 [농민들끼리 서로] 기부·교환·판매하는 종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 소농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레짐^{regime}의 발전과 국가 수준의 종자정책 실행이 먹거리권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농식품용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⁴⁾ 9조에 정의된 농민권을 실현하는 쪽으로 급속한 진전을 이룬다.
- (b) 식물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말고, 식물 육종가⁵⁾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서 연구자가 예외적용을 받도록 한다.
- (c) 각 국가의 종자 규제(종자인증 체계) 때문에 농민들이 보유한 품종들이 배제되지 않게 한다.
- (d) 지역공동체 종자은행 및 종자시장, 지역공동체 수준의 소농 품종등록부 등과 같은 지역적 종자교환체계를 지원하고 확대한다.

기부자들과 국제기관들은 각 국가가 위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자국의 개발 필요에 부합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독특한 지적재산권 보호 레짐을 수립하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 (b) 고아 작물(orphan crop)⁶⁾ 등 다양한 작물을 기반으로 한 육종 프로젝트와 건조지역 같은 복잡한 농업환경에 적합한 품종들을 기반으로 한 육종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농민참여적 작물 육종을 장려한다.
- (c) 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체계 전체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혼농임업, 향상된 토양관리 기법, 퇴비화, 물 관리, 우수 농법)에 적절한 비율의 자금이 지원되게 한다.

3. 어업

각 국가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증진시키면서, 소규모 어민과 해안 공동체의 권리와 생계가 존중되도록 하고 생선에 의존하는 모든 집단의 먹거리 보장성이 개선되도록

4)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5) 전문적으로 육종에 종사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역자 주)

6) 수확성이 낮아 대형 농기업들이 외면하는 작물.(역자 주)

하는 것이 시급하다(A/67/268).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전통적 방식(artisanal)의 어업 공동체와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기존 권리를 존중한다.
- (b) 내수면 및 해양 소규모 어민이나 그들의 어로구역, [어장] 접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를 자제한다. 다만 해당 어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 (c) 전통적인 어업 공동체의 접근권 보호를 위해 산업적 어업부문을 규제함으로써,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 (d) 어업에서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 (e) 어업 접근성 협약을 맺을 때에는, 수산업의 노동조건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데 합의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산업적 어선들의 어업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해안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 (f)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실행계획'의 내용을 실행한다. 어업 능력 축소, 해양 보호구역 신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를 위한 항구국 조치협정'⁷⁾을 실행한다.
- (h) 어분(fishmeal) 제조에 사용되는 생선의 비율을 줄인다.

B. 지역의 푸드시스템에 대한 지원

1. 농업에 대한 재투자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재투자는 먹거리권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A/HRC/12/31).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가장 취약한 집단에 혜택을 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7)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b) 공공재 공급을 우선시한다. 저장시설, 농촌지도서비스, 통신수단, 신용·보험 접근성, 농업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 (c) 농촌빈곤 수준이 높고 다른 부문의 고용기회가 없는 국가에서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농업체계를 수립하고 증진한다(A/HRC/13/33/Add.2).
- (d) 투자협정이 지역 생계선택폭의 확대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양식에 기여하게 한다.

2. 농생태학(agroecology)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양식으로의 이행은 미래 먹거리 보장에 매우 중요하며 먹거리권의 필수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농생태학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A/HRC/13/33/Add.2). 각 국가는 다음을 통해 농생태학적 관행의 채택을 지원해야 한다.

- (a) 종자 및 품종들과 농생태학적 방법들이 가진 상호보완적인 장점들을 활용하고, 양쪽에 자원을 할당하며,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비료 보조금을 농장의 농생태학적 투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지속가능성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 (b) 기존 농민 조직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수준에서의 분권화된 참여적 연구예산을 늘린다.
- (c) 현장 수준, 농장 및 지역공동체 수준, 국가 및 하부행정단위 수준에서의 농생태학 연구예산을 늘린다.
- (d) 고전적인 농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성과 기준(소득에 대한 영향, 자원효율성,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대한 영향, 수혜자 역량강화 등)을 기초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3. 소농 지원

모든 사람이 먹거리권을 누리게 하려면 소농들이 생산품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A/HRC/13/33). 이를 달성하려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지역시장과 국내시장을 강화하고, 교역채널과 유통채널이 지속적으로 다각화될

수 있게 지원한다.

(b) 농민조합과 기타 생산자조직의 설립을 지원한다(A/66/262).

(c) 정부기관 산하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마케팅보드⁸⁾를 설립하거나 보호한다. 이 마케팅보드에는 관련 생산자들이 강력하게 참여해야 한다.

(d)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농산물 조달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입찰자만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농을 우대하는 공공조달을 장려한다.

4. 계약영농

계약영농과 그 밖의 사업모델들이 먹거리권을 지원하게 하려면(A/66/262), 각 정부는 사업모델의 확장과 복잡성에 맞춰 규제 감독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계약의 핵심 조항들을 규제한다. 가격 고정, 품질 산정, 투입물 제공 조건, 자가 소비용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일정 비율 농지 유보 등이 대표적이다.

(b) 계약영농의 노동조건을 모니터링한다.

(c) 계약영농에 대한 지원을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같은 환경조건 충족과 연결시키거나, 더 지속가능한 유형의 영농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사업계획의 채택과 연결시킨다.

(d) 생산자, 가공업체, 소매업체, 소비자가 먹거리사슬의 공정성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생산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받게 한다.

5. 농업노동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과 적절한 건강·안전 조건을 보장하려면(A/HRC/13/33), 각 국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농식품부문과 관련된 모든 ILO 협약을 비준하고 최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

8) marketing board

이상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정하여, 농업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다.

- (b) 농업부분 노동 감독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숫자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소로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함으로써 농업노동자들이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점차 받을 수 있게 한다.

C. 국가 전략 실행

1. 국가 전략

각 국가는 적절한 먹거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이 전략에는 먹거리 불안정 상태 파악, 먹거리권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채택, 책임성 보장 메커니즘, 그런 법률 및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 과정에 권리 보유자,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수립이 포함되어야 한다(A/68/268). 국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먹거리권이나 식품·영양보장에 관한 전체 틀을 제공하는 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 더욱 이상적으로는 국가의 헌법에 먹거리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 (b) 다부문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정부 부서들과 기관들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형성과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c) 적절한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 (d) 국가 법원과 국가 인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사⁹⁾와 지역 수준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영향평가

9) social audit

먹거리권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한 국내 정책이 무역, 투자, 개발, 인도주의적 원조 같은 분야의 외부 정책과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각 국가가 이런 정책에서 먹거리권이 완전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정부·비정부 행위자들로부터 얻은 자문을 기초로 ‘인권영향평가 지도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사전·사후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A/HRC/19/59/Add.5).

3. 여성의 권리

여성의 먹거리권 보호를 강화하려면(A/HRC/22/50),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법의 모든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기인한 차별에 맞서 싸우며, 양성 평등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조치를 활용한다.
- (b) 기존의 성별 역할로 인해 여성이 겪는 시간·이동성 관련 제약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고용과 사회보호에 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성별 역할을 재분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 (c) 모든 법, 정책, 프로그램에 젠더에 대한 관심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게 한다. 적절한 경우 이와 관련된 목표 설정과 달성에서 진전을 보인 공공기관에 보상을 주는 방안도 개발한다.
- (d) 완전한 양성평등을 진전시키는 다부문·다년간 전략을 채택하고, 독립기관이 먹거리 보장의 달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 구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4. 사회적 보호¹⁰⁾

사회적 보호 조항은 먹거리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A/68/268, A/HRC/12/31). 각 국가는 다음을 해야 한다.

- (a) 항구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설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회보장

10) social protection. 이 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뜻한다.(역자 주)

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b)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기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채택되게 한다.
- (c) 국가 사회적 보호시스템에 따른 혜택을 법적 권리로 정의하여, 개별 수혜자가 사회 프로그램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알고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고충해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d)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기존의 성별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A/HRC/22/50).
- (e) 전지구적인 재보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각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건설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유인을 창조한다.

5. 영양

지속가능한 식단을 장려하도록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키고 2가지 유형의 영양실조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려면(A/HRC/19/59), 각 국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HFSS 식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 소금,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식품 마케팅에 관한 법적 규제를 채택하고, 다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제한한다.
- (b) 과일·채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한 식단에 관한 교육 캠페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량음료와 HFSS 식품에 세금을 부과한다.
- (c) 트랜스지방산을 다불포화지방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한다.
- (d) 기존의 농업보조금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배분양상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기타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양가 높은 로컬푸드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e) ‘모유 대체물의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유 대체물, 식품, 비알코올성 음료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에 관한 WHO 권고사항을 국내 법률에 도입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민간부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모유 대체물의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약'을 모두 준수하고, 모유 대체물, 식품, 비알코올성 음료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에 관한 WHO 권고사항도 준수한다. 비록 지역수준의 집행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 (b) 지역 생태계와 자원이 지속가능한 식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영양 기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개입에서 지역 수준의 해법이 우선시되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한다.
- (c) HFSS 식품의 공급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늘리며, 식품가공에서 트랜스지방산의 사용을 점차 없앤다.

D. 바람직한 국제환경 조성

1. 식량가격 급변

국제사회는 국제무역 관련 위험을 더 잘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가장 개발이 덜 된 순식량 수입 개도국들이 국제시장 가격 급변에서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한다(A/HRC/12/3).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지역, 국가, 대륙 수준의 식량 비축창고 구축을 장려한다.
- (b) 지구 수준의 곡물 비축본 관리를 향상시킨다. 투기 유인 감소를 위해 지구적 곡물 비축분에 관한 정보를 향상시키고 조율을 강화한다.
- (c) 긴급상황을 위한 비축창고를 구축하여,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 (d) 농상품 지수기금(commodity index fund)을 활용하여 농상품 선물시장의 건강하지 못한 투기와 맞서 싸울 방법을 모색한다.

2. 농업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틀

먹거리권을 실현하려면 더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무역규칙을 설계해야 한다. 먹거리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국가가 야심찬 먹거리보장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행위가 다자간 무역레짐과 대륙·쌍무 무역협정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공적 식량 비축창고, 한시적 수입 제한, 활동적인 마케팅보드, 안전 망 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A/HRC/10/5/Add.2). 이와 관련해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국제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소농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 필요 충족에 필요한 먹거리 생산능력을 기른다.
- (b) 공급 관리 프로그램 같은 필수적인 완충 도구를 유지하여, 국제시장 가격 급변에서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
- (c) 국가 의회가 무역 협상에서 정부가 채택한 입장에 관한 정기적인 청문회를 열도록 장려하고, WTO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되는 이런 청문회가 먹거리권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d) 개혁 프로그램이 NFIDC(순식량수입 저개발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마라케시 각료회의의 결정사항'을 완전히 실현하고,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WTO 농업협상(AoA) 개혁과정이 NFIDC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도록 한다.

3. 농산업(agribusiness) 규제

각 국가는 지구적 먹거리 공급사슬에서 농산물 구매자, 가공업체, 소매업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다자간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들 행위자들이 설정하는 기준과 구매정책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A/HRC/13/33). 구체적으로, 각 국가는 농산업 부문의 과도한 집종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 관련 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문의 과도한 구매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경쟁 레짐이 구축되어야 하고, 공정경쟁 관할 기관에 반경쟁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공급업체가 주요 구매자의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게 해야 한다.

농산업 부문의 민간행위자들은 구매력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관행들(국가가 식별한다)을 자제해야 하며,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 (a) 지구적 연합을 통해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협정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

력한다.

- (b) 공급사슬 내의 ILO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른 주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자신의 공급업체들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c) 공급사슬 차원의 학습에 참여하여, 관련된 모든 주체(소규모 생산자를 포함)에게 공급사슬 참여가 득이 되게 한다.
- (d) 식품안전, 노동기준, 환경기준 설정과 집행에 소농을 참여시킨다.
- (e) 상품진열 면적 증대와 정보 캠페인 확대를 통해 공정무역을 증진한다.

4. 농산연료(agrofuel)

국제사회는 농산연료에 대한 의견일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일치는 농산연료 개발이 주식용 농상품(staple food commodity)의 국제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농산연료 생산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게 하고 그로 인해 생산국가의 발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작물기반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공적 인센티브는 반드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토지나 기타 자원에서 식량 생산과 경쟁하지 않는 향상된 바이오연료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5. 식량원조와 개발협력

국제원조는 지금도 먹거리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A/HRC/10/5). 공여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원조 수준(공적개발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린다.
- (b) 개도국 필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 (c) 개발협력정책을 [수혜국의] 먹거리권 실현 국가전략과 일치시켜, 이들 정책에서 소유권 원칙을 제대로 존중한다.
- (d)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먹거리권을 증진한다.

농민인권선언(안)[•]

제1조 농민의 정의

1. 농민은 식량 생산 또는 여타의 농업 생산물을 통해 토지와 자연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대지의 사람들이다. 농민은 토지를 일구고 대체로 가족노동과 여타의 소규모 형태의 조직된 노동에 의존한다. 농민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경관과 농업-생태 시스템을 돌본다.
2. 농민이란 용어는 농촌에서 농업 또는 비슷한 직업과 관련한 농사, 소 사육, 목축,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토지를 경작하는 원주민이 포함된다.
3. 농민이란 용어는 또한 땅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주의 사람들이 무토지자로 간주되며 생계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a. 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농업노동자, b. 어로활동, 지역시장에 판매할 수공업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는, 보유 토지가 적거나 전혀 없는 농촌의 비농업 가구, c. 목축민, 유목민, 화전민, 수렵민과 채집민 같은 농촌의 다른 가구 그리고 유사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

제2조 농민의 권리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여타의 국제인권법에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자유롭고 모든 여타 사람들과 동등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 특히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3년 6월 20일

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구상, 의사결정,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농민 자신의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식량주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생명권과 알맞은 표준생활을 누릴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를 받지 않는 물리적 무결권을 갖는다.
2. 농민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소득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는 알맞은 표준생활권을 갖는다.
4. 농민은 적절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충족한 음식을 가질 권리와 전통적 음식 문화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소비할 권리, 이것을 그들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권리,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안전한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과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9. 농민은 가능한 최적표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또한 전통의약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10. 농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살충제와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의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11. 여성농민은 가정폭력, 육체적, 성적, 언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12. 여성농민은 그들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그들 육체의 이용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3. 농민은 그들이 갓길 원하는 아이의 수를 조절하고 그들이 사육을 원하는 피임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4. 농민은 그들의 성적 그리고 재생산의 권리를 완전히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토지와 영토를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주거와 영농을 위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토지를 애써 가꾸고, 그들의 토지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을 하고, 물고기를 기를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남겨놓은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삼림과 어장을 보호하고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농민은 그들의 토지와 영토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관련 농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와 통보 그리고 승인 후 공정한 보상과 선택이 없다면 어떠한 이주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6. 농민은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대토지소유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토지는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토지소유 제한제는 토지 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 종자, 전통지식, 영농활동에 관한 권리

1. 농민은 그들이 심기를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경제적·생태적·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작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농민은 농업의 산업모형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에서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생산물과 수집물 그리고 농업, 어업, 축산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그들 자신의 기술,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의 필요로 그들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그들 자신의 수확물을 기르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종자를 주거나 판매하는 등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농업생산 수단을 가질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와 도구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은 그들의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적 지원, 생산 도구 그리고 다른 적절한 기술을 습득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에서 관개와 농업생산을 위한 수리권을 갖는다.
4. 농민은 지역시장에 그들의 생산물을 팔기 위해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지역 및 정부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과 관련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정보 획득의 권리

1. 농민은 자본, 시장, 정책, 가격 그리고 기술을 포함해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해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농산물의 가격과 시장을 결정할 자유

1. 농민은 그들 가족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우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그들 가족의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그들의 생산물을 저장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전통적인 지역시장에서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그들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획득하고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그들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그들이 생산한 수확물에 대한 품질 평가에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9조 농업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

1. 농민은 농민의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농업에서 지역 지식을 발전시키고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의 농업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농민의 존엄성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생물다양성을 지킬 권리

1. 농민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작물, 식품 그리고 의약품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 농민공동체가 소유하고, 유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상품, 서비스, 자원 그리고 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체계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 지원으로 실시되는 농민단체의 지역보장정책은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환경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생태적 부채 그리고 그들의 토지 및 지역에 대한 역사적이며 현재적 처분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은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현지, 지역·전국, 국제적 차원에서 이의 제기, 청원, 동원을 포함하여 전통과 문화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농민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기타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 지역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화적 문헌, 지역 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권리요구와 투쟁이 범죄화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억압에 저항할 권리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정의에 접근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총선 이후 :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위험 신호, 누가 ‘돈보다 생명’을 외면하고 있나

4월 14일 정오, 20대 총선을 치른 바로 다음날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녹색당 목요탈핵행동을 다시 열었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금지를 위해 1년 넘도록 매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어온 캠페인이었지만, 정작 선거 시기에는 ‘정당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선거운동’만 허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선거법 탓에 목요탈핵행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나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절대다수 유권자들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소수 원외정당 녹색당의 당원으로 마음을 다해 선거를 치렀다. 당원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지 한 표를 호소하는 것뿐 아니라 ‘녹색당이 하려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자 하는지’를 직접 자신의 말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다. 제도가 만든 문턱인 정당득표 3%를 넘어 유의미한 대안정당으로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했

* 녹색당 정책위원장

지만 정당득표 182,301표로 득표율 0.76%를 얻는 데 그쳤다. 언론에서도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위기와 확장성이 감지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미미한 숫자였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외침이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시민들의 마음에 온전히 가 닿지 못했다.

4월 14일 밤, 바다 건너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강력한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 발생 지역 인근 센다이川内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없다며 외면한 채 가동을 지속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5년, 국가도 정치도 ‘원전 제로’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전기는 남아도는데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계속 강행할 태세이고, 대기업 건설업체는 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돈벌이로만 눈독을 들인다. 고리·영덕·울진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핵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선 위험지대가 되었다. 영덕에서 밀양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고층빌딩 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 닫힌 회의실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안전으로 다루고 있다.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 정치의 역할

4.13 총선 직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모인 광화문 광장에는 눈물인 듯 어두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광장이 넘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까지 가득하도록 모인 사람들은 묵묵히 그 비를 맞으며 함께 기억하고 연대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이 하나의 지속적 성격(ethos)이나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은 사회에서는 결코 참된 의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참된 나라는 오직 고통의 연대를

통해서만 생성된다.¹⁾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정치와 국가 그리고 사회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제1야당은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2주기 문화제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는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갈등은 덮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추모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 비뚤어진 이념 갈등으로 왜곡할 일이 아닐 뿐,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면,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밀양 765kv송전탑반대투쟁 행정대집행이 있었다. 그야말로 국가 폭력이었고, 선거 직후 전격적으로 강행되었다. 표는 받았으니 가차 없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2년 전 이맘때 밀양대책위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은 부북면 129번 현장, 단장면 용회마을 뒷산 101번 현장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버텼다. 밀양대책위 분들은 지금 행정대집행 2년을 기억하는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10년을 지속해 온 밀양의 싸움을 두고, 사람들은 이미 진 싸움 아니냐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되묻는다. 과연 싸움은 끝났고, 밀양은 패배한 것일까? 밀양 할매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농사를 돌보는 틈틈이 싸움을 살아내고 있다. 밀양을 넘어 전국을 돌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고, 상처가 있는 곳곳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을 보듬는다.

지금 사회 곳곳이 재난과 같은 상황에 몰려 있다. 생각해보면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하는 시민들, 밀양765kv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1) 김상봉, 『철학의 헌정 : 5.18을 생각함』, 도서출판 길, 2015.

보여준 모습들이 재난 속에서 피어난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이자, 민주주의와 삶의 정치로 진화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다. 정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연민과 정의의 직물을 짜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이자, 심층적으로 하나의 인간적인 기획이다. 마음이 부서져 흩어진 게 아니라 깨어져 열린 사람들이 정치의 주축을 이룬다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위해 차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힘을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다.²⁾ 고통 받는 시민들을 끌어안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무너져 내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정의가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뭉이 없는 이들의 민주주의, 비통한 이들을 위한 정치가 오히려 더 간절하다.

탈성장 대안사회의 밑그림을 그리자

이번 2016년 총선에서 녹색당 정책공약의 방향은 '탈성장의 정치전환'이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아프고 희망을 놓아버린 한국 사회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장에만 맞춰진 경제중심주의가 바로 고통의 핵심이라고 진단함으로써 곳곳에서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균열을 내고자 했다.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을 단 <녹색당 2016년 총선 정책공약>은 아직은 어설피고 듬성듬성 비어있는 구멍들이 있지만, 생태적 전환사회라는 그린프린트_{green-print}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시도였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탈성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성장이 멈추면 삶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김찬호 역, 글항아리, 2012.

이미 지구는 기후변화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자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너무나 익숙하게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말 자체도 형용모순이 아닌가. 위험사회를 만들어내는 갖가지 요소들이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위기에 대한 성찰 능력이 퇴화³⁾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성장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 리처드 하인버그는 ‘평형경제(equilibrium economy)’에서 더 나아지는 성장 이후의 삶을 제시하면서, 성장이 끝나도 전환을 향하여 삶은 계속된다고 말한다.⁴⁾ 게다가 ‘탈성장’ 자체가 모든 과학을 포기한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녹색당이 외치는 생태적인 전환이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성장’이라고 정의하면서, 멈춰야 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주의적인 성장인 것이고, 인간은 계속 성장(성숙)해야 하니 ‘낮아지는 성장’⁵⁾이라는 말로 바꿔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처음도 아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에서 ‘정지상태(stationary state)’를 고찰하고 있다. 정지상태란 인간의 본성에 최선의 상태로 아무도 빈곤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더 이상 부유해지려는 욕망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전진하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들 때문에 뒤로 내팽개쳐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아무도 할 까닭이 없는 상태이다. 정지상태에서도 예를 들어 기술이 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다고 이해했다. 그는 “우리의 후손들은 필연성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게 되기 훨씬 전에 정지상태에 만족하기

3) 올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4)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노승영 역, 부키, 2013.

5) “‘왜 녹색당 찍냐고?’ ‘확 뒤집어야 사니까!’”, 〈프레시안〉 2016. 4. 9.

를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바란다”⁶⁾고 적고 있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계삼이 말하는, 경제적 빈곤과는 다른, 존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⁷⁾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열쇳말

‘탈핵’도 다르지 않지만, 녹색당은 칸막이를 넘어 부문별 정책의제를 가로지르는 정책통합 키워드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제안하고 있다. 여전히 생소하기도 한 개념인 기본소득은 생각보다 단순명료하다. 국가가 각 개인의 자산 보유 정도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공유재(the Commons)로부터 나오는 ‘시민배당’ 성격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안정고용하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그 자체가 ‘시민권’이자 모두를 위한 비빌언덕이다. 2012년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제안한 이래 토론과정을 거쳐 2015년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핵심 총선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이 제안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지난 6월 5일 표결 결과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결과는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지층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오는 7월에는 서울에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

6)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④: 사회철학에 대한 응용을 포함하여, 박동천 역, 나남, 2010.

7) 이계삼, 『고르게 가난한 사회』, 한티재, 2016.

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제출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녹색당이 새롭게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대체 방안이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가능한 사회’의 열쇳말이 되길 바랐다.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핵심은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지만, 기본소득 논의가 좁은 정책의 틀에 가둬져 “그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끄럽게 토론되어야 한다. 생태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탓에 앞으로 내용을 채우고 아귀를 맞춰야 할 지점들이 많겠지만, 지금의 한계상황에 균열을 내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상상력을 전인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든 ‘기본소득통장’은 제법 화제가 되었다. 홍보물로 만든 기본소득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찾아온 할머니도 계셨고, 녹색당 사무실로 문의전화화를 주신 분들도 많았다. 다들 당장 기본소득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보통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그 특징의 하나로 ‘노동과 소득의 분리’를 꼽는데, 개인적으로는 물신사회에서 너무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 ‘삶과 돈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싶다. 돈을 통해 돈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나 할까. 한국에서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중에 영국 초기 여성참정권 운동을 다룬 <서프러제트>를 보면 유리창을 깨거나 기차역에 불을 지르는 등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하지만 그녀들이 그런 투쟁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유리창을 깨는 것’은 단지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타격, 재산권에 맞선 인간의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재산권에 맞서서 인간의 권리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재산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법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의 실제 가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재산은 모든 인간의 가치

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생명, 건강, 행복, 그리고 여성과 아동 등 인류의 가치는 재산이라는 신에게 무자비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⁸⁾

마냥 순진하게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를 지상낙원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녹색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정책도 완전무결한 청사진은 못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은 변화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조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녀들이 던졌던 돌처럼,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에 균열을 내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체제, 신뢰를 발명하자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고, 오늘 없이는 내일도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 녹색당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재난인 3.11 사태가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밑바닥에서부터 사회를 바꾼다’⁹⁾는 체제 전환(transition)을 추구하고 있다. 2016년 총선을 준비하면서도 단지 목전에 둔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정당’의 정치적 역할을 고민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녹색당은 그만한 정치적 신뢰와 지지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탈성장’, ‘기본소득’과 같은 녹색당의 제안에 대해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전히 ‘하면 좋은

8) 애들린 팅크허스트,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김진아·권승혁 역, 현실문화, 2016.

9) 오구마 에이치, 『사회를 바꾸려면』, 전형배 역, 동아시아, 2014.

것,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¹⁰⁾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신뢰'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신뢰(trust)'의 특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결단의 계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뢰할 수 있는가/할 수 없는가'가 아니라 '신뢰하는가/하지 않는가'가 중요하고, 결단이 없으면 신뢰는 생겨나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맨 처음 필요한 것은 '선의의 정치권력'이다. 타인 자유의 증대가 자기 자유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 사회, 즉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창출되어야 한다. 만약 창출할 수 없다면, 발명되어야 한다.¹¹⁾

경제 위기와 세계화와 생태 위기의 지구화 시대를 맞아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엄중한 상황에서, 녹색에 내재된 정치적 상상력을 새롭게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은 곧 정치다.¹²⁾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미 그 거대한 힘을 풀뿌리시민들이 품고 있다. '이상향이 없는 세계지도는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10)서영표, "기로에 선 영국녹색당-운동과 제도정치, 녹색과 적색 사이의 긴장",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6권 2호, 2012.

11)요시다 도오루,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김상운 역, 바다출판사, 2015.

12)정규호, "녹색 전환의 과제와 '살림의 정치'", 『녹색당과 녹색정치』, 아르케, 2013.

협동조합,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의 주체^{•••}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오랫동안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 봉착하며 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후 그 한계는 보다 더 분명히 나타났다. 주요한 변화 외에도, 한국의 인구는 2020년부터 줄어든 것이며, 2050년에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의 세 배가 될 것이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간주되는 이 초고속 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에 필요한 균형을 깰 것이다. 보건정책의 측면에서는 향상된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 모델은 여성의 노동통합이나 가족 간의 연대 유지와 같은 측면에서는 더욱 염려스러운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높은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근로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며, 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짐으로써 사회결속이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에 의해 한국의 불평등 상승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바도 있지만 사

• Eric Bidet. 프랑스 르망^{Le Mans}대학 경제학과 교수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에릭 비데 교수가 모심과살림연구소의 요청을 받아 보낸 것으로, 2016년 7월 RECMA(사회적경제 국제리뷰)지에 발표할 원고를 수정한 것임.

실 그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그 문제를 강조하였으나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기술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보아 이제껏 추구해 온 모델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모델은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공공부문의 개혁이 일부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태껏 유지해 온 성장모델의 토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은 - 꼭 탈성장이 아니더라도 - 최소한 다른 성장, 즉 더 절제되고 평등하며 지역의 문제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른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살림운동 및 몬드라곤에서 영감을 받은 초기 노동자공동체들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안의 길이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이 운동들은 다른 개발의 원칙에 부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90년대에는 아주 소비적이고 시장화된 보건시스템에 대안 논리를 제공하는 초기 의료협동조합¹⁾의 경험들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의 위기는 또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참여주의, 근거리 환경문제 및 지역문제를 중시하는 새로운 운동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태동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공공정책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들은 탈성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른 성장 형식을 구현했다. 그중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넓게는 사회적경제가 핵심적인 초석이 되었다. 협동조합이 오랫동안 준정부조직의 이미지로 남아있었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변화발전은 아주 흥미롭다.

불과 20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가 드러났으며,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활동이나 사회문제와 연관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강력한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1) 필자가 말하는 의료협동조합은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들 조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대부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다.(역자 주)

최초의 중요한 조치는 2000년대 초 최저소득보장정책으로 자족(self-sufficiency)의 원칙에 기초한 전국적인 자활지원조직의 설립이다. 이후 2006년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이를 고용정책의 지렛대로 삼고자 했으며,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모델의 기업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정부 부처들이 전국적인 망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조직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았다. 여러 자치단체들(광역시 및 기초 등)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고용, 농업, 대인서비스, 학교급식, 주거 등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15년여 동안 추진된 정책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공부문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아주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의 역동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 모델은 처음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이 공적자금과 민간의 자원을 합하여 창업지원이나 전문기술 습득 혹은 비숙련노동자들의 지원을 통한 실업 탈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역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를 보면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조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참여적 지배구조 -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의사결정권 - 를 가지는 기업모델(소비협동조합²⁾ 및 일반협동조합)까지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 실로 대단한 듯하다. 이 글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기업 모델로서 협동조합 모델이 인정받게 된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이 글에서는 국제협동조합운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소비협동조합으로 표현한 필자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역자 주)

소비협동조합의 발전

한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며 지속되어 온 협동조합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 정부 주도로 최초의 법적 지위가 도입되어 1차산업 부문 협동조합(농업, 축산, 어업, 산림)의 틀이 마련되었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2차 산업부문(농식품산업) 및 3차 산업부문(은행)으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 온 이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의 이미지가 - 특히 농업 분야에서 -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용되며 선거전략에 복무하는 일종의 공적기구처럼 준정부조직이 연상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전통적 협동조합들은 1980년대 말부터 정치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정부의 후견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들은 한편으로는 공기업 모델의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수익이 은행 및 금융활동에서 오기에 전통적 은행의 모델의 영향을 받아 아주 관료적인 협동조합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협동조합 모델과 다른 비전을 구현한 첫 협동조합운동이 바로 소비협동조합이다.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 대부분 단발적인 시도로 끝난 경험이 있는 후, 1980년대 중반에 환경과 소농과의 연대, 지역사회 개발, 소비자의 권리 등을 강조하며 참으로 대안적인 비전으로 공식화된 모델이 발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들 협동조합들은 프랑스의 비오코프Biocoop네트워크처럼 유기농업에서 나온 제품을 진흥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한국적 소비협동조합의 방향이 설정되는 데에는 1960년대부터 원주에서 발전된 생각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생산협동조합 및 ‘농기구공동이용협동조합’(프랑스의 쿠마CUMA³⁾처럼), 또는 탄광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고 그들의 권

3) Coopérative d'Utilisation de Matériel Agricole: 농기구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함께 투자한 농민들의 농기구이용협동조합. 쿠마는 평균 1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2006년 기준 프

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소비협동조합의 원칙에 영감을 받은 다양한 시도도 사실 원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보면 19세기 유럽의 선구적인 협동조합의 경험(로치데일, 라이파이젠, 뷔세 등)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민계층의 필요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사회정의 실현에 영감을 받은 정치프로젝트를 담보한 사회운동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필요와 그들이 제안한 대응책은 한 세기 반 전 유럽에서 대두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전통적 농업협동조합들이 주축이 되었던 대량의 화학비료 사용과 그 결과로 생긴 보건문제(공해, 질병) 및 사회문제(농촌인구유출)를 고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은 지배적인 성장모델을 비판하는 최초의 운동을 대표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한국의 소비협동조합과 환경운동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두 방향을 하나의 운동으로 구현한 것이 한살림운동이다. 한살림이 제안한 대안은 가까운 농업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소생산자가 결사하여 참여적인 지배구조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관계 형성이라는 형식을 띤다. 근본적인 생각은 1987년에 발표된 ‘한살림을 시작하면서’에 나와 있듯, 생산자와 소비자가 책임을 나눈다는 것이다 :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계를 책임진다’. 이후 한살림은 건강과 환경을 걱정하는 도시의 소비자들과 대량의 화학비료 사용에 의지한 집약적 농업시스템을 벗어나고자 한 소생산자들 간의 사회관계를 건설하려는 생각에 근거하여 서울과 대도시에서부터 발전해 나갔다. 한살림이 탈성장운동이다 혹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직거래에 가치를

랑스에는 13,100개의 쿠마에 230,000명의 조합원이 6,450명을 고용하고 있다.(역자 주)

두고 지역개발을 보장하며 건강과 환경의 문제에 부응하는, ‘다른 생산과 다른 소비’의 형태를 추구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살림이 밟아 온 길은 프랑스에서 발전되어 온 비오쿱Biocoop 네트워크나 ‘농민 농업유지를 위한 단체(AMAP)’와 분명히 유사성이 있는데, 이 조직들은 일본의 ‘제휴(Teikei, 提携)’라는 직거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한살림은 일본의 소비협동조합운동, 특히 ‘생활클럽(Seikatu Club)’의 영향을 더 받았는데, 조합원 구성 및 - 비록 지금이나 과거나 리더들은 남성이지만 - 다수 여성 자원봉사자에 근거한 활동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1990년대 말 소비협동조합의 제도화와 이후 10년간 아이쿱과 두레의 등장과 더불어 이어진 대단한 성공은 협동조합의 이미지가 바뀌는 데 기여했다. 이들 조직 덕분에 협동조합이 이제 유기농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소생산자의 보존과 전환, 학교급식 및 직거래와 같은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자율적인 특별한 기업모델로 점차 인식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협동조합(건강협동조합)⁴⁾의 경험은 소비협동조합의 독특한 형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6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더욱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의료협동조합의 상징적인 경험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한국은 사회적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인 틀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특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리든 비영리든

4) 필자가 말하는 의료협동조합은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들 조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대부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다.(역자 주)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활동하는 기업모델로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 - 을 인정요건의 관문으로 둔다. 이러한 조건은 프랑스에서 2014년에 도입된 사회연대경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유용성(*utilité sociale*)'이라는 개념과 아주 가깝다. 의료협동조합은 육성법의 인증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조직형태이다.

의료협동조합의 실천은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인구집단에 다가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조합원)들에게 한국에서 보통 하루 평균 약 70건의 진료(2010년 연구)를 맡고 있는 다른 의사들보다 더 시간을 내어주는 주치의모델을 권함으로써 사회관계를 창출하는 가까운 의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대안적 의료활동의 비전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은 항생제 이용 감소의 필요성(한국의 경우 가장 소비가 많은 국가에 속함)과 예방 및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은 돈은 좀 덜 벌지 모르지만 의료진이 일과 여가(혹은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의료 실천활동의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소득과 여가의 전통적인 조정방식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의사에게 있어 의료협동조합에서 일한다는 것은 환자와의 대화시간을 거의 배려하지 않는 업종의 관행과도 단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 의료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의료행위 및 진료서비스 제공의 대안적인 접근법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말 의무질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이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점차 확장해왔다. 개혁의 과정에서 높은 보장률(국민의 97%)과 낮은 의무분담금(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같은 비율로 급여의 약 6%) 방식이 선호되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진료보장 수준은 높지 않으며 피보험자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7.5%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 35%). 또한 민간재정에 속하는 의료비 지출은 45%에 이른다(OECD 평균은 28%). 의료서비스 제공은 거의 대부분 영리기관

(일반병원과 전문클리닉)이나 비영리기관(주로 재단이나 일부 의료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을 넘어서지만 환자 부담 수준(OECD 국가 중 상위 2번째 수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항생제 처방, 의료인당 진료 수, 평균 입원 기간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의료협동조합이 제안하는 모델은 건강과 빈곤에 관련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주민참여 방식을 권장하는 다른 접근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사회적 배제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예방을 강조하며, 환자와 의료보험시스템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에서의 건강 및 사회결속의 문제에 지역사회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는 건강서비스 제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면서 호혜적 이익을 실현하고, 의료시스템에서 배제된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및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치료를 통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공익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모델이다. 한국 의료협동조합의 실천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프랑스의 공제조합이 상호진료센터나 최근의 일반의약품을 위한 모임 등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목적과도 접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회적 목적으로 인하여 의료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의료협동조합 모델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우선 의료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쯤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인증사회적기업에 비해 더 지속가능한 조직 형태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인증사회적기업에 비해 참여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협동조합은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모가 꽤 크며,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를 적용하는 사회적기업모델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의료인, 시민사회단체, (때로는 장애인, 노인, 여

성, 농민, 빈곤층 등 사회배제계층을 대표하는) 이용자와 같은 상이한 조합원 범주를 운영 및 관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초로 다중이해당사자구조를 시도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의료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주 상품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시스템 안에서 참여지배구조를 실천하는 드문 시도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참여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및 고수익 창출을 위한 의료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협동조합은 가치도 목적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조직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라 ‘거짓’ 의료협동조합과 ‘참’ 의료협동조합이 구별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⁵⁾

협동조합 모델의 법적인 인정

2012년에 도입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우선 한국 정부가 ‘고용유발계수’⁶⁾에 근거하여 잠재적으로 협동조합 모델을 고용창출 모델로 삼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투자자본 대비 고용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협동조합기본법 또한 실업 극복과 고용창출의 목적을 가진 이

5) 이는 기존의 유사의료생협의 비리로 인하여 의료생협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협동조합기본법 도입 이후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속 조직들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명 사이비 의료생협과 구별될 수 있게 된 사실을 말한다.(역자 주)

6)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 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작·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뜻하며 한국은행이 2005년부터 산업별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2010년 전 산업평균 고용유발계수는 8.3명인데 이는 10억 원어치의 제품이 팔릴 경우 고용이 8.3명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의 고용유발계수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5년 10.1명에 비해 17.8%나 줄었다. ‘취업유발계수’라고도 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역자 주)

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넘어서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기본법 시행령은 우선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며(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의 책임하에 3년마다 변경하여야 하며(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 위원회), 심의위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및 협동조합에 관한 전문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참여한다. 기존 협동조합운동 내 칸막이현상이 심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법적 틀 속에 있는 기존의 협동조합운동과의 협동이 가능할지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법은 1차 산업, 은행, 소비자협동조합을 관장하는 기존의 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두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분한다.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협동조합이다.

기본법 시행령은 많은 부분(제11조~제23조)을 사회적협동조합에 할애했다. 제12조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른 조합원 범주에 속하는 이 중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프랑스의 공동체이익협동조합(SCIC)과 같이 다중이해당사자 구조에 해당하지만 이해당사자 범주에 지자체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자체를 조합원으로 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4조(주 사업 판단기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활동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지역재생, 일자리 유지, 지역환경 개선,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의료,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2014년에 도입된 사회연대경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유용성(utilité sociale)'을 보이는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의 유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잉여를 분배할 수 없으며, 잉여의 최소한 30%는 적립해야 한다. 일반협동조

합은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을 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부처의 인가가 필요하며 비영리성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조치에 따라 의료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일반협동조합에 관해서 주목해볼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한국의 법체계에서 도외시되었던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이 최초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법의 정신을 보면, 노동자라 함은 피고용인으로서의 노동자와 피고용인이 아닌 노동자(독립노동자나 개인사업자 등) 둘 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8년 법에 의하여 노동자협동조합에 특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노동자협동조합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의미 있는 인정 조치라 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노동자조직에 대해 아직도 반감을 가지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이 오로지 도시빈민이나 비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전망을 가지는 조직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모든 종류의 활동에 적합한 기업 모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여했다.

2016년 초 현재 약 9천 개의 신규협동조합이 등록되었는데, 월평균 250개가 설립된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쇼크’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현상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등록된 협동조합의 절반만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중 상당수(약 2/3)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개인사업자, 혹은 독립노동자 협동조합으로서 업종단체 협동조합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조직은 대개 신규창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경우이다(이러한 사실이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모델이 가지는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뜻은 아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과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비교해보면, 1500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기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6배에 이른다. 물론 두 법이 부여하는 잠재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특정한 기업의 지위를 정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활동을 하는 기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특정한 기업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신규협동조합의 2/3를 상회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사업자나 독립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향후 참여지배구조의 형태 등 구체적인 운영양식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결론

한국의 경험은 최근 20여 년간 이어진 협동조합운동의 변화가 어떻게 오랫동안 공적 기구로 인식되어왔던 협동조합의 이미지를 바꾸고, 풍부하게 하고, 원래의 모습을 복원했는지 보여준다. 사회운동에 뿌리를 두고 정부의 통제를 비껴난 협동조합운동의 탄생과 발전과 법적인 인정은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나갔다. 이렇게 된 데는 1980년대에 조직되어 1999년에 법적인 인정을 받은 소비협동조합, 1990년대에 탄생하여 2006년 법에 의해 사회적기업의 모범으로 인정받은 독특한 형태의 의료협동조합 경험, 그리고 2012년 법에 의하여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노동자협동조합 등 설립과 운영에 있어 더욱 유연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새로운 협동조합 조직의 역할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장차 한국의 협동조합 모델은 저성장 시대에 지역의 필요와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중히 여기는 더욱 평등한 다른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트문명 넘어서기

마트문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부터인가 나도 마트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조리된 음식이 많았다. 마트에 가면 묶어서 1+1로 판매되는 것도 많아 한 짐을 싣고 집으로 가서 냉장고에 물건을 쥘여 두었다. 너무 많이 산 식품은 1년에 한두 번씩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렇게 편리하지만 소비만능주의에 빠지게 했던 마트에서의 소비생활이 줄지 『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위즈덤하우스, 2016)의 소재가 되었다. 처음 책을 쓸 때는 마트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긴가민가했다. 그러나 자료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빨리 마트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책을 거의 탈고할 즈음에 아내와 가족회의를 했다. 이제 마트를 끊고 생활협동조합(생협)과 동네슈퍼, 시장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식

* 동국대 강사, 철학공방 별난 공동대표

료를 한꺼번에 사지 않기 때문에 2~3일에 한 번씩 생협이나 슈퍼에서 장을 보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변화는 조금씩 느껴졌다. 점점 마트와 자동차, 냉장고 중심의 소비생활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마트는 현재의 ‘통합된 세계자본주의’라는 통속적 문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마트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은 대형 냉장고와 자동차, 아파트, 육식, 해외농산물 등과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든 관계를 맺게 된다. 과거의 나의 삶을 살펴보면 마트에서 소비를 하면서 냉장고를 한 대 더 구입하였고, 자가용 중심의 삶이 되었다. 또한 아파트에서 고독, 소외, 외로움, 무위를 소비만능주의로 달래는 일상을 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판매되는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면서 제3세계 민중들이 매년 기아와 영양실조 등으로 600만 명이 사망하는 현실과 분리되어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고, 해외농산물과 해외과일을 먹으면서도 운송에 드는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었다. 달콤하며 안락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무심코 소비했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다.

혹자는 물건을 사는 것이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적어도 투표를 할라치면 찍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깨알같이 쓰여 있는 성분과 식품첨가물 등을 꼼꼼히 읽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도 호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잘못된 생산과정이나 불합리한 착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화학물질이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단지 브랜드나 ‘싸다’는 점이나 화려한 광고이미지에 현혹되어 물건을 샀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트문명의 일상을 여전히 무심결에 살아가고 있으리라. 그러다 최근에야 결사소비, 연대소비, 참여소비, 착한 소

비,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소비는 단지 물건을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를 사고, 정성을 사고, 인격을 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소비는 돈을 쓴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골목에 화폐와 자원, 부가 순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비는 그저 유통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에 멈추어 있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 활력과 생명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의 서민들과 시장 상인, 생산자들이 풍요로워져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도 결국 풍요로워질 수 있기에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일도 결코 아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고 오직 마트로 향하기 위한 주차장이 되어 버린 골목이, 사실은 공동체의 오래된 꿈을 발효시켜 왔던 역사적 장소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때 골목상권은 단지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성숙시키고 발효시키면서 정을 유통시켰던 공동체경제의 주역이었다. 자신의 거주지 근방에 있는 동네슈퍼에 슬리퍼와 추리닝 차림으로 들러 보았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골목은 자가용을 타고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혹은 머무르면서 동네의 온갖 이야기며 뒷담화, 놀이가 오갔던 곳이다. 또한 마을의 한판 난장이었던 전통시장은 어떠했는가?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고 어중이떠중이, 동네바보, 이방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였던 경험이 아련한 기억 저편에 남아 있다. 마을시장에는 소수자를 돌보고 이방인을 환대하던 공동체경제의 면면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자. 골목과 전통시장이라는 오래된 미래는 폐허가 되고 화석화되어 버렸다. 골목상권은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 있으며, 전통시장은 수도 없이 폐업하고 있다. 그 옛날 공동체경제의 주역들의 역할과 기능은 이미 사회적경제로 이행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공동체경제를 과거 기억 저편의 일로만 치부할 수도 없고, 미래에만 가능한 불가사의한 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이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장점

을 현대화하여 탈성장 시대에 맞는 색다른 모습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골목에서 뛰어놀던 그 많은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전통시장에서 이리저리 떠돌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속적인 마트문명을 넘어서 미래진행형적인 과정을 만드는 것이 생활협동조합의 실천적 과제인 셈이다.

생협의 매장에는 물건에 정을 담아 유통시키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생협에서의 동아리와 커뮤니티 활동 등이 그것이다. 생협의 증여의 경제에서는 마트처럼 물건이 사랑, 정성, 인격으로부터 분리된 상품이 아니라, 사랑, 정성, 인격이 담긴 선물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도농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생명살림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생협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단지 매장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공동체의 오래된 꿈이 깃들어 있는 생협 매장은 공동체의 복원과 생명평화세상의 미래구성적인 전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탈성장 시대의 대안 경제

마트문명은 통합된 세계자본주의의 기계부품 중 하나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는 세계 곳곳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만들며 통속화된 삶을 이식한다. 세계 어딜 가나 마트, 백화점, 편의점,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TV, 문화생활 등이 확산되어 있으며, 비슷비슷한 삶을 주조해내고 있다. 통합된 세계자본주의의 문명하에서 사람들은 문명의 외부로 향하지 않고 달콤한 줄음이 오는 TV의 메시지 앞에서 머물도록 유도된다. 사람들은 환상과 꿈에 물들어 있고, 안락한 문명 내부의 삶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

다. 우리의 소비는 마트가 책임질 것이며, 우리의 심리상태는 정신분석, 심리치료, TV가 책임질 것이며, 우리의 생존은 유연화되어 불안정해진 일자리가 책임질 것이다. 단조로운 일상의 일부가 된 마트는 특별한 것도 없지만 불편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명 외부로 향하면 문제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 제3세계 민중들이나 난민의 상황은 절박하고 배고프고 열악하다. 통속화된 문명의 외부는 죽든 살든 내버려두는 게토화된 영역이며, 우리의 삶과 분리된 영토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전 세계가 급속히 통합됨으로써 문명의 외부는 소멸하였다. 우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개척, 탐험, 모험, 약탈 등을 통해 성장하고 개발할 외부의 영토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다. 17세기 흄스라는 철학자가 외부소멸가설을 주장했을 때 당대의 아카데미에서는 엄청난 논란과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지구는 유한하며, 자원-부-에너지도 유한하다. 이제 경제적 쟁점은 어떻게 유한한 자원을 순환시키고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다.

마트로 대표되는 유통대기업은 지역과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순환하고 유통되어야 할 자원과 부, 에너지, 화폐 등을 빨아들여 독식한다. 그래서 공동체경제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파괴적이며 암적이다. 탈성장 시대는 사실상 외부가 없어진 통합된 세계자본주의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외부가 없다면 대기업들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주로? 그러한 황당한 기획 대신 유통대기업들은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드러그스토어drugstore 등을 통해서 골목 구석구석에 직접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제 자본은 공동체를 직접적인 먹잇감으로 삼는다. 골목에서 마을이 생기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뒤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를 프랑스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는 ‘코드

의 잉여가치(surplus de code)¹⁾라는 다소 난해한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동체경제가 유통대기업의 내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자연사적인 과정인 것만은 아니다. 규제와 제도는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현실에서의 실천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

공동체경제는 공동체를 재생하고 자기생산하기 위해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주변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욕망, 정동의 흐름이 향하도록 하고 그러한 활동에 대부분의 자원-부-화폐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마을이 한 명의 아이를 기른다는 말은 그저 옛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과 욕망의 흐름의 시너지가 만든 ‘흐름의 잉여가치(surplus de flux)²⁾가 코드의 잉여가치와 오버랩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코드의 잉여가치가 자본이 공동체를 착취하는 방향성이라면, 흐름의 잉여가치는 공동체가 자본을 착취하거나 자본을 형성하는 방향성이다. 그런 점에서 ‘자본의 사회화’와 ‘사회의 자본화’는 우리의 삶 어느 지점에서 수없이 많이 조우하고 오버랩된다. 사회적경제와 생활협동조합 등은 사실상 성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흐름의 잉여가치의 하나의 구체적인 양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부-에너지의 유입이 한정되어 버린 탈성장 시대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활동과 실천이 유한한 자원과 부, 화폐의 순환과 재생을 어떻게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그

1) ‘코드의 잉여가치(surplus de code)’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창안한 개념이며, 1세계와 3세계의 분리차별, 공동체적 관계망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자본의 전유, 집단지성과 생태적 지혜에 대한 자본의 악탈로 인한 기계적 잉여가치, 국가의 재생산의 도입,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등 자본이 공동체를 탐내면서 벌어지는 색다른 착취 양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코드의 잉여가치는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등에서 질적 착취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2) ‘흐름의 잉여가치(surplus de flux)’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창안한 개념이다. 이는 공동체의 외부에서 들어온 자원-부-에너지의 흐름이 단순한 자원배분의 측면만이 아니라, 사랑과 욕망, 정동의 흐름에 따라 순환되고 재생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등의 공동체경제의 영역에서 사랑, 욕망, 정동, 돌봄의 흐름을 순환시켜 관계를 성숙시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방식이며, 공동체가 자본을 형성하거나 자본을 착취하는 양상을 일컫는다. 흐름의 잉여가치의 사례는 흐름의 시너지효과에 따라 1) 공유경제 모델의 형성, 2) 식생, 발효, 약초, 저장 등과 관련된 생태적 지혜의 형성, 3) 네트워크에서의 집단지성의 형성, 4) 선물을 주고받는 형태의 증여의 경제의 발생, 5) 정동노동, 돌봄노동 등의 가시화, 6) 협동조합 등의 협동과 살림의 경제의 등장, 7) 공정무역 형태의 국제무역 직조형태의 변형 등이 그것이다.

것이다.

이는 일찍이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통해서 ‘내포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도 표현되었다. 외연적으로 같은 ‘100’의 경제지표라 하더라도 경제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 가치는 완전히 상이하다. 예를 들어 100원의 돈이 관계망을 통하지 않고 독식하는 대기업의 입장과, 관계망을 성숙시키고 순환하는 골목상권과 사회적경제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상이한 가치질서를 의미한다. 공동체경제는 ‘외연=1, 내포=무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시계장치는 하나지만 그 내부의 부품은 굉장히 다양하고 작동방식이 갖는 경우의 수는 무한하다. 공동체경제에서는 유한한 자원이 다양한 경제주체에 순환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 주인 A가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 이어서 슈퍼주인 B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한다, 이어서 미장원 주인 C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다, 이런 등등이 무한히 순환계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한한 자원이나 부, 화폐가 경우의 수를 달리하면서 무한한 시너지효과를 갖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내포적 발전이나 지역순환경제, 공동체경제의 핵심적인 작동방식이다. 문제는 폐허가 된 골목상권의 순환적인 생태계를 복원해내야 하는 과제를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경우의 수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연결접속과 접촉의 방식을 달리하며 경우의 수를 늘려나갈 것인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런데 문제는 품목과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품목이 적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생활을 축소시킴으로써 탈성장 시대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이끈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역경제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이다. 생협 매장은 이제 오래된 공동체경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색다른 전략적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생협이 갖고 있던 가치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

니다. 관계망을 만들고, 판을 짜고,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맡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당면 과제 역시도 어떻게 색다른 삶의 방식과 색다른 관계망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탈성장 시대에 내포적인 관계망을 성숙시키는 대안경제가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된 미래와 색다른 미래의 마주침일 수 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프리마켓 등이 만나는 과정은 색다른 순환과 재생의 연결망을 짜는 것이며, 공동체경제 내부에서의 색다른 흐름의 시너지에 대한 탐색이다. 물론 소비만능주의가 아닌 관계 중심의 색다른 판을 짜는 것이 시작점이자 토대일 것이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어떻게 지역순환경제와 내포적 발전의 판을 짜는 거점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 답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과제는 상상력이 빈곤한 이 시대에 색다른 사유의 경로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생활협동조합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는 인류의 집합적 발명품으로서 시설, 가게, 병원, 관공서, 시장 등이 서로 교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었던 역사적 장소였다. 물론 농촌 공동체로부터의 자원을 약탈하거나 유통하였던 것이 도시이지만, 낯설고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망은 색다른 차이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냈다.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축적해온 도시의 시너지효과를 마트가 완전히 파괴한다는 점이다. 그 원리는 도시생태계가 조성한 탄력성, 유연성, 복잡성, 다양성의 특징을 보이는 경제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끊고 부를 독점하려는 마트의 영리행위에 있었다. 도시의 장점을 화석화하고 의미화한 것이 바로 마트로 드러난 자본주의적인 상업행위라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트로 대변되는 자본주의는 도시의 복잡계를 ‘A는 A다’

〈표〉 도시-자본주의사회-제3섹터의 관계망 특징

분류	도시사회	자본주의사회	대안적인 공동체
대표적인 상업형태	골목상권, 시장	마트, 백화점, 편의점	협동조합, 프리마켓, 대안시장
관계망의 성격	낮선 익명의 관계망	서로 뻔하게 보는 (의미화된) 관계망	잠재성의 관계망
돌봄노동의 유형	육망노동	감정노동	정동노동
돌봄노동의 내용	비물질적 노동	서비스-정신노동	돌봄, 모심, 살림, 보살핌, 섬김
돌봄노동의 특징	차이 생산(특이성 생산)	재생산(타자생산)	자기생산

라는 방식으로 의미화한다. 그래서 상품은 그저 상품이고, 노동자는 그저 노동자고, 소비자는 그저 소비자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복잡계는 단조로워지고 살균되고 위생적인 거래관계만이 남는다. 그런 점에서 마트의 위생적인 소비생활은 공동체와 도시생태계 둘 다에게 해롭다.

생협 매장에는 ‘낮선 익명의 도시’의 특징과 ‘친밀하고 유대적인 농촌공동체’의 특징 사이에서 무수한 교차선과 흐름이 교차한다. 여기서 관계망을 성숙시키고 발효시키는 것은 ‘너와 나, 혹은 우리’ 사이에서 생성되는 사이주체성³⁾에 있다. 너와 나, 우리를 책임주체로만 한정시키고 직분, 역할, 기능에 따라 딱딱하게 개체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서의 에너지와 정동, 사랑의 흐름은 색다른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점에서 사이주체성은 완전히 색다른 관계 맺기 방식의 창조이기도 하

3) (사이)주체성(subjectivity)은 하버마스나 가다머의 이론에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혹은 간주관성으로도 지칭되지만, 인간-생명-무생명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주체성이라는 지칭이 더 적합하다. 주체성은 ‘나, 너, 그’로 특정하고 책임역분, 역할, 기능, 직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대적인 책임주체(subject)와 구별되는 관계망과 배치가 청안하는 ‘우리 중 어느 누군가’라는 비인칭적인 주체성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뜻과 지혜와 아이디어, 실천성을 가진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사이)주체성 생산의 전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주체성은 공유자산, 집단지성, 생태적 지혜를 형성하는 공통성(common)의 형성에 기여하며, 정동, 돌봄, 사랑, 욕망의 흐름에 의해서 생산된다.

다. 문제는 관계가 성숙하여 고도로 조직된 관계의 도식(schema)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정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장의 혜택을 구가하던 기성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성숙이 만든 경제 패러다임을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돌봄과 살림의 경제에서는 핵심적인 것이다.

탈성장 사회에서 본격화된 ‘내포적 발전’,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적인 모습은 외부에서의 에너지-자원-부의 유입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재생과 순환의 작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행해 있다. 물론 외부의 자원이 없다면 내부는 소진되거나 폐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외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공동체 내부의 활동이 대부분 자원분배의 절차적 과정으로 전락하게 되며 자율성이 사라질 것이다. 지구의 한계, 성장의 한계가 가시화되면서 외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유일한 외부의 생산은 내부에 있는 특이한 존재들인 소수자(minority)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소수자는 ‘양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망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특이점(singularity)이다. 이제까지의 공동체 활동의 대부분은 모심, 섬김, 돌봄, 보살핌, 살림 등의 정동의 흐름⁴⁾이었다. 그러나 성장주의 시대의 극한이 경쟁과 양극화라는 분리의 공식을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사회는 분열되었고, 인륜적 공동체는 미리 주어진 전제조건이 아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탈근대자본주의하에서의 사랑은 혁명과 동의어가 되었다.

생협 매장은 도시생태계의 탄력성, 유연성, 복잡성, 다양성에 기반했던

4) 정동(affection)은 스피노자의 개념으로 ‘정동=변용=흐름=되기(becoming)=사랑=욕망=돌봄’ 등의 동의어를 갖는다. 정동의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는 유아기 동안의 흐름의 사유에서이다. 부모님의 돌봄과 정동의 흐름은 아이에게 첫 의 흐름, 손길의 흐름, 이미지의 흐름, 목욕물의 흐름 등으로 사유된다. 흐름의 사유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 있으며, ‘A=A’라고 고정관념으로 실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A일수도, B일수도, C일수도’라고 횡단하는 사유이다. 즉, 공동체에서의 사물은 자연의 재생과 순환의 흐름과 사랑과 정동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자본주의의 고정관념에 기반한 상품과는 구분된다.

기존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직면했던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자원-부-화폐는 마트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지역에서 순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관계망의 발효와 성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나긴 숙제인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생협 또한 매장을 늘리고 품목을 늘리는 등의 영업 과정에서 성장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커뮤니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원형이었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도시생태계를 단조롭게 만들고 있으며, 생협 또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의 성장 일변도 상업행위가 곧바로 사회분열과 동의어가 된 현실의 상황에서, 사랑과 돌봄, 정동의 흐름으로 내부관계망을 성숙시킴으로써 공동체경제를 구성하려는 협동조합의 '소수자되기'의 실천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탈성장 시대에 생협이 기반으로 하는 증여의 경제는 생활방식의 변화, 문명의 변화, 생태적 전환을 촉구한다. 만약 생협이 속도와 효율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마트문명이라는 성장주의는 우리 내부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생협이 느림과 여백, 빈틈, 곁에서 싹트는 정동의 흐름에 주목한다면, 탈성장과 문명의 전환 역시도 현재진행형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합리적 의식이 아니라 사물의 곁에서 서식하는 무의식에 주목하는 공동체적인 정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합리주의가 근대 시기의 민주주의의 기본 인식이면서도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라는 성장주의에 기반한 부르주아적인 인식기반으로 돌변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와 '시민'이라는 두 트랙(Two track)은 협동조합에서 구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생협이 생명살림이나 문명의 전환을 추구한다면, 시민적 책임주체와 공동체적 사이주체성 둘 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서 시민적 책임주체는 '나는 고로 ~이다'라는 방식의 정체와 역할이 분명한 소비자들이다. 반면 공동체적 사이주체성은 '너와

나 사이에 너일 수도, 나일 수도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생협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다면 시민적 책임주체인 소비의 윤리는 강화되었지만, 관계망에 기반한 발전전략이나 탈성장 전략은 지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라는 시민적 책임주체와 공동체의 사이주체성 간의 교차지점이 생협의 딜레마이자 내부 역동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생협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실체가 분명한 것으로 고정시켰을 때 소비자가 윤리와 가치를 꼼꼼히 따지고 살피는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 즉,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된다. 반면 생협 매장의 물건을 생태계의 재생과 순환이라는 생명살림의 흐름의 일부이고, 사랑과 욕망, 정동의 흐름의 일부이며, 강렬한 생명에너지의 흐름의 일부라고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 둘 다는 물론 모두 필요하지만, 원형공동체의 사물영혼론⁵⁾처럼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바라본다면 후자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이 더 중시될 것이다. 소비자로서의 윤리적 소비와 생명살림의 보이지 않는 윤리와 미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적 책임주체와 공동체적 사이주체성 간의 역동적인 차이와 교직, 횡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마트문명은 통속화된 자본주의 문명 일반에 대한 대명사이다. 문명의 전환과 생활방식의 변화, 녹색전환의 대명사로 생협 매장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와 골목상권 등과 긴밀히 관계를 맺으면서 공생과 상생의 전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

5) 사물영혼론 혹은 애니미즘(animism)은 요정, 도깨비, 정령, 기암괴석과 오래된 나무에 대한 샤먼 등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고대 원형공동체의 무의식에 기원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견어내면, 애니미즘은 사실상 생명권을 넘어선 생태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본주의는 생명과 사물의 정재력과 변화가능성을 응시하지 못하고 '는 ~이다'라는 의미화를 통해 뻔하게 보면서 사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생명조차도 딱딱하고 텅 빈 물체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향한다. 반면 역으로 공동체는 생명에너지와 사랑, 정동의 흐름을 사물에 계까지 확장하여 재생하고 순환되며 살아 있는 생태계로 바라본다. 이런 두 가지 방향은 모스나 신이치 등의 지적처럼 사랑과 정동으로부터 분리된 '상품'과 사랑, 정성, 인격, 정동이 들어있는 '선물' 간의 차이점에서도 드러난다.

다면 생협 매장은 도시생태계를 조성하고, 그것의 시너지효과를 복원할 수 있는 유력한 거점이 될 수 있다. 탈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자원-부-에너지-화폐의 순환과 재생의 판을 다시 짬으로써, 더불어 지역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관계 맺기와 연결방식, 배치의 경우의 수를 무한히 늘려나감으로써 비로소 도시생태계는 다시 활력과 생명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협이 경쟁이 아닌 상생을 요구하는 도도한 역사적 요청에 부응한다면, 대안적인 공동체경제의 판을 짜는 주체성으로 거듭날 것이다. 탈성장 시대에 마트를 넘어서서 생협 매장이 지역사회와 공동체경제의 지역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 톨의 도토리가 만든 떡갈나무 혁명을 상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자율성과 생명에 대한 고찰

들어가는 글

내가 몸담고 있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의 민관 복지자원들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협동과 나눔을 통해 돌봄과 건강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이 사업의 한 영역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가 어르신들을 직접 가정방문하는 주치의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복지자원과 의료서비스가 연결되고 어르신 리더들이 발굴되면 이들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그러나 주치의사업이 진행되고 어르신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과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내과 의사

맞닥뜨리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문제다. 계획된 사업의 진행과 실적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업과 활동의 성과로 우울증 척도에서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과 마무리에 대한 소개나 프로그램도 배치되어 있으니 구색은 갖추어 있다. 하지만 건강, 복지, 삶의 질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갈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맞이해야 할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대책은 없다.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진료실을 찾는 80~90대의 어르신들 가운데, ‘죽게 해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겠느냐,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것이 끔찍하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분들은 몸이 건강치 않지만 그나마 스스로든 도우미에 의지해서든 병원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다. 병원조차 나오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어떨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늙고 병들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미안해하고, 홀로 사는 분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자신이 사회에 짐이 되는 것을 미안해한다.

이런 저런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가져온 근본은 외면한 채, 약에 의지하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할 지경에 이르게 만든 건 나를 비롯한 의사들의 잘못이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 아프면 쉽게 병원에 와서 약을 먹으니, 죽어야 할 쓸모없는 늙은이들이 죽지도 못하고 온 천지에 깔려 있다고.

어떻게 죽음 문제를 다루어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원고 청탁을

받고서 ‘내가 죽어보지 않고는 죽음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었다. 살아 있는 한 죽음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 딜레마는 바로 죽음을 육체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시각에서만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의 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과는 다른 관점의 죽음, 매순간 ‘거짓 나’의 죽음과, 삶과 죽음을 넘어있는 ‘참 나’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간다. 개별의 나, 몸이 나라는 생각, 내 것, 내 삶, ‘나’가 있다는 생각,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는 의식수준에서만 죽음은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져야 하는 육체적·물질적인 차원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이지만 내가 처한 구체적 현실에서 죽음 문제를 다루는 데 제대로 한걸음 나아갈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수선한 이야기라도 풀어내보려 한다.

죽음에 대한 다른 시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어쩌면 참으로 고리타분한 질문이란 생각이 앞설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옛 선조들이 평생을 화두로 삼아 얻어낸 인생의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란 답을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인 양, 피하고 말지도 모른다.

의사는 직업적으로 매일 많은 이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함께한다. 누구보다도 죽음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역시도 많은 죽음들을 목격했거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함께해왔다. 장례지도사란 직업이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들이 죽음 이후에만 일한다면 의사는 죽어가는 과정, 즉 삶에서

죽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은 직업을 가진 의사들이 그렇다고 인생의 네 가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더 민감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거나 삶에 더 진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소아보다는 노인들을 주로 진료하는 내 경우에는 늙음, 질병, 죽음이란 말을 더 많이 떠올리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막상 그 의미를 충실하게 내 삶에 반추해 볼 기회가 많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나는 많은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로병사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심히라도 말해주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한다. 비록 환자나 그 가족에게 욕을 듣게 되더라도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그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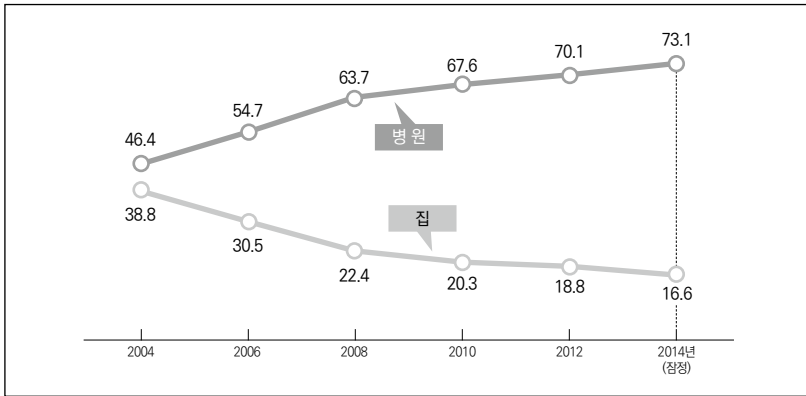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죽음에 대해 강의를 해왔던 어떤 분은 신문의 부고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새로운 죽음 소식을 보고 듣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나의 죽음과는 무관한 듯 스쳐 지나고, 부정하며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나의 죽음 문제가 현실로 닥치는 순간에는, 그동안 외면했던 죽음들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고 학습된 것이 없으니 난생 처음 접하는 일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 꼴이 된다.

우리가 언제부터 죽음을 이렇게 터부시해왔을까? 내가 어린 시절이던 1970년대만 해도 상여소리와 함께 집 앞으로 지나가는 상여행렬을 종종 보곤 했다. 호기심에 장례행렬을 따라 동네 야산의 공동묘지까지 가보기도 했고, 집안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르는 곳을 기웃거리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은 집이 아닌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표 1) 이것은 죽음을 멀리하고 피하고 삶과 떼어놓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예전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집에서 임종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손자와 손녀가 다 지켜보고, 세상을 떠나는 가족의 마지막 삶을 가족 구성원이 옆에서 보살폈고, 죽음은 결혼처럼 우리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표 1〉 2004~2014년 사망 장소 변화

자료: 통계청(단위: %)



※사망 장소 가운데 기타(도로·사업장·복지시설) 비율은 생략함.

몇 년 전, 서울 어느 구에서 ‘웰다잉을 위한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교실’의 강의 준비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이야기다. 처음엔 강좌 제목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상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몹시 애를 먹었다. 후에 죽음 대신 웰다잉으로 바꿔 넣었더니 비로소 계획했던 강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조차 얼마나 혐오스러워하고 기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영화 속 이야기지만, 루게릭병에 걸린 주인공이 점차 사지가 마비되면서 맞게 되는 임종을 그린 〈내 사랑 내 곁에 3〉 속에도 이런 장면이 있다. 장례지도사가 바람직한 죽음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입관체험 행사를 열면서 경로당 노인들에게 관 속에 들어가 볼 것을 권유하는데, “이게 지금 나보고 죽어보라는 거야, 뭐야? 노인네들 모아놓고 희롱하는 거야?” 하는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보이

는 반응은 무관심과 부정, 회피, 그리고 혐오인 경우가 많다. 몸이 건강할 때,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찰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최근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죽음,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이란 웰다잉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죽음 교육, 존엄한 죽음 등이 점점 공론화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죽음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도 있었다. 이른바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¹⁾이 입법된 것이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의사들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요구와 동의하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다 1997년 일명 ‘보라매 사건’ 이후 의사들은 연명치료 여부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부인의 요구로 퇴원시킨 중환자실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부인에게 살인죄를, 보라매병원 의사들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이후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은 이런 분위기를 급반전시켰다.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는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 요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9

1) 이 법은 죽음이 수일에서 수주로 임박한 환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환자가 임종 시기가 임박했는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하게 된다. 환자가 미리 결정하여 받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평소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놓거나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람은 임종 시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평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표시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데,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일치하면 인정된다.

년 만에 연명치료중단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연명치료를 대체로 원치 않는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8.9%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10명 중 9명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통계다. 찬성은 4.9%에 불과했으니 연명치료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어떤 것을 원하는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위 법은 ‘안락사 허용’만큼 적극적인 죽음의 선택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연명치료에 대해 불가피하고 현실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논란에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흡이나 심장박동, 뇌의 기능과 같은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경계를 지어놓고 죽음을 정의하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관점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터부시되어 왔던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주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우리 개인의 내면의 의식 변화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이다.

죽음은 본래적인 삶의 한 부분

죽음을 정의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근본 문제와도 닿아있지만, 우선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통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학협회 내 ‘죽음의 정의 위원회’에서 1983년에 죽음을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1993년에는 「뇌사에 관한 선언」에서 “사망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는 전뇌기능의 소실인 뇌사로서 판단한다”고 하여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적으로는 2000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막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서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되었다. 뇌사의 죽음 인정 여부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의학계에서 논란이 된 것이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죽으면 다 끝난다고 전제하는 뇌사와 심폐사처럼 육체 중심의 죽음 이해가 만연하면서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었을지는 몰라도,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의 15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는 자살률은 어찌 보면 죽으면 다 끝나므로 자살하면 고통 역시 끝난다는 논리로 생명을 이해한 결과일 수 있다. 또 죽음의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가진 죽음에 대한 의식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다. 우리가 현재 추구하는 삶의 질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물질적 풍요를 쫓는 사회 구조와 의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이유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죽음 정의는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 정신, 삶의 의미같이 순전히 물질적인 삶과 생존 이상의 무언가 지속되는 것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한 『인생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말이다.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철학이나 종교, 사회적 판단의 문제를 떠나, 현재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태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고, 그럴 때 죽음은 더 이상 벽이나 끝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나서는 일로 현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근대 이후 현세적 삶이 전부인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죽음을 삶에서 분리하고 소외시켜 왔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을 그의 전체 삶에서 소외시키면 시킬수록, 삶 그 자체도 비인간화되고 소외된다. 죽음은 본래적인 큰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포함해야 온전할 수 있는 삶은, 죽음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기형적이 되고 왜곡된다. 죽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우리 삶이 영원할 것처럼 현혹된 채 살아가는 건 모래성을 쌓는 것보다 허망한 삶이다. 죽음이 없는 삶은 어떨까를 상상해보라. 시간이며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며,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이, 죽음이 없는 삶의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삶의 가치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가치는 삶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가 신문에 소개된 바 있다. 사는 게 힘들고 버겁게 생각되면 공동묘지를 걸어보라는 내용이다. 의외로 공동묘지에 가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자신과 남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한다. 전반적인 인생 목표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게 되며, 가족에 대한 애뜻함이 증가하여 술과 담배를 줄이게 되고 건강을 챙기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은 닷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나그네를 도와주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높아져 인내심, 평등의식, 연민, 감정이입 그리고 평화주의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납골당조차 혐오시설이라며 사람이 사는 동네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공동묘지를 걷고 난 사람처럼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성찰하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주어진 삶을 더 충만하고 빛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죽음이 갖는 의미를 더욱 깊게 확장시켜 나가게 될 터인데 말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명연장 의료기술의 발달도 죽음을 터부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한 단계로 보지 않고 의료의 패배나 실패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이 매달리는 것도 이러한 가치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죽음을 근본적인 존재 이유로 삼아야 하는 종교가 제 몫을 하지 못하는 데도 책임이 있다. 의학이 육체만을 중심으로 육체적 지속성이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의 법과 제도조차도 이에 근거하여 죽음을 판정하며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근본에서 묻는 철학과 종교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5년 전쯤 한 환자의 임종을 함께했던 기억이 있다. 혼자 사는 70대 남성 단골환자였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나는 나원장한테 내 몸을 맡기고 산다'라는 말을 농담 삼아 자주 하시던 분이였다. 속이 좋지 않아 위 내시경을 했는데, 진행된 양상의 위암이 발견되었다. 만성폐질환이 있었지만

대체로 건강하셨는데, 더 이상의 검사와 수술은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한 의사를 말씀하셨다. 오히려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다. 내 몸은 나원장한테 맡긴 것이니 앞으로도 모든 걸 맡기겠다 하시면서. 그 말을 신뢰했기에 나는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주사 방법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켜보자고 했고, 어르신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며, 멀리 있는 딸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용을 지원받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3년여를 1주일에 1~2회 정도 한 시간가량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 없이 평소처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다. 가끔 속이 불편하실 때도 있었고 체중과 먹는 양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특별히 힘들어하신 정도는 아니었다. 그 후로 좋아진 것 같다며 한 번,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으로 한 번, 1년 간격으로 두 번의 내시경을 더 했는데, 압은 위의 출구 쪽으로 조금씩 진행되어 음식이 내려가는 통로를 좁히고 있었다. 임종 한 달쯤 전부터는 잘 드시지를 못하면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셨고, 숨이 차서 오래 활동하기 힘들었지만 병원에 나오실 수는 있는 상태였다. 그즈음 딸이 집에 함께 머무르기 시작했다. 임종 1주일 전부터는 병원에 나오시지 못하고 몇 번의 전화연락을 했다.

임종 하루 전날 연락을 드리고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누워 가쁜 숨을 쉬고 계셨다. 의식도 명료하고 손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말을 하시는게 쉽지 않은 상황 같았다.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느끼며 말씀드렸다. 이제 여행이 끝나 가시는 것 같다. 두려워하실 것 없다. 몸을 벗어나야 하지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동안 잘 사셨고, 저한테 맡기기로 하셨으니 마지막 두려움까지 제게 맡기셔라.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고 감사드린다. 어르신은 내 눈을 바라보며 다 들으신 후,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며 이제 편안하다고 고맙다고 가쁜 숨 사이사이 입모양만으로 말씀하시더니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런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다 딸과 인사하고 돌아 나왔다. 이튿날 아침 병원 문을 열자마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딸이 진료실로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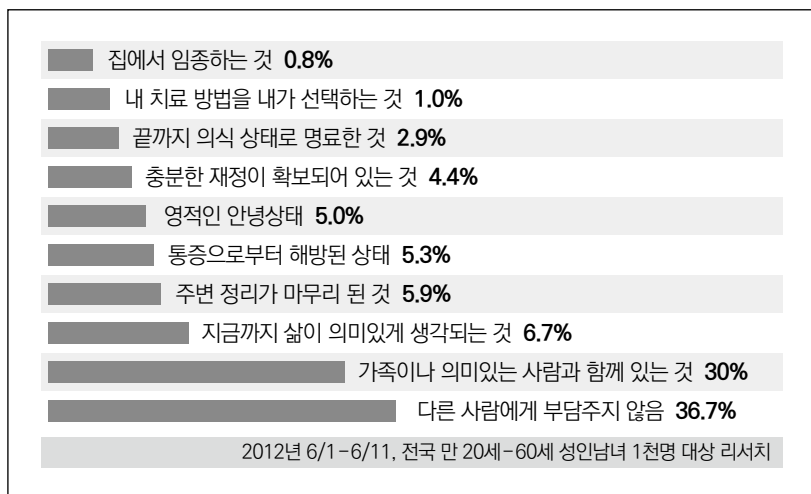
왔다. 그날 밤 주무시는 상태로 편안하게 임종하셨다고 했다.

이 경우와 달리 일반적으로는 누구든 현재 의료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죽음 방법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다. 내가 길을 가다 심장 이상이라도 생겨서 쓰러진다면 누군가 발견하는 대로 구급차를 부를 것이고 응급구조사의 심폐소생술과 함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가 삽입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가족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 우선 생명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의료시스템의 의무니까.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응급구조사나 의료인 누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설사 앞서 말한 연명의료법에 따라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피할 수 없다. 물론 회복 가능한 상황일 수 있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불가피한 순간에조차 자신의 선택을 주장하기 위해 목걸이나 가슴에 ‘NO CPR(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이라고 새기고 다니는 외국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적극적인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죽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9988234라고 하는데,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기(4)를 바란다는 것이다. 늙어 병들지 않고 팔팔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2~3일만 앓다가 죽는다는 것도 갑작스런 변고가 아니라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하게 보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병든 채로 오래 살긴 싫고, 고통을 겪지 않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을 꼽고, 그러면서도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죽음’을 원한다는 것을 볼 때,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팔팔한 건강을 원하는 마음은 생각 이상으로 절실한 것이다.

〈표 2〉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것이 중요하다²⁾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아프지 않은 노인들을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수명, 즉 사망할 때까지 온전히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대략 남성 68세, 여성 72세로 기대수명보다 10년 정도 짧다.³⁾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주로 만성질환에 기인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의학과 과학기술, 혹은 위생과 사회시스템의 발전에 기인한다고들 한다. 해방 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남자 45세, 여자 49세였다. 70년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늘어난 수명을 그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은 없다. 한편 최고 수명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2) 「웰다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 연구팀, 2012.

3) 2013년 기준, “한국인 수명 늘었지만 숨질 때까지 10년간 앓아”, 〈연합뉴스〉 2015. 9. 27.

또한 사실이다. 평균수명이 40세에 불과하던 시절에도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있었고 평균수명이 80세인 지금도 여전히 최고수명은 120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2016년 3월 기준 1만 6천여 명에 이를 만큼 늘고 있지만, 아직 인간의 한계수명이 120세를 넘길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유전자는 종족의 유지를 위한 생식기능이나 번식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우리 생명에 이롭기보다는 해롭게 작용하도록 코딩되어 있다는 자연선택이론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요즘은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실제 나이라고 할 만큼 건강을 자랑하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실은 그 반대편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년기를 사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2년 11.3%에서,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무려 37.4%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전체 인구 중 질병을 앓는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리라는 예상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생물학적인 수명과 신체적 건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사용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해 버리는 생산적 노동으로부터의 죽음을 선고한다. 그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 결과는 사회 전체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노인'을 양산하며 생물학적인 고령화로 인한 질병과 죽음에 복합되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죽음을 지금의 삶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살도록 부추기고 감추어 왔지만 죽음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았기에 아무리 밀어내고 거부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고령화와 더불어 공동운명체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사회가 되어갈수록 오히려 죽음은 우리 삶에 한

층 더 중요하고 가깝게 다가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 지성 가운데 한 분인 신영복 선생은 암으로 투병하다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스스로 곱기를 끊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저런 죽음의 과정을 접할수록 죽음은 단순히 최후과정을 어떻게 맞이하고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 삶이 지속되는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연장선에 닿아 있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죽음의 자율성

앞서 얘기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소극적인 죽음의 선택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죽음의 방법과 과정을 선택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락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02년 벨기에, 2004년 룩셈부르크가 이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한 이후, 5개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했고, 20개 주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의 경우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돕는, 이른바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4곳의 안락사 지원 병원이 있다. 그중 외국인들을 받는 디그니타스병원에서 원정 안락사를 한 외국인이 19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의회가 말기환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켰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캐나다가 내국인에 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발표했다.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상태에 있는 문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려하는 점은,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경제적 조건 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살과 같이 죽음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삶에 대한 존중의 결여로 볼 수도 있다. 죽음에 의해 현재 삶의 의미가 배제되는 선택이라면, 현재의 삶을 부정함으로써 현재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죽음의 가치조차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와 자살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살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며, 격리되거나 은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이 죄책감과 상처를 안게 만든다. 안락사는 여러 주변 여건을 숙고한 끝에 이루어지는 온건하고 평온한 죽음의 과정이며, 가족구성원의 협의와 도움이 필수적이고 전문가들의 진단과 도움과 협의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의료적 처치를 통해 고통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인 논란을 떠나 안락사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9988234’에서도 표현되듯이 나 자신의 죽음에 있어 안락사의 권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은 진료실에서 ‘나를 죽여줄 수 없냐? 그런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냐?’라고 반복해 하소연하곤 한다. 2011년에 사망한, 130명의 말기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고서 의사면허도 박탈당하고 감옥까지 갔던 미국의 의사 잭 케보키언은 죽기 전 인터뷰에서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제가 갖고 싶은 권리거든요. 저도 심각하게 아플 수 있고,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간은 실제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이 죽음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미 죽음은 우리 삶이 주어지는 순간 내재되어 있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이든 안락사든 존엄사든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다만 죽어감의 과정과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한다.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대체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죽음 자체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데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인식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삶을 ‘나’라는 개체와 육체에 제한된 것으로 볼 때 죽음은 ‘나’의 소멸이고 끝이며, 그것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은 현재 내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좌우하는 최고이자 최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죽음의 자율성이란 죽어감의 과정과 방법의 선택이든,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이든,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는가로 다시 귀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생명이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주어지지 않았듯이, 생명 자체의 발생과 변화, 소멸의 원리 안에 인간이 존재하므로, 그 어떤 인간의 죽음도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불의의 사고, 전쟁과 테러 등에 의한 무고한 죽음조차도 그렇다.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지만 또 꽃이 지고 낙엽이 지고 모든 것을 버리는 시절이 있다 해도 그 나무의 뿌리에서 생명이 이어지듯, 육체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생명의 소멸로 볼 수 없다. 아니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단지 죽음의 시기와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주어지고 일어나는가에 좌우되지 않는, 생명의 근본 흐름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찾고 발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숙제를 풀어갈 열쇠 역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나’의 죽음, 그 후의 삶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죽음을 순수히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면 하고 떠올려본다.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가족’이다. 현실세계에서 죽음은 지금까지 내가 맺었던 가장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의 단

절에 대한 상실감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혼신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이나 성취해 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한순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런 일들이 예고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죽음을 수용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 또한 죽음은 자살, 사고, 집단적 죽음,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결국 홀로 맞이해야 하는 사건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일이며,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가 어찌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사건이다. 죽음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변화의 한 과정,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다 해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마치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앞둔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이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 이후에 대해 알고자 했다. 최근에는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육체적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로 죽음 이후에 대한 힌트를 얻고 있기도 하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하며 동공반사가 없는 '사망'의 정의에 합당한 상태로 있다가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사람들이 자신의 심장과 호흡이 멎어 있던 동안의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은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이들 가운데 10~25%에서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한 권위 있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Lancet』에 2001년에 실린 연구를 보면,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조사하여 그중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50%), 긍정적인 감정(56%), 체외이탈 경험(24%), 터널을 통과함(31%), 밝은 빛과의 교신(23%), 색깔을 관찰함(23%), 천상의 풍경을 관찰함(29%),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32%), 자신의 생을 회고함(13%),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함(8%)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근사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알기 위해, 근사체험자 23명과 소생하기는 했지만 근사체험을 하지 않은 15명을 8년에 걸쳐 조사하고 비교했다. 근사체험 무경험자에 비해 경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며,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과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크게 증가했다. 몇 분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의 체험이 8년 뒤까지도 영향을 미쳐 체험자들의 삶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듯이 보편적인 인간이 죽음 이후의 삶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죽음을 개별적인 ‘나’가 아닌, 모든 것이 연결된 ‘큰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애벌레와 나비가, 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듯이 죽음 역시도 우리 삶에 그렇게 공존한다. 탄생과 죽음,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미래와 과거가 함께 하나의 큰 삶으로 공존하며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 공존, 공생, 공동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죽음 역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니다.

나가며

의사는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직업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기도 하다. 누군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면, 그 래도 먼저 의사를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직업적인 측면에서 의사는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호스피스란 이름으로, 죽음학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배우고 공부할 기회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의사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만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의사 또한 미래에 없어져야 하는 직업일지 모른다고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건강과 질병,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할 누군가는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진정한 주인인 동시에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리라.

이제 나는 진료실에서, 또 주치의사업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죽음맞이 여행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 시간들이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물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말이다.●

생명이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

후쿠오카 신이치 슘, 김소연 옮김, 은행나무, 2008



“생명이란 무엇일까?”

몇 년 전부터 나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십여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생명운동’, ‘생명평화’란 말도 느낌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질문하면 매우 애매한 개념에서만 머물고 있는 듯하다. 학문적으로도 생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는 대로 말을 풀어가고 있다.

이런 모호함에도 ‘생명’이란 용어는 요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물질문명에 지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란 화두는 삭막한 모래사막에서 만난 신선한 샘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인 지구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에서 살아있는 지구, 즉 푸른 생명체 지구별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 도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
- 상지대 교수, 물리학,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내가 물리학으로 30년 가까이 밥을 먹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단순히 수학을 잘했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어린 시절 더운 여름날에 시끄러운 목공소 공장의 옥상에서 매일 별을 보며 개와 함께 잠들면서 ‘왜 저 별들은 저기에 있을까?’ 궁금해 했던 그 질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물리학자에게 가장 큰 매력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근원적 질문, 즉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의 희열이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혼자서 빙그레 웃었던 아이처럼 말이다.

나는 30년 가까이 자석을 연구했다. 과학원 박사과정 중에 철의 자기적 성질을 연구했으며, 그 이후 자석테이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자기기록 기술에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왔다. 해외 논문 발표도 꽤 많이 했고 한때는 잘나갔지만 이 첨단기술도 스마트폰의 출범으로 막을 내렸고, 나도 연구 방향을 바꿔 지금은 생체자기장 치료기기를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내 실험실에서는 백혈구세포, 유방암세포, 간암세포 등을 배양하고 있다. 작년에도 하와이 학회에서 자기장이 적혈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고, 지금은 자기장이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학문적 인연으로 생물학에 가까이 가게 됐으며, 더욱이 원주에서 무위당 장일순의 생명사상과 한살림운동을 주제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생명’에 대한 의미를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하게 되었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구

“생명이란 무엇일까?(what is life?)”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을 시도한 사람은 생물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이다. 1933년 수소원자의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하여 아이슈타인과 함께 세계적인 천재로 인정받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odinger)(1887-1961)였다. 그는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1943년 더블린 고등학술연구소 주최로 열린 연속 공개강좌에서 이 화두를 처음 꺼냈고 다음해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서론에서 그는 “물리학은 앞으로 가장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을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에서 생명현상은 신비하지 않고, 모든 생명현상은 물리학과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원자의 구조를 완벽히 설명한 그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운동에 초점을 맞춰 통계적인 설명을 이어가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유전자의 본체는 혹시 비주기성 결정이 아닐까?”라는 것과 “원자는 왜 그렇게 작을까?”였다. 이 질문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이어가기로 하자.

“생명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명과학의 첫 번째 답은 슈뢰딩거의 강연으로부터 10년 뒤에 발표된다. 1953년 『네이처』에 겨우 천 개의 단어로 쓰인 짧은 논문,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핵산의 분자구조: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구조」이다. 이 논문에서는 DNA가 역방향으로 꼬인 두 개의 리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의 본질이 완벽한 대칭성의 이중나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칭적 구조에 의해 생명은 자기를 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DNA구조를 밝힘으로써 분자생물학의 화려한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거의 모든 생명과학 기술이 유전자조작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과 유전자 변형동물 역시 이런 발전의 결과물이다.

분자생물학적 생명관으로 보면, 생물체란 마이크로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식 장난감처럼 분자기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명체를 아주 정교하게 조작함으로써 고장 난 것을 개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유전자를 결합하여 변형된 분자기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

이 유전공학이다. 참으로 대단한 인간 승리이다. 물리학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발견은 ‘전자’의 존재를 인간이 알아냈다는 것이다. 지금도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전자를 발견하고 그들의 운동을 완벽하게 해석한 슈뢰딩거의 이론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인간이 대단하다는 감탄을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대칭성을 가진 DNA의 발견은 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특별함을 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세기적인 발견만으론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린 시절 집 앞에서 흠뻑 놀다가 개미를 잡아 나무로 꼭 눌러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방 살아있던 놈이 움직이지 않는다. 약간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곧 깨닫는다. ‘아! 생명체는 쉽게 죽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생명은 갑자기 어디로 간 것일까? 혹시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도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문이 아직 과학계에 남아 있는 과제였다. 그나마 이런 의문에 답을 찾아가는 책이 분자생물학자인 후쿠오카 신이치가 쓴 『생물과 무생물 사이』이다.

“생명은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다”

- 동적평형(dynamic equilibrium)

그는 교토대학을 나와 분자생물학의 산실인 뉴욕의 록펠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학부에서 연구한 후 현재 아오야마가쿠인대학에 있다. 그도 유전자변형동물인 ‘녹아웃 생쥐(knock-out mouse)’의 특정 유전자를 바꿔놓아 그 유전자가 작용 못하게 하는 조작기술로 동물의 활동을 조사하는 연구를 했다. 특히 체장세포를 주목하고 소화효소와 인슐린의 분비에 관여하는 DNA 일부 부품정보를 제거한 녹아웃된 조작동물인

쥐를 키워서 상태를 조사했는데, 결론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운 결과에 연구 발표도 못한 그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이런 현상이 많은 연구실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알아냈다. 결국 그는 유전자 녹아웃기술로 DNA 한 조각의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보완이 이뤄져서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생명체는 부품을 끼워 맞추는 조립식 장난감 같은 분자기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임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문점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그가 주목한 연구자가 유대인 천재 생화학자인 루돌프 쇠하이머^(1898~1941)이다. 쇠하이머는 1930년대 방사선 분석이 가능한 무거운 중질소 아미노산이 포함된 사료를 쥐에게 먹여 생체연구를 하였다. 실험예상 단계에서는 사료를 먹이면 필요한 에너지원만 연소하고 나머지 중질소는 모두 배출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투여된 중질소 중에서 43.5%만 배설되었다. 나머지는 장벽, 신장, 비장, 간 등 몸 곳곳에 퍼져 있었다. 절반 이상인 56.5%가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속으로 흡수되었다. 쥐의 단백질은 겨우 사흘 만에 식사를 통해 섭취한 아미노산으로 약 50퍼센트 바뀌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몸의 세포와 다양한 단백질들은 매우 빠르게 소멸되고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과 반년 또는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몸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생 고정된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고 단지 조금씩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같이 수많은 세포는 새롭게 대체되고 있다. 단단한 뼈나 치아도 불필요한 뼈조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가 있어서 예외 없이 분해되고 새롭게 합성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흐름이 있는 것이다. 결국 생명이란 쇠하이머의 말대로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생명이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이다”. 생성과 소멸의 대칭성은 우주생명의 아름다운 순리인 것이

다. 별의 생성과 소멸이 늘 공존하며 윤회하듯이, 큰 강물이 늘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흐르는 물은 매일 떠내려가고 새로이 들어오듯이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흐르는 강물처럼 생성과 소멸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신이치는 그의 책에서 “생명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파괴되기 시작한다. 이는 생명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생명은 끊임없이 파괴되면서도 어떻게 원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백질이 보여주는 상보성에 있다. 생명은 그 내부에 얹히고설킨 형태의 상보성에 의해 지탱되며 그 상보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동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설명한다. 즉, 큰 퍼즐그림의 작은 퍼즐조각이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씩 맞춰나가야 하듯이, 우리 몸속 세포는 퍼즐조각 맞추기와 같이 빠져나간 조각의 자리에 새로운 세포 퍼즐조각이 증식되며 만들어질 때 주변의 세포조각들의 모양과 생태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맞춰나가면서 생성되는 것이다. 몸속 세포의 수는 우주의 별만큼 많다.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모두 개성과 다름이 있지만 모든 세포들의 상보적인 그물망이자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생명체 역시 우주의 질서와 순리에 너무 닮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모든 세포들의 생성과 소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죽은 생명체는 이 흐름이 막혀서 소멸이 정지되어 고여 썩거나 생성이 사라져서 말라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몸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축적된 영양분을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 몸의 구성체가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이란 완결된 구성물이 아니라 요소의 흐름 속에 있는 구성물이며, 생명체는 우연히 밀도가 높고 서로 연결

된 분자덩어리이고 존재하는 것은 흐름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도 소멸한다.”

부처가 깨달은 연기론도 세상의 모든 것이 불변적·고정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용수보살인 나가르주나가 『중론』을 통해 언어의 고정적 실체를 부정하면서 정립한 공^空사상 역시 모든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이치 중에 분명해 보이는 깨달음은, 거대한 우주이건 우리 몸이건 작은 원자이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도 세포도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간다. 생명은 그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생명의 동적평형 상태이다.

생명의 속성은 생성을 위한 소멸

지금 우리는 물건들에 집착하며 끝없이 쌓아놓느라 정신이 없다.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산더미처럼 사와서 냉장고와 집안에 쌓아놓고 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집에 치여 산다. 물질문명에 물들어 생성과 소멸의 흐름을 막히게 하여 점점 생명력을 잃게 하고 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이다. 모두가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식량과 의학의 발달로 조만간에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 모두가 삶의 질보다 양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말하듯 ‘인생은 신이 만든 연극이고, 우리는 그 속의 배우인 것이다.’ 배우는 대사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삶의 시간보다 살아가는 동안 주변의 생명공동체를 소중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연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할 수 있을까?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생성과 소멸의 아름다운 대칭성을 모르는 바보들일 것이다. 미안하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을 위해 생성과 소멸의 대칭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 이제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그 역할이 끝나면 떠나야 한다. 새로이 생성하는 생명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소멸이 먼저인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생명의 속성이다.●

'나'는 없고 '노동'만 있던 무력감

『사표의 이유』

이영롱 씀, 서해문집, 2016



회사에 다니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시들어 가는 걸까? 주변 친구들도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일은 계속되고 삶이 견잡을 수 없이 직선으로만 흐르는 것 같았다. 답답하고 시들어가는 시간 속에서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항상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일이 너무처럼 계속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무적거린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2~3년 뒤에도 똑같은 것이란 직감에 앞이 캄캄할 때, 생기를 잃어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내가 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통제하는 느낌. 나는 없고 노동만 있던 무력감 속에서 사표를 냈었다.

대안학교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5만 권의 장서에 내가 관리하던 책 1만 권. 책과 사람이 모이는 곳. 수많은 책이 내 몸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벅찼다. 어떤 책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일까? 어떤 책이 도서관에 꼭 있어야 하는 좋은 책일까 고민하고 읽어보고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일이 즐거웠

다. 하지만 일을 할수록 지쳐갔다. 생기를 잃어갔다.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대여할 때 응대해야 하는 일상적인 서비스. 그리고 정말 있어야 할 책들을 고민해서 구입하고, 책을 등록하고 분류하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두는 일. 독서회를 관리하고, 책이 있는 공간을 돌보고 청소하는 일을 했다. 책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게 하는 일, 나는 그 일을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생기를 잃어 갔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이 있다. 땡땡책협동조합 이영룡 조합원이 쓴 신간 『사표의 이유』. 직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다른 삶을 선택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회학적 분석을 담은 책이다.

“미치도록 취직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회사를 그만둔 이들의 ‘결단’을 끌어냈을까? 이전에 그들은 현대의 일터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자가 되어 갔으며, 또한 포기했는가? 이 노동의 롤러코스터에서 하차하면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그것은 과거와 ‘다른 삶’일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길 시도한다.” (17쪽)

책은 크게 두 대상자 그룹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고소득 전문 직종에 종사한 엘리트 직장인과 돈보다는 재미와 열정, 의미가 직업 선택의 중심이 되었던 ‘열정노동’ 직장인이다. 내 주변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고소득 엘리트 직장인들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열정노동’ 직장인들이 자기 일터를 선택하게 된 솔직한 이야기와 사표를 결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사표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일단 노동 강도가 너무 센 거죠.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착취구

조의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일의 특성상 내가 맡은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111쪽)

열정노동을 하는 인터뷰이가 자기착취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착취’당하는 피해자/약자의 위치를 거부함으로써 주체성에 의한 독립적 선택과 노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확신하는 대화 방식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나도 ‘스스로 선택했고 좋아하는 일’이라며 나를 몰아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였다.

책 속에서 사표를 쓰고 나온 사람들은 이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박래연이라는 인터뷰이는 사표를 쓰고 농사를 선택한 사람으로 그의 말이 와 닿는다.

“막상 살아보니까 여유롭기도 하지만 한편 시골 생활이라는 건 엄청 부지런해야 하는 거, 설 새 없이. 그렇지만 그게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덜 하기 싫은 건 있어요. 도시에 있다 보면 조직생활을 하고 시켜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자의보단 타의가 많은데, 해야 되니까 하고 (중략) 농사도 어떻게 보면 농사에 나를 맞추는 거고, 철마다 해야 되면 일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내 선택에서 한다는” (325쪽)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 생기로움을 만들어 내는 힘은 ‘자율성’에 있다. 타율이 아닌 자율. 그것이 정말 중요한 조건이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곳. 거기에 삶의 풍요로움과 활력이 있다. 8시간 동안 꿈쩍도 할 수 없는 공간과 시간. 해야만 하는 일 속에서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의견을 낼 수 없는 노동문화와 조건이 나를 시들어가게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성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자율성을 지키면서 일

하고 싶었다. 나도 그런 일을 찾고 싶었다. 도서관을 그만두고선 도시에
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장사라고 생각했고 장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
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감자튀김과 맥주도 팔아보고, 사계집에서 꼬치도
팔고, 점포도 새로 만들고 공사도 해보았다. 노점에서 타코야키를 팔아
보기도 하면서 장사를 배웠다. 하지만 요식업계의 노동 특성상 하루 12
시간씩 주 6일을 일해야 하는 생활 리듬. 주변 상권과의 경쟁. 그리고 다
양한 손님과 거래처 사이에서 일해야 했다. 내 일과 시간을 스스로 정한
다는 건 정말 아득한 일이었다.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땡땡책협
동조합을 만났다.

책에선 ‘노동사회 속 개인들이 박차고 나와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
고자 하는 길목에서, 삶의 재생산과 행복이 가능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
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거처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는 것이면 충분할
까? 저자는 그 실마리를 각자의 능력과 경쟁력이 아닌 협동과 만남 속에
서 발견했다고 한다. 나는 이 가능성을 땡땡책협동조합에서 보았다.

땡땡책협동조합은 창립하기 전 준비모임부터 조합의 목표와 정관 등
기준들을 함께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특히 조합에서 일하
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합의해 갈 수 있는 여
지가 있는 게 마음을 움직였다. 스스로가 자기 노동을 고민한다는 건 무
척 생소했다. 사무국에서 일하게 될 2명이 ‘일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중심으로 각자가 생각한 중요한 조건들을 채워나갔다. 4
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는 자발적 활동이 되게 만드는 것. 노
동시간의 총량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일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임금에 있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먹고사는 데 치이지
않고 조합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수준을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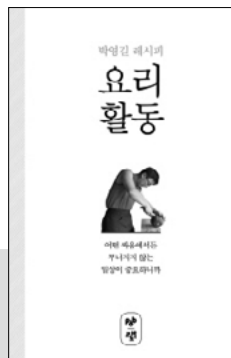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나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면 굳이 돈 많은
사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협동의 힘이 아니었을까?

책의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의 처분권은 오롯이 개인만의 것이고 사회는 각 개인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게끔 만들면서 결국 고립을 구조화해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립의 구조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계는 고립무원,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뤄진 거대한 전장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듯 아직은 “더 깊이 협력할 능력”이 남아있다고 믿는다.●

무너지지 않는 일상의 중요성

『요리활동』
박영길 씀, 포도밭, 2016



훌륭한 말과 글에 비해 실제 인격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종종 본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평소 얘기하는 사상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스스로도 그렇다. 큰 정의를 꿈꾸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자그마한 선행을 베풀고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들을 하며 매번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옳은 행동만 하는 사람은 괜시리 정이 가지 않는다. 영화 <시빌 워(Civil War)>에서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의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에 반박은 하지 못하면서 “가끔은 너의 잘난 면상을 치고 싶다”는 대사를 하는 기분이었을까. “나만 이렇게 모순적이고 불품없지는 않잖아, 우리 모두 조금씩은 다 모자라고 불완전하잖아.”라고 동의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래서 한때는 위선을 가장 혐오했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들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대학 학회나 동아리 세미나 때 오고갔던 무

* 땡땡책협동조합 이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수히 많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들은 공중에서만 떠돌아다니고,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먹고사니즘'에 묻혀 지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며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혹자는 협동조합을 5명에서 각자 100원씩 총 500원으로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줘 '좀비 협동조합'이 무한정 양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 법이다. 하지만 내게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의가 얘기되는 과정이 감동스러웠다. 지금과 조금은 다른 사회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를 포함해 내 주변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힘을 모은다면 변화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대학교 교직원으로 안정되게 일을 하다가 협동조합 일이 하고 싶어 이직을 한 가장 큰 계기는 작은 선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던 것 같다. 불완전하고 모순된 개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 작은 선의를 모아내서 우리 주변에 자급자족하는 생활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어 먹고사니즘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가. 대학생협학생위원을 하며 협동조합에 들렀던 기분이 다시금 살아났다.

물론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인데 이 둘 모두를 다 잘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조합원들 간 갈등,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 아이템 선택으로 인한 사업 실패, 자본의 부족, 이사장의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인한 갈등 등등. 그동안 협동조합 상담과 교육으로 만난 분들의 사연만 모아 봐도 인생극장이 따로 없을 듯하다. 그렇게 힘들게 모인 작은 선의는 암초에 부딪혀 금세 흩어지고 다시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으로도 협동조합 일로 이직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현실은 마냥 아름답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 그렇기에 작은 선의와 더불어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요리활동』은 이 꾸준함이 일상에서 나온다고 얘기한다. 땡땡책협동조합 활동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저자는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전업 활동가이다. 낮에는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의 대표로서, ‘지역 꼬뮌학교 동동’의 진행자 등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사회적 기업 ‘삶과환경’의 수거원으로 일한다. 이 밖에도 땡땡책협동조합 이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삶과환경 분회 사무장 등 여러 활동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개인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잠은 자고 생활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비결을 이 책에서는 ‘요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요리는 일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만의 비결이다.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면서도 작은 일상들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어울리고 연대하며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생성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11쪽)이 요리를 통해 일상을 재구성하는 이유이다.

또한 요리라는 일상으로부터 그만의 활동에 대한 철학이 나온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살펴보자. 50인분가량의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준비하면서 ‘양념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 휩싸인다. 잔뜩 긴장을 한 채 요리를 하면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대목이 나온다. 저자는 얘기한다. “내 감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요리가 피곤하지 않고 재미있으며 내게 힘을 준다. 요리의 첫발은 함께 먹을 누군가를 책임질 만큼의 용기를 내는 일이 아닐까 싶다”(29쪽)고. 사실 함께한다는 것은 늘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내 감을 믿으며, 책임을 지며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저 요리와 관련한 경험과 추억을 나누고 자기만의 생각을 툭툭 던져놓는데, 거기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하우와 오랜 활동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그만의 비결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요리를 통한 활동이고, 요리와 활동의 결합이다. 요리라는 일상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활동이라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영역과 결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마저도 인위적인 구분이다. 일상이 곧 활동이고, 활동이 곧 일상이기 때문이다. 유린기를 소개하며 그는 다시 얘기한다. “아홉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야 본연의 맛이 나는 유린기 소스처럼, 삶 본연의 맛도 다양한 경험과 공부와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게 아닐까?”^(174쪽)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한 방식이다. 내가 이해한 사회적경제란 요리활동처럼 우리의 일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변화이다. 각자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같이 경제활동을 하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의 일상이 변해야 한다. 그러한 일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말과 글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고 저자의 말대로 “아집과 때로는 타협과 배반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다른 책에서도 보게 된다. 『심야인권식당』(류은숙, 파비, 2015)에서 저자는 인권연구소 ‘창’을 운영하면서 회의와 공부모임 등이 열릴 때마다 밥때에는 밥을, 술때에는 술을 대령하며 술방의 주모 역할을 자처한다. “술방의 주모를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일에 대한 나의 판단 때문이다. 나는 일상성에 중요한 것이 묻혀 있고 일상에서의 움직임에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먹고 마시고 치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들이 내겐 멋진 글을 쓰고 발언을 하고 특별한 자리에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15쪽) 최근에 본 영화 〈트럼보〉에도 비슷한 일화가 나온다. 〈로마의 휴일〉로 잘 알려진 트럼보는 당시에 잘나가던 시나리오 작가였으나 1940년대 후반 미국 사회를 뒤흔든 매카시즘으로 인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도 잃게 된다. 이후 B급 영화 제작사에 가명으로 다량의 대본을 쓰며 입에 풀칠을 하고, 같은 처지의 동료 작가들까지 구제한다. 하지만 오로지 싸우기 위한 대량 대본 생산은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게 한다. 그는 “내면의 초라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계속 싸웠고 너무나 두려워서”였다고 진술한다. 그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은 건 가족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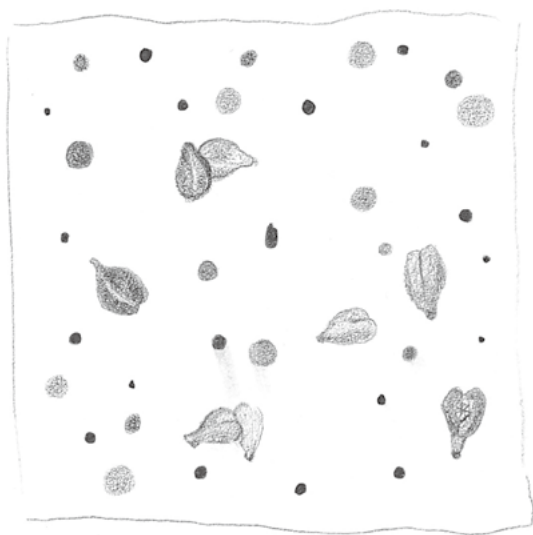
관계 개선을 통한 일상의 회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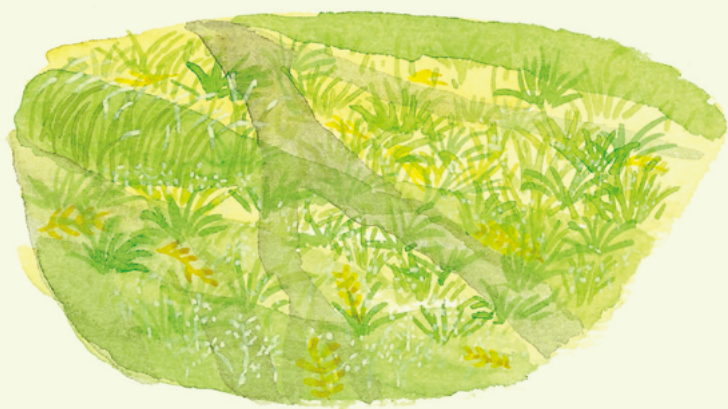
작은 선의를 지탱케 하는 건 결국 일상에서의 작은 관계와 움직임이다. 일찍이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라고 얘기했다. 작은 선의를 지킬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일상이다. TV 속 스타 셰프에 대한 동경이나 ‘먹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요리활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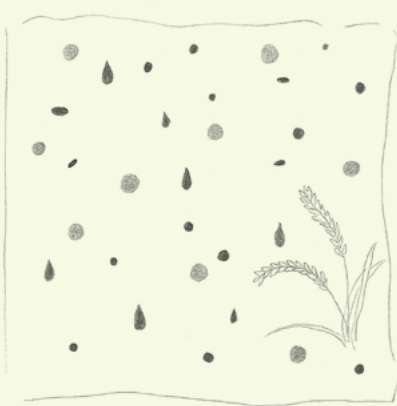
바
라
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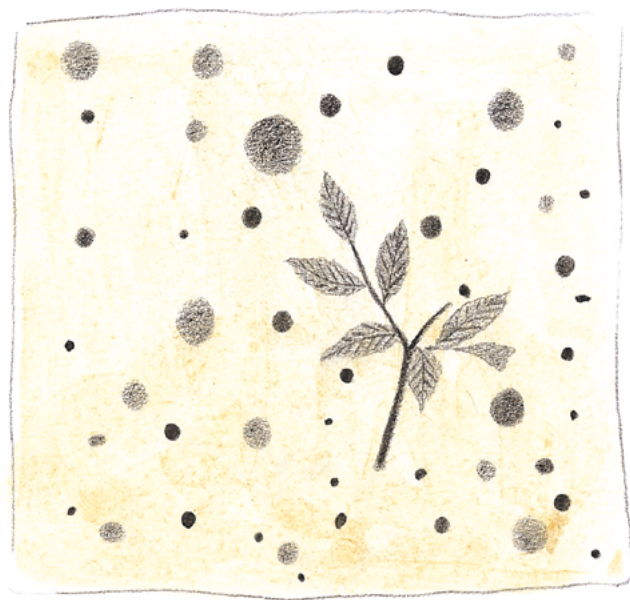
글그림 이자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일상적 삶과 진실
과 연결된 예술에 대해 고민합니다. 맑고 투명한
자연을 닮은 그림을 그려 가고자 합니다.









씨앗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주 작지만, 그 씨앗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자라납니다. 나무 하나로 숲을 이룰 만큼 커다란 반얀나무도 처음에는 참깨씨만 한 작은 씨앗이었습니니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코끼리도 하나의 작은 점에서 자라났겠지요. 나 또한 작은 점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고 고통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작더라도 고르고 골라 좋은 씨앗을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활동 그리고 먹거리

사람은 어린 여자와 어린 남자에게서 생겨나고 태어나서 자랍니다. 배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생물학적 존재인 영유아기를 지나,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는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경험을 쌓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영향력이 사회 관계망 속에서 여러 활동으로 발현되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루고 경험할 수 있는 정보와 활동은 한정적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더 많은 양의 정보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면 사회가 활성화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워집니다.

열린 소통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통은 우리에게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살

• 한살림서울 활동가

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무리 속에 숨어 끌려 다니며 몸통과 꼬리 역할에 안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티벳 고전 〈사자의 서(使者-書, Book of the Dead)〉에 따르면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며 오감을 열고 움직여 다른 이들과 열린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숨을 멈추고 감각을 모두 막아 혼자만의 닫힌 세상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삶든 늘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선택한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의 몫으로,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의 활동은 걱정스럽게도 매우 미약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여린 파장이지만, 여러 사람의 선택이 모이면 물결이 되고, 파도가 되고, 바다가 되고, 우주가 되어 세상을 이룹니다. 그 세상은 결정을 다른 이에게 미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지는 세상일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며 살아야 합니다.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면서 먹거리 생산에 관심이 없다는 건 명백한 부조리다.

도시에 사는 보존론자는 자신이 농민이 아니므로

먹거리 생산에 무관심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위해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다.

- 『은 삶을 먹다』, 웬델 베리, 2009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으로 삶을 꾸려, 그 대가로 먹거리를 구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으로 지탱되는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는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정직한 노동과 안전한 먹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매우 척박해질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효율과 이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수의 먹거리 생산자가 다수의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지구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생산비를 낮추는 정책의 결과물로, 그 대가는 우리 후손들이 치른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먹거리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부가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것은, 나의 노동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류의 대다수는 이제 땅을 일구는 법을 모른다.

냉장고에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을 꺼내서

전자렌지에 돌려 식탁에 내놓는 일에만 익숙할 뿐이다.

- 켄 월슨,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게리 폴 나브한, 2009

자연은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농산물 먹거리는 자연 번식을 할 수 없는 F1 잡종종자들이 대부분으로, 이 중 많은 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 종자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 먹거리를 섭취하며, 세계의 한 곳에서는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아가 번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살림의 길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후쿠시마 사람들

- 이와키 방사능시민측정실 <타라치네>의 활동

• 김현우

싸와디카 마렌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

• 이대경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후쿠시마 사람들

- 이와키 방사능시민측정실 <타라치네>의 활동

지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현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제 17차 반핵아시아포럼과 제1차 반핵세계사회포럼에 다녀왔다. 세계 여러 나라의 반핵 활동가들을 만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뜻깊었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사정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이기도 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 방사능 제염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 귀환의 압박에 고민하는 지역민들, 무너진 경제와 지역공동체 모두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그러나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을 돕는 지역의 운동도 활발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러한 활동들과, 이제 후쿠시마는 안전하며 일본은 다시 설 수 있다는 식의 아베 정부의 애국주의적 선전 논리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재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운동 사이에서도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 편집위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서도, 그리고 탈핵의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에 자리 잡고 있는 방사능시민측 정실 방문은 상당히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비영리 법인인 이 단체의 활동을 소개한 기사에 나오는 한 구절은 이렇다. “몸 위에 붉은 습진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것이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진정이 되었다. 그 후에 피부에 알 수 없는 검은 반점이 나왔다. 동네 피부과에 가도 그런 증상의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간 기능 저하가 현저한 어린이들에게 있는 것인데, 의사도 왜 이 어린이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저선량 방사능 피폭의 영향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데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들이라면 그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과 가족이 어느 정도 피폭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들이쉬는 공기와 먹는 음식의 방사능 수준까지 의심스럽다면 그곳에서 마음 놓고 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지역별 방사선량 보고가 매일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제염이 이루어진 안정적인 공간에 설치된 계측기에서 얻어지는 것이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나 식생활과는 괴리가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대처 과정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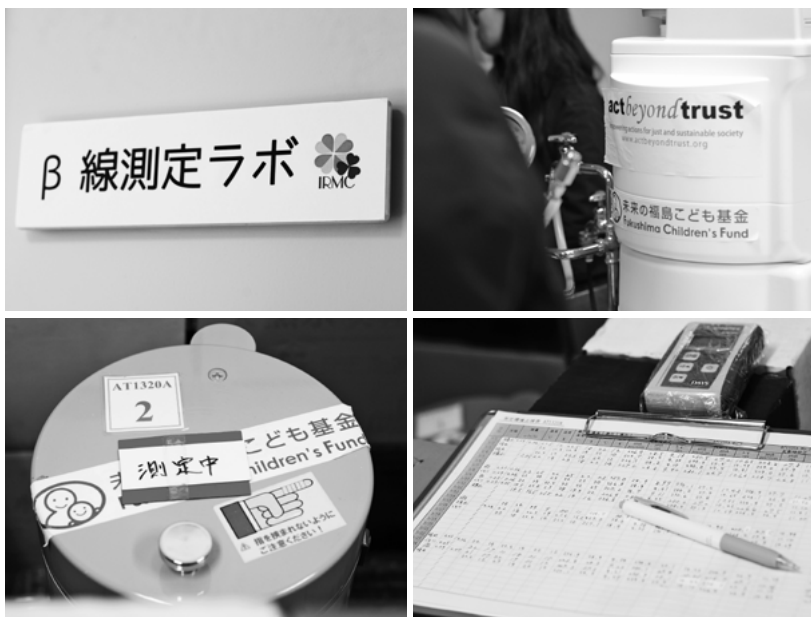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의 걱정은 끝이 없다. 실제로 “지역의 친척으로부터 받은 야채를 먹어도 괜찮을까”, “세탁물을 밖에서 말려도 좋을까”, “보육원의 모래밭은 괜찮은가”, 나아가서, “후쿠시마에 남아 아이를 키운다는 내 결정은 옳았는가” 같은 질문들이 언제나 제기된다. 2015년에 실시된 한 설문 조사에서는 후쿠시마 엄마 2명 중 1명이 ‘육아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시민들이 만든 베타선 측정실

그러던 중 이와키 시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2011년 11월에 만들어진 이와키방사능시민측정실 <타라치네>(いわき放射能市民測定室 たらちね)가 2015년 4월에 베타방사선 측정실험실을 설치했다. 일본어 ‘타라치네’는 ‘부모들’이란 뜻이다. 후쿠시마 사고 후 일반인과 관공서에서 주로 측정해 온 방사선은 간단한 기계로도 계측 가능한 감마선 핵종인 세슘 134와 137이지만 이것은 핵발전소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에 이르지만 체내에 들어가도 비교적 빨리 배출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베타선을 내는 스트론튬 90과 트리튬(삼중수소)이다. 예를 들어 스트론튬은 칼슘 성분과 비슷해서 일단 체내에 유입되면 뼈에 들어가 계속 몸속에서 방사선을 내보내게 되며, 따라서 세포에 손상을 주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감마선에 비해 베타선은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발족하여 독립적으로 방사능 계측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감마선 측정에 한정된 것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핵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이라면 비교적 무겁고 잠재적 영향도 큰 베타선 핵종에 대한 측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타라치네>는 후쿠시마 사고 이래 어린이에 대한 갑상선 조사와 식재료의 세슘을 측정하여 수치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전문기관에 스트론튬 같은 핵종의 계측을 부탁한다면 일본에서 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원자력관계청 관할 일본분석센터와 규슈의 환경관리협회 두 곳뿐으로, 신청이 많을 때는 3~4개월 기다려야 했고 한번 검사하는 데 16만 엔에서 20만 엔 정도나 필요했다. <타라치네>의 베타선 측정실은 시료의 측정 시간을 수 일로 줄이고 비용도 수천 엔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베타선 측정이 가능한 곳이 드물다 보니 <타라치네>에는 예상보다 많



타라치네의 측정실. 시민의 기금으로 장비를 마련했음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 김현우)

은 측정 신청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다.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같은 먼 나라에서 신청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원래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많은 신청 때문에 지금은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측정 의뢰를 받는 시료는 흙이나 야채, 식물, 물고기 등 다양한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염려를 반영하여 분유나 분유를 녹이는 물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캐나다에서 연어의 방사능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도 자기를 만드는 흙의 방사능을 측정해 달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일본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여 각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주었다.

고가의 측정 장비에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 있다. 어렵사리 장비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장비와 실험실 유지에 들 비용을 생각하면 적자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상선 검진 서비스도

19세 이상은 우리 돈으로 1만 원 정도 요금으로, 그리고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행해준다. <타라치네>는 개인의 기부금과 회원 회비로 유지되며, 측정 실무에는 자원봉사 활동가들도 많이 투입되고 있다.

〈표 1〉 타라치네의 방사성 핵종별 측정 요금

검사 종류	방사성 핵종	개인 일반 측정요금 NPO/NGO 임의단체 포함	사업자 생협을 포함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홀보디(전신) 카운터 인체의 감마선 측정	세슘 134	19세 이상 1,000엔 임산부 무료 어린이 무료	19세 이상 1,000엔 임산부 무료 어린이 무료
	세슘 137		
	칼륨 40		
재료의 감마선 측정	세슘 134	500엔	5,000엔
	세슘 137		
	요오드 131		
	칼륨 40		
물 감마선 측정	세슘 134	2,000엔	5,000엔
	세슘 137		
	요오드 131		
	칼륨 40		
자재의 감마선 측정	세슘 134	1,000엔	5,000엔
	세슘 137		
	요오드 131		
	칼륨 40		
토양의 감마선 측정	세슘 134	2,000엔	10,000엔
	세슘 137		
	요오드 131		
	칼륨 40		
베타선 측정 재료 물 토양 기타	시료의 물 속에 존재하는 트리튬	1,000엔	10,000엔
	시료 중의 조직과 결합하는 트리튬	3,000엔	30,000엔
	스트론튬 90	3,000엔	60,000엔
감마선/베타선 세트 측정 할인		500엔 할인	할인 없음

방사능 측정실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도 양육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로, 방사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제대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측정 활동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타라치네>의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타라치네>에서 전신 방사능 측정을 받은 한 어르신은 손자가 태어났지만 자신이 피폭되어 있을지 모르니 손자를 안아주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손자를 품을 수 있다고 고마워했다.

민간 방사능 측정실 겸 검진센터 설립 운동 진행 중

후쿠시마 현에서 실시하는 갑상선 검진도 있지만, 그것은 2년에 1회뿐이고, 그것도 몇 주 후 보내오는 서류를 기다려 결과를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타라치네>의 갑상선 검진은 그 자리에서 의사로부터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다. <타라치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사능 측정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 치료까지 담당할 검진센터를 방사능 측정실 옆에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타라치네> 사무실 한편에는 갑상선 검진을 받으러 온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인접한 사무실과 합쳐서 확장해 검진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방사능 측정실과 검진센터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방사능 측정을 받고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진찰을 받을 때 옆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 측정을 위해 음식을 가져올 생각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사능 측정실과 검진센터를 한 곳에 세우는 것은 민간 시설로는 일본 최초의 시도다. 검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표 2〉 방사능 검진센터의 기능

건강 상담	피폭을 경험했거나 짐작이 가는 경험을 한 어린이와 지역 사람들의 심신에 대한 상담 실시
각종 검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진과 전신 방사능 측정 이외에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소개, 백내장 검사 시설도 설치 구상 중
교류 공간	엄마들이 평소 말하기 어렵거나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장소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오키나와 요양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후쿠시마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온 〈타라치네〉에 있어 이 검진센터의 개설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각종 모금 활동 호소와 콘서트가 이어졌고, 모금액이 몇 주 단위로 보고되었다. 지난 2016년 5월 9일에는 검진센터 건립 모금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며 예정보다 조금 빠른 5월 하순에 개장하도록 전력으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키나와 구미노사토의 요양 여행 프로그램

〈타라치네〉가 주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심신이 지친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위한 요양(일본어로 보양保養이라고 표현한다) 여행이다. 요양 여행은 이미 체르노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진행된 것으로, 위축된 어린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쐬고 자유롭게 흠을 만지며 원기를 회복하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일본 지도에서 후쿠시마로부터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한 따뜻한 오키나와에 소재한 구미노사토(球美の里라는 이름의 시설이 탄생한 것은 2012년 7월이다. 이 시설을 기획한 월간지 데이즈 재팬DAYS JAPAN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방사능 측정기 지원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쿠시마 현 여섯 곳에 시민방사능 측정소가 개설된 계기가 되었고, 후쿠시마 어린이 요양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어린이들은 구미노사토에서 약 10일간 머무르며 깨끗한 모래사장과 숲속에서 마음껏 놀고 실컷 웃고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애니메이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디자인한 로고에는 “자연의 힘을 받아 모두 힘을 합쳐 꿈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2016년 1월 11일까지 어린이 1,862명, 학부모 479명 등 총 2,341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참가 어린이는 교통비와 체재비가 무료이며,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제2차 그룹 이후부터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모금이 필요하다. 지난 봄방학 기간의 제55차 요양(2016년 3월 23일 ~ 4월 1일)은 독일의 한 공익법인이 모은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후쿠시마 어린이들에 대한 검진과 요양 요구가 많았음에도 후쿠시마 현은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후쿠시마가 피폭 위험이 높은 지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럴 경우 배상 문제와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의 주민들과 이들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어린이들을 지키고 일어서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후쿠시마의 사람들은 자기 삶을 꾸려가는 한편으로 핵발전소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투쟁을,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피난구역 해제 조치에 맞선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싸와디카 마렌칸**,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수는 1억5천만 명으로, 유럽과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며 국가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 이주노동자의 11%에 이르는 1천6백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도 2003년 산업연수제를 통해 농축산업 분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가 2013년 말까지 19,726명에 이른다.¹⁾²⁾ 고령화나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서로에게 낯설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이들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실로 주어져 있다. 한살림 청주생산자연합회의 사례를 통해 농촌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한살림 생산자(청주연합회)

** '안녕, 놀자'라는 태국말로, 2015년 진행했던 청주생산자연합회의 지역공모사업 프로그램 이름이다.

1) "ILO global estimates on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2015.

2) 「고통을 수확하다 :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국제엠네스티, 2014.

처음 시작은 단순했던 것 같다. 이웃 농가에서 마주치는 얼굴이 까맣고, 몸이 자그마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수줍게 미소를 보내는, 때로는 무표정하기도 한 이주노동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다.

일 마치고 늦은 밤에 모여 기획서를 쓰고, 한살림생산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활동지원사업’에 기획서를 내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운영 위원회에 프로그램을 알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공동체 월례회의에 알려졌다. 처음 기획서에는 1)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와 생산자교육, 2) 생산자 태국어 강습, 3) 바자회와 태국음식 나눔, 4) 생산자와 외국인 노동자 야외 소풍을 프로그램으로 잡았다.

지금 보니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두 번에 걸친 운영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오기도 했다. 반대하는 생산자의 의견은 이랬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들도 있는데, 이들을 모아서 바자회를 하고 소풍을 갔다가 문제가 생겨 출입국관리소에 붙들려가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질 수 있냐는 것, 또 이주노동자든 불법체류자든 이런 이들이 생산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살림 조합원들이 몰랐으면 한다는 의견, 어쨌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느냐는 입장이었다.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한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좀 더 쉽게 생각했고, 막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들은 청주연합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다. 운영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줄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우선 태국말 배우기를 시작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근본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지난날, 팔당에서 청주로 생산지 재배치를

할 때 청주가 소농이 주류였기에 가능했다, 지금 인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소농 중심의 생산방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어쩔 수 없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자, 생산자가 태국말을 배우면 생산물품의 클레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생산자교육

생산자교육도 부탁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도 듣기 위해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를 찾아갔다. 안건수 소장님은 태국인들이 많은 우리 지역이 좀 특별하다고 했고,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말로 고쳐주셨다. “체류에는 불법이 있지만, 노동에는 불법이 없다”는 명언도 하셨다. 앞으로 미등록이 아닌 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단순한 내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고 하셨다. 왜냐면, 지금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내쫓는 것도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시다니 생산자교육은 처음이라고 하신다. 생산자들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생산자들의 반발에 부딪친 뒤라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지 점점 더 어려운 마음이 되었다.

기획위원들이 몇 차례나 모여서 조심스럽게 교육 방향을 논의했던 것에 비하면, 생산자교육에 모인 인원은 열다섯 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 기획위원들 부부, 여성대표자회의 끝나고 같이 오게 된 사람, 순수하게 교육에 온 사람 서너 명. 그들이 다였고 애초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소장님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는 무효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출입국관리소에서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법 등을 말씀

해주셨다. 주로는 이주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다.

교육이 끝나고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생산자는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태국말 배우기

우리 지역에는 서연화라고 태국에서 온 여성생산자가 있다. 한국으로 시집와서 아이 낳고 농사짓고 지금은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 우리말을 아주 잘한다. 연화 씨가 아니었다면, ‘짜와디카 마렌칸’의 어떤 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생산자들의 부정적인 분위기 탓인지 강사를 안 맡으려 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 와야 하나 했는데, 고맙게도 강사를 맡아주었고 함께 10강의 수업을 했다.

수업은 생산자들이 배우고 싶은 말을 물어보면 연화 씨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사말, 숫자, 시간, 밥 먹기, 농기구부터 ‘00시에 일 시작하고 00시에 끝낸다’, ‘빨리빨리, 꼼꼼하게, 깨끗하게 해요.’처럼 농작업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서로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말도 배웠다.

한 달에 두 번씩 했는데, 밤늦게 일 마치고 모이는 게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래도 10명 넘게 오더니 점점 적어져 5~6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중간에 ‘똥낭꿍’이라는 태국 음식도 같이 해먹고, 태국음식점도 가고, 태국에 대한 공부도 했다.

이 수업의 최대 성과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태국어 강습에 찾아온 것이었다. 연화 씨는 우리 교재 옆에 태국어를 써서 그들에게 건네줬고, 함께 한국말도 배우고 태국말도 배웠다.

한국어 교실

처음 기획에는 없었지만, 태국어 강습에 찾아오는 태국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어 교실을 5회 열게 되었다. 한국어 교실 강사도 연화 선생님이 고, 우리 생산자가 돌아가면서 보조교사로 함께 했다. 날이 추웠는데도 10명 이상씩은 꼭 나왔다. 태국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말을 물어오면 연화 씨가 한국어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일을 할 때 하고 싶었던 말을 물어왔다. ‘월급 올려주세요’를 알려달라고 가장 먼저 말하는 이가 있어서 함께 웃기도 했다. ‘부자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알려달라며 사장님과 얘기하고 싶다고도 했다. 보조교사로 왔던 생산자는 ‘아름답다’와 ‘예쁘다’의 차이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생산자들의 반대로 못하게 된 프로그램이 생겼고, 그렇게 남은 비용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고, 또 남은 비용과 바자회에서 번 돈으로 방한화, 겨울양말, 장갑을 사서 이들에게 선물했다. 끝나는 날 피자과 치킨, 맥주를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고, 누군가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돌아가면서 1시간도 넘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았다. 주로 태국사람들이 노래했지만 같이 자리했던 우리도 한국노래로 답가를 불렀다. 지금도 미소 짓게 되는 멋진 경험이었다.

소풍 지원

단체 소풍으로 기획했다가 생산자들 반대로 개별 농가 지원으로 바뀌어서 진행했다. 태국어 강습에 참여했던 농가에 10만 원씩 지원하고, 12월 한 달 중에 소풍이나 식사를 한 뒤에 인증사진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했다. 여섯 농가가 신청했고, 겨울이다 보니 모두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이나 술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다. 생산자도, 이주노동자도 같이했던 사

람들 모두 즐거워했던 것 같다.

바자회

열긴 열어야 하는데, 일부 생산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던 터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싸와디카 마렌칸’을 처음 제안했던 류근옥 생산자는 반대를 하더라도 하기로 했던 것은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바자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며 가을에 한살림 여기저기서 열리는 가을걷이 행사장을 돌면서 바자회 물품을 얻어왔다. 우리 생산자들에게도 옷을 모았고, 한살림청주에서도 옷을 모아 보내오고, 행사 준비도 도왔다.

우리끼리 회의할 때는, 바자회를 낮에 우리 물류창고에서 열고 생산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와 같이 음식을 나눠먹자고 뜻을 모았다. 그런데 태국어 강습에 온 태국사람들에게 우리 기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안 된다는 거다. ‘사장님들이 창피하다고 여겨서 옷을 무료로 얻는 바자회에 자기들을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게 신촌이나 정봉동 주변에서 하고, 일 끝나는 밤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김밥이나 간식 정도가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쪽에는 바자회를 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웃 친환경농가의 창고를 빌렸다. 마침 그 창고는 앞마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인들에게 식재료를 파는 트럭이 와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했다.

미리 만나서 옷과 물품을 정리하고, 당일 아침에 모여 대차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위에 옷걸이를 걸었다. 400벌이 넘는 옷을 걸고, 바지는 대차를 뒤집어놓고 정리를 했다. 아이 옷과 그릇 같은 생활용품도 정리했다. 한편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을 테이블도 빌려오고, 한쪽

에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현수막도 걸고, 풍선으로 아치를 만들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6시 반, 바자회 시작하는 시간이다. 몇이나 올까. 이주노동자는, 또 우리 생산자는 몇이나 올까. 몇 사람씩 창고로 들어 오기 시작했다. 신대동 쪽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차에 태워서 온 생산자도 있었다. 오는 대로 큰 비닐봉지를 주면 그 안에 가져가고 싶은 옷을 담았다. 7시가 되자 옷이 동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왔고, 옷은 인기가 좋았다. 11월이었으니 한참 겨울옷이 필요한 때였다.

옷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연화 씨와 사무국장님의 사회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들 마음속에 작은 감동들을 느꼈다. 요 근래 들어 가장 감동스러웠던 일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한살림뿐 아니라 주변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이 모였다. 이날 온 외국인들이 40명, 생산자들이 30명쯤 되었던 것 같다.

며칠 뒤에 한국어 교실이 있었는데, 다들 바자회에서 얻은 옷들을 입고 수업에 왔다. 바자회가 어땠는지 물어보니, 존이라는 친구는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올 때 입었던 옷보다 좋은 옷을 얻었다, 옷이 딱 필요할 때였다.”고 했고, 메이는 “환영하고 반겨줘서 좋았다. 그냥 일꾼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태국인들이 한데 모여서 좋았고, 아이들 옷을 태국에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우리에게 남은 것

처음에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뜻밖에 생산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육을 준비하면서는 외려 심각하고 진지해져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걱정도 진지함도 무거움도 덜

어지고, 그냥 만남이 좋고 알아가는 게 좋아서 끝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다.

2015년 ‘싸와디카 마렌칸’은 우리 지역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생산자들의 평가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무리를 할까 한다.

생산자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기획이었는데, 중간에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흘러갔다, 우리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나 생산자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고, 발을 오가면서 만나는 태국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한살림에서 이주노동자 관련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바자회가 정말 감동스러웠고, 태국말도 더 배우고, 태국에도 가보고 싶다, 외국인들이 농가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고, 한살림 농가에서 일하면 좋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남겼다.

안전수 소장님 강의를 듣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졌다는 한 생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룻’도 우리 집에서 일하고 싶고, 우리도 ‘룻’이랑 계속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그래, 그게 고민인 것이다.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때가 되면 좋겠다.

성과가 있다면 우리 생산자들의 시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처음엔 이주노동자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조차 반대하던 이들이 태국어 강좌, 한글교실, 바자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다.

하나 더, 좀 더 성과를 확대해서 보자면, 우리 생산자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보다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한다. 서로 위해주는 분위기. 구체적으로는 우리 생산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다.

‘싸와디카 마렌칸’을 지켜보고 참여했던 홍진희 생산자는 이런 이야기

를 한다. “좋은 농사, 건강한 유기농산물은 대한민국이든 태국이든 공동의 가치이므로 이주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그저 생산을 위해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올바른 농사를 배워서, 고국으로 돌아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태국의 소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유기농업, 생태농업, 태국농업 등 좀 더 내용 있는 교육과 교류가 진행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랬나. 그이는 이주노동자를 만나면 앞으로 태국으로 돌아가서 농사지를 생각이 있는지를 꼭 묻는다. 농사 현장이 고용의 현장을 넘어 교육의 자리이고, 함께 땅을 살려가는 동료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바람이겠다. 우리 생산자와 이주노동자의 관계 맺기가 그렇게까지 발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소농은 혁명이다』

‘뚝꽃’ 농부 전희식이 꿈꾸는
희망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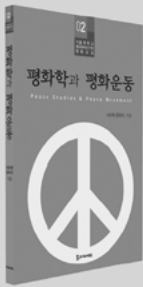
전희식 저 / 296쪽 / 2016년 5월 25일 / 13,000원

인류 문명의 폐해와 우리 농업의 위기에 맞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오래도록 다 같이 잘사는 길이란 무엇인가를 ‘뚝꽃’ 농부 전희식이 한 권의 책으로 오롯하게 풀어냈다. 그간 여러 매체에서 선보인 자연과 생명, 농사와 살림 이야기를 엮은 이 책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이는 부분은 바로 ‘소농’과 ‘농민기본소득제’이다. 한 농가가 여섯 가정을 먹여 살리는 정도의 소농은 자연의 복원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음 문명을 순조로이 이어 가는 ‘소통’의 농사법이다. 나아가 농지를 보전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소농 농민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감안해 이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제이다. 저자는 이 둘의 조합이 가져올 변화를 ‘새로운 문명을 일구는 조용한 혁명’이라 말한다. 땅의 위기, 먹거리의 위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전하는 저자의 철학에서 따스한 온기가 묻어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교실 총서



01 평화와 평화들
- 평화다원주의와 인문학
이찬수 저 / 11,000원



02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보혁 정옥식 저 / 12,000원



03 톨스토이와 평화
이문연 저 / 13,000원



04 평화를 건다:
한국현대사 평화답사기
김태우 저 / 13,500원

농촌에서 농사만 짓나요? 우리는 삶도 짓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속도와 밀도로
새로운 삶의 생태계를 이루는 청년공동체 이야기

우리 손 안의 작은 자유를 지켜 나가고 싶은 지리산 청춘들의 이야기 · 전북 남원 작은자유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다 · 전남 해남 미세마을

‘청년’과 ‘지역’과 ‘일’을 잇다 · 전북 완주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오지의 메리트? 없는 게 메리트! · 경북 청송 창조지역사업단

땅과 함께라면 배부른 소리 나도 할 수 있다 · 충북 제천 농촌공동체연구소

농촌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찾아서 · 충북 괴산 문화학교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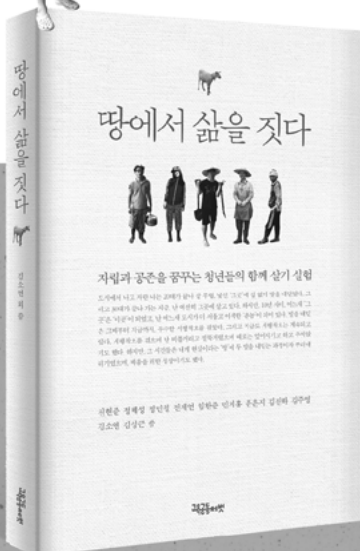
이름 따라 간다더니, 다음번엔 이름을 딴따라로 지을까? · 충남 금산 별에별꼴

좋은 삶을 위해선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 경남 산청 민들레농장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삶 · 강원도 정선 마을에너지공방 ○○

농촌에서 농사만 짓나요? 우리는 꿈도 짓습니다 · 충남 홍성 젊은협업농장

에필로그 · 앞으로 농촌에 올 수많은 청년들에게



자립과 공존을 꿈꾸는
청년들의 함께 살기 실험

땅에서 삶을 짓다

김소연 외 씀 | 15,000원

모심과살림연구소와 도서출판한살림에서 함께 만든 책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서정록 씀,
2014



자본주의를 넘어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씀,
다다 치트라잔아난다 옮김,
2014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그레그 맥레오드 씀,
이인우 옮김,
2012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 한살림선언 다시읽기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도서출판한살림 02-6931-3612

누리집 www.salimstory.net 전자우편 story@hansalim.or.kr 페이스북 [salimstory](https://www.facebook.com/salimstory) 트위터 [@salimstory](https://twitter.com/salimstory)

모심과 살림 7호

탈성장은 기존 사회나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구출하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과 기술의 투입을 통한 성장을 회복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계와 자원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살림운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살림운동은 ‘살림살이 주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협동의 방식으로 집단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자립적 삶과 공생의 길을 찾아 함께 실천해가는 것’을 말한다. 탈성장 사회로의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살림’은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거룩한 활동이자, 살림살이 영역에서 삶의 자립을 지탱하는 토대이며, 지역과 사회를 서로살림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핵심 가치다.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809호
02-6931-3604 mosim@hansalim.or.kr
<http://mosim.or.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값 : 8,000원